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의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함의하는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교류·협력의 성격을 정의하였다. 또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상황 및 국내외 NGO에 의한 지원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그동안의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와 분단국 사례를 고찰하였다.

1995년 수해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제까지 9년여 동안 지속되어왔다. 1996-97년을 정점으로 북한의 위기 상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도 국제사회의 구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위기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장기적인 식량부족으로 영양 결핍현상이 표면화되면서 영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성장부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청소년의 평균 신장은 남자 155cm, 여자 152cm로 한국에 비해 10cm 이상이 작으며 몸무게도 10kg 이상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엔아동기금 보고에 의하면 아동사망률은 1990년에 9.2명이었는데 1998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고,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1990년에 1,000명당 30명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5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의 주요 원인은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영양상태가 불량해서 오는 질병에 대한 유병률 특히,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 현상은 성장을 위

한 영양 요구량이 높은 영유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결핵 환자의 증가, 소아마비, 홍역, 장티푸스, 간염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진료소를 방문하는 어린이 40~50%가 수인성 질환을 앓고 장마시즌에는 60~70%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부터 정부 및 국내의 NGO에 의하여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지원 범위와 물량 또한 확대되고 있다.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주로 식량, 보건 및 의료물품, 그리고 교육기자재 지원과 관련한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고려한 독자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북한청소년들의 교과서 제작을 위한 용지보내기가 시작되었고, 금년에는 통천소학교 건립 지원을 계기로 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련 지원 사업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으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최근의 북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다시 제한됨에 따라 그 실태 또한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과거처럼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를 정치·군사적 대결 구도속에서 조망할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으나, 인도주의적 측면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사회통합 단계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예로 통독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양쪽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직접적 원인이 과거 동서독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에서 초래된 각종의 생활환경 및 가치관의 차이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에 따른 열악한 보건 및 교육환경 등은 통일과정 및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 영

향을 미칠 것임에 자명하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목적을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설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남북 청소년교류를 접근할 때 청소년층이 미래의 통일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세대라는 당위적 측면과 현 시점에서 성사 가능한 교류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우선 고려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남북 청소년교류 실태를 평가¹⁾해 보면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국내적 인프라 구축과 어떤 목적을 갖고 교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가 더욱 명확해 진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체육, 문화·예술, 학술, 방송분야에 견주어 지체되고 있는 청소년교류 활동을 평가할 단계는 지났다. 남북 교류의 주체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분야, 특히 청소년층이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 구상을 갖는 통일과정으로서의 교류문제로 조망해보면 여타 사회문화분야 속에서의 청소년 교류 역시 필요하다. 남북 교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속적 교류를 통한 북한주민의 일상과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때, 그러

1) 그동안 추진된 남북 청소년교류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분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② 국내의 청소년관련 NGO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③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 ④ 청소년교류 파트너로서의 북한 내 민간단체가 부재 한다. ⑤ 한총련 등과 같은 일부 불법·이적단체들의 불법적·비공식적 접촉이 대 국민 인식을 악화시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인식 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⑥ 지금까지 남북이 제의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가 항상 정치적인 색채를 띤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는, 소극적·미시적인 제안들로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⑦ 남북 청소년교류의 주체인 정부와 청소년, 그리고 북한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⑧ 제3국을 통한 제한적·간헐적인 접촉이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환경을 위축하고 있다; 등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길은배 외(2000). NGO를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를 참조.

한 교류가 북한청소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가치관의 변화에 뒤 이어 행동의 변화가 뒤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한의 경우는 행동이 먼저 변화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포장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념의 힘에 의해 지탱되는 북한사회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성인보다 청소년층에서 쉽게 발견된다. 남한 청소년들도 특정 사건에 보이는 태도에서 가치관의 변화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향을 자주 볼 수 있고, 그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일탈의 우려와 청소년지도의 어려움이 쟁점화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단순한 구호물자 지원보다는 직간접적 형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간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의 경제적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적대적 의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의 문제가 북한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결국,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협력의 문제는 장기적 구상을 갖는 통일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 하였다. 둘째,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진단하였다. 셋째,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태와 그간에 추진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및 동서독의 교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부침을 거듭한 그동안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환경을 규율하는 법·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도적 지원 참여 NGO의 활동 유형은 크게 대한적십자사를 단일 창구로 한 NGO와 독자적 창구를 마련하여 추진한 NGO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라는 포괄적 구도 속에서 적대적 협력의 심화가 명실상부한 평화공존으로 진전되어갈 수 있는 종합

적, 단계적 전략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의 동학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접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 분석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발생 원인은 1990년대 중반의 경제 상황 악화 및 자연재해 시기와 2002년의 경제개혁조치 이후의 상황, 그리고 2003년의 북핵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나타난 식량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인권에 기초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를 법적, 사회경제적, 정신적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청소년의 유형별 인도적 위기 실태를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진단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3)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태 및 교류·협력 사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사회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국내외 NGO의 인도적 지원 동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사회의 쟁점으로 등장한 남남갈등 현상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추진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와 「헌법」,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 등 남북 교류 환경을 규율하는 관련 법의 상충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교류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 실태를 사례 연구 하였다.

(4)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세부추진 방안으로 “참여 기제 개발, 남북 청소년 교류의 단계-우선순위별 아젠다 수립,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령 정비, 사이버 청소년 교류 추진, 남북청소년교류단체협의회(가칭) 설립,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중국 조선족과의 청소년 교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관련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국내외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굿네이버스, 좋은벗들, 유니세프,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답기운동본부 등 북한지역에서 구호 및 개발구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민간단체의 기관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사례 연구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를 사례 연구 하였다.

(3) 심층면접 조사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하였다.

(4) 현지 출장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NGO의 구호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 투명성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 방문을 하였다. 특히, 현지 방문 기간 동안 북한청소년들의 영양 및 보건, 의료 실태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육아원, 소학교, 중학교 등을 방문하였고, 현지인들과의 문답식 면담도 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북한청소년 및 주민 등의 인도적 위기 실태와 관련한 각종 통계 수치는 정확도에서 매우 취약하다. 북한은 각종의 사회통계 자료를 외부 세계에 공개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자체적인 조사도 막아 왔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이 연구의 III장에서 사용한 「하나원」소재 북한이탈 청소년 20명 대상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녀비율 및 탈북 이후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접 하였으나, 여전히 일반화의 문제는 남는다.

셋째,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를 사례 연구한 결과,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성이 나타나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욱이 유사 사례로 동티모르, 예멘 등의 국가 경험을 사전 조사하였으나, 동서독 사례보다 적용도가 떨어져 제외한 결과 사례 연구가 1건으로 제한되었다.

Ⅱ.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Ⅱ

1. 인도적 지원의 이론적 기초
2.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의
상관성
3. 최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변화 특성

II.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부침과 참여 NGO의 활동 유형을 고찰하여 정부-NGO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북관계 일반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접근 실태와 최근 남북청소년 교류·협력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인도적 지원의 이론적 기초

1)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범위

인도주의는 정치, 이념, 인종, 종교 등을 떠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인도주의가 국제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확인으로 인간의 가치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²⁾

2) 인도적 지원이 수혜국의 사회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왔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지원의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등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및 목표가 준수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적 지원 환경에 있어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형평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일반적인 국제지원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국제원조체계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지원체계는 냉전시대 동안 발전된 것으로, 강대국들이 재정지원과 식량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³⁾를 이념이 다른 국가에게는 제한함으로써 명백한 이념 대립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제원조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공적개발원조의 목표 및 전략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이끌어 온 두 가지 기본가정은 자유민주정치체제 하에서 진보적 발전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근대화이론과 분쟁관련 위기상

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사회구조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2)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경제협력의 형태

형 태	내 용
공적개발원조 (ODA)	① 이국간 ┌ 증여(무상자금협력) └ 일반무상식량원조, 긴급원조 등 └ 기술협력 └ 연수생교육, 전문가파견, 기자재공여 등 └ 직접차관 └ 개발사업차관, 물자차관, 기자재차관 등 ② 다국간 : 국제기구(IBRD, ADB, IDB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분담금 등
기타공적자금 (OOF)	① 이국간 :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② 다국간 : 국제기구에 대한 융자 등
민간자금 (PF)	① 직접투자 ② 이국간 간접투자 ③ 다국간 간접투자 ④ 수출신용
비정부기구	①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증여

황과 같은 재난은 일시적인 혼란상황으로 혼란이 수습되면 곧바로 정상적인 발전이 재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지원체계에서 사적 영역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기는 했지만, 공적개발원조가 아직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혜국 내 강력한 정부조직의 존재 및 동의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본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저개발국의 빈곤뿐만 아니라, 탈냉전 이후 분쟁지역의 확대로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인도적 위기상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재난을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국제원조에서 재난지역에 대한 응급구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 되었고 국제구호체계도 발전하게 되었다.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참여의 주체가 개인에서부터 비정부기구, 개별국의 원조전담기구, 국제기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구호체계의 주요한 특징은 지원기구들의 규정과 재정절차에 있어서 응급구호와 개발지원의 분리, 지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기구들의 정치 및 군사기관들과의 분리 시도, 주권 국가의 지리적·정치적 국경의 중요성 부각으로 구호활동을 허락하는 현지국의 의지에 의한 인도적 활동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인도적 위기상황 발생시 응급구호에 조건을 부가하지 않음으로써 지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책임소재 기관을 규정하여 수혜자의 소요산정과 자원배분을 수혜국의 정부가 맡도록 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구호체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즉, 탈냉전 이후 분쟁으

로 인한 인도적 위기상황이 급증하면서 지원사업의 중립성과 개별국의 주권보호에 대한 관심보다 인권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권리와 의무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구호체계를 국제현실에 맞게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구호와 개발지원을 연계하게 되었다. 이는 재난관리법을 원용한 것으로, 재난의 예방, 사전준비, 피해완화, 복구 등의 절차를 참고로 하여 인도적 지원이 단순한 사후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개발개념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변화되었다.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개발지원이 주로 빈곤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자본의 제약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자원의 이전으로 간주됨에 따라, 지원은 주로 대규모의 자본(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대규모의 재정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⁵⁾ 1970년대 초에는 빈곤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지원의 대상이 다양화되었다. 초기에는 농업과 총체적인 농촌개발, 후에는 인구,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기에는 경제정책 개혁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조건부의 구조전환 차관이 도입되게 되었다. 개발전략과 지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원의 영

4) 대외원조는 흔히 일방이 조연을 전달하는 ‘전달벨트(transmission belt)’로 간주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부국의 정책으로 인한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s)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은 이후 각 단계에서의 기부자와 수혜자간의 집행과 교류의 의제, 이해관계, 상호작용에 의해 변형되며 상호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는 초기 계획과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1950년대와 1960년대 경제이론은 자본의 축적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경제개발을 빈곤퇴치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대규모 공경제를 시장 및 사경제영역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방안으로 규정하였으며, 1960년대 말 성장의 속도가 매우 더디자, 기존의 빈곤퇴치 방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게 되었다.

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대개 지원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부국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심도 있는 사안이 논의되면서, 지원이 수혜국의 성장과 개발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지원의 영향력에 대한 우파의 비판은 대규모의 지원이 국가기관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일한 원동력인 시장 및 사적경제 영역의 발전에 오히려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대외 지원이 반시장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관료제와 비효율적인 공경제⁶⁾ 확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반면, 좌파는 지원정책과 지원의 전제조건들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지원기구들의 개혁조치가 빈곤과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원이 개발에 미친 영향력은 좌파나 우파가 제기하는 것과는 달리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정부 대북정책과 인도적 지원의 역학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⁷⁾

6)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경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곧, 재정을 일컫는다.

인도적 지원 원칙⁸⁾은 국제적으로도 지원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식량지원과 농업생산성 향상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보건·의료분야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UN기구 등을 통한 대북지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

-
- 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실장은 '17대 국회에서의 남북관계 법·제도 정비 방안' 주제 정책토론회(2004년 6월 22일)에서 대북지원사업의 규모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적개발원조 방식을 통해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이 현재 직면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 복구 및 개발과 동시에 진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대북지원 사업은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추진돼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역시 그 본질상 대북 공적개발원조 기금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통일부 산하에 전문적인 대북원조기관인 '남북협력재단'(가칭)을 설립해 ① 대북지원에 대한 통합적 계획의 수립과 조정, ②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긴급 재난구호, ③ 북한의 개발사업 지원, ④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⑤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대북 '공적개발원조' 개념 도입해야<국회토론회>", <<http://www.yonhapnews.co.kr/news/20040622/221700000020040622115105K0.html>>. (2004. 6. 22).
- 8) 인도주의적 원칙(humanitarian principles)은 대북지원 참여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24개 단체가 동의하였으며, ① 소요산정(needs assessment)에 따라 전반적인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도적 지원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전달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③ 위기상황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④ 접근이 허용되는 지역에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주민들의 인도적 요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지역단위의 역량 형성을 지원 한다; ⑦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집행단계에 수혜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⑧ 국제실무요원의 충분한 역량 강화를 모색 한다; ⑨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보건 및 신변안전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다.⁹⁾ 아울러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차원과 상호보완 구도 하에서 자율적인 추진을 권장하되 농업분야,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지원 등 전문분야별로 특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1995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1995년 지원한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¹⁰⁾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해 왔다. 정부는 2003년에도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다. 당초 6월부터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등에서 발생한 SARS(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지원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7월부터 9일간 전달되었다. 옥수수 포대에는 우리 정부가 WFP를

9)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및 개발 격차로 인해 세계화의 조류에 동참하지 못하고 빈곤과 기아 질병으로 소외감을 갖는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의 공적 자금을 통한 개발지원으로 세계 경제발전과 평화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대북지원시스템을 개선해 적용하는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은 식량원조와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각 분야의 남북협력 활성화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사업으로서 이산가족교류, 사회문화협력과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등이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와 차이가 있다.

10)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한 농업성 농산국장의 담화(2000. 9. 25)를 통해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알곡 손실량이 도합 140여만톤에 달한다고 발표하여 식량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00년 12월 25일에는 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올해에도 세계식량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리 인민은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잊지 않을 것이다.”

통해 지원하는 물자임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말라리아 발병확산이 심각히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이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2001년, 2002년 말라리아 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3년에도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을 지속하여 30만 명분에 해당되는 약품과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2003년 11월 상해에서 개최된 WHO 말라리아관리워크숍에 참석한 북측관계자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측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등도 지원하였다.

정부는 긴급 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비료·종자·농약지원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지원의 효과성·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한 비료 11.5만톤 및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톤 등 총 15.5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20만톤, 2001년에 20만톤, 2002년에 30만톤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3년에도 당국차원에서 총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북한은 적십자사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2003년 4월 17일 인도주의 정신에서 쌀과 비료 제공을 요청해왔으며, 제10차 남북 장관급회담(4.27-29)에서도 재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복합비료 16

만톤, 요소비료 2만 8천톤, 유안비료 1만 2천톤 등 20만톤을 남북적십자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전달하였다. 북한적십자회는 7월 25일 우리측에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여 왔다.

또한, 북한적십자회가 2003년 9월 7일 다시 가을철 비료 추가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는 10만톤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북합비료 8만 1천톤, 요소비료 1만 4천톤, 유안비료 5천톤을 남북적십자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11월에 전달하였다. 이에 북한적십자회는 12월 5일 지원에 대해 감사표시를 전달해 왔다.

<표 II-1>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2003.12.31 기준)

기 간	지원 규모	지 원 내 역
1995년	2억 3,200만달러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1996년	305만달러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1997년	2,667만달러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1998년	1,100만달러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1999년	2,825만달러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정부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 462억원
2000년	7,863만달러	○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 944억원(1\$당 1,200원 적용)
2001년	7,045만달러	○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353만달러/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4,921만달러/638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달러/223억원) ○ WHO를 통해 말라리아방제 지원(46억원/6억원) * 913억원(1\$당 1,296원 적용)
2002년	8,375만달러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달러/234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59만달러/8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달러/832억원)
2003년	8,702만달러	○ 비료 30만톤 지원(6,698만달러/836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619만달러/191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6만달러/8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50만달러/6억원)

이러한 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정부가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의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민간의 요청을 반영하여 민간 대북지원 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1995년 9월 14일 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허용하면서 대북지원 창구는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할 것과 민간모금의 자체를 요청하였다. 또한 민간의 쌀 및 현금지원, 개별기업체·언론사 참여, 대북 직접지원, 불특정 다수 대상 모금활동을 제한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당국과의 대화를 통한 직접지원을 모색하면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초기에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정보부족, 국내의 여론형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의 대북지원활동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원이 북한당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민간단체의 모금운동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확대 허용조치 발표를 통해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의 지원참여와 외국산 쌀 지원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대북지원창구는 대한적십자사 단일화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활동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였다.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견지에서 기부금품의 옥내 모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언론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적극적인 광고를 제외한 모집내역에 관한 보도만 허용하였다.

대북지원이 보다 활성화 된 것도 김대중 정부의 수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1998년 3월 18일 남북주민간 접촉증대 및 민간단체의 희망을 고려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민간의 대북지원 참여 및 모금활동 확대 허용, 이산가족문제 해결 계기 마련을 위한 남북적십자간 지원구도 유지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진전에 따른 대북지원 창구 확대방안 강구를 포함한 대북지원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특히, 1998년 3월 18일과 9월 18일, 1999년 2월 10일과 10월 21일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는 민간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¹¹⁾ 이

11)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 1998. 3.18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 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에 따라, 1998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민간 관계자의 구호물자 분배확인 및 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방북이 성사되었으며,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4.25) 행사 등에 있어 언론사의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이 승인된 바 있다. 또한, 1999년에는 창구다원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 명목의 대북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조치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 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1년에는 민간단체 독자창구가 19개로 증가했으며, 이를 통한 지원 규모도 4,292만 달러(558억원)로 크게 증가했다(통일부, 2002 : 212-214).

또한, 1999년 10월 21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남북협력기금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한해 동안 한국JTS 등 8개 단체의 9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결정되었다. 분야별로는 농업개발분야,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 등이다. 2001년도에는 사업분야가 보다 다양화되어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의 씨감자 지원사업,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영

-
-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성 모금행사 지원
 - o 1998. 9.18 :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
 - o 1999. 2.10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한적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
 - 기타 단체 및 개인은 한적창구를 통해 지원
 - o 1999. 10.21 :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 발표
 -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
 - *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부고시, 1999.10.27 제정, 2001.2.10 개정)

양지원사업,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금강국수공장 및 생필품 지원, 평화의 숲 양묘장 지원사업 등 농업협력사업, 보건의료사업, 일반구호사업, 환경지원 사업 등의 사업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바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액은 2001년 12월 기준 30억 3천만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대북지원의 증가 추이에 따라 민간단체 관계자 방북도 확대되어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통일부, 2002 : 214-215).

3) 인도적 지원 참여 NGO의 활동 유형 분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NGO의 참여가 제약된데 비해서 대북지원분야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업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산업 전반의 침체로 농업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995년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는 북한의 구조적인 식량부족을 극도로 악화시키게 되었다. 1995년 8월 수해발생으로 북한이 유엔대표부에 긴급구호를 요청함에 따라 유엔인도지원국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 9월 대북지원관련 유엔기구 공동명의로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 내에서도 대북지원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대북포용정책을 계기로 활성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통일관련 NGO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인도적 대북지원분야이다. 이에 따라 아직 정부차원의 대

북지원에는 크게 못 미치나 NGO의 대북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각종 종교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NGO가 대북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북지원분야에서의 NGO의 활동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증가하였다. 대북지원 NGO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규제조치 완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표 II-2>참조).

<표 II-2>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 조치경과

일 자	주 요 내 용
1995.9.14	○대한적십자사 창구 단일화 방침 발표 - 쌀 지원, 개별기업체·언론사 참여, 대북직접지원, 불특정 다수 대상 모금 제한
1997.3.31	○대북지원 참여범위 및 품목 확대허용 조치 - 기업체의 경제단체를 통한 지원 및 쌀(외국산) 허용
1998.3.18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monitoring 목적의 방북 허용 - 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event성 행사 허용
1998.4.25	○ARS 방식을 이용한 대북지원 모금(사안별) 허용
1998.9.18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수송·모니터링 직접 수행 - 대한적십자사는 포장(적십자 표시) 및 대북통보 담당
1999.2.10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민간단체 명의 독자적인 대북직접지원 허용
1999.10.27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자료: 이금순, 2000 참조.

NGO활동이 대북지원과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야도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한 도서교류 캠페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시켰다.¹²⁾ 또한, NGO간의 국제적 연대도 확대되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과 일본의 3자여성회담이 베이징에서 개막되어 남북과 일본의 NGO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으며,¹³⁾ 1998년 10월 발기된 「동북아 산림포럼」도 북한과 중국 등의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NGO간의 국제적 연대를 추구했다.¹⁴⁾ 이외에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북지원 활동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제공되기 시작

- 1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8년 9월 한국출판협동조합, 경인여자대학,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남북한 도서교류 캠페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북한에 전문 과학도서를 비롯한 각종 서적을 보내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를 북한측 파트너로 한 이 사업은 11월 기준 3만권이 넘는 도서가 접수되었다. 1999년 1월 말경 인천-남포간 해운 편으로 북한 측에 전달되었다. 또한, 북한측에 요청한 도서는 우리측 도서 접수시 학계 출판계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도서들로 목록이 미리 북한 측에 전달되었다. 일방적 교류와 달리 남북이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의 학술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로서 향후 도서출판교류, 학문 및 정보의 정기적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8. 12. 1 : 2).
- 13) 1998년 10월 9일 개막된 이 회의는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제안으로 실현되었으며,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에서 6명, 북한측에서 8명, 일본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부인연락회」에서 7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단독 안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남북한 인사들이 한데 모이는 이 회담에서 대표들은 11일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인정해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 4개항의 항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3자회담 대표들은 앞으로 서명운동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결의한 「2000년 여성전범 국제법정」에 참여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연합통신, 1998. 10. 11).
- 14)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이 주축인 「동북아 산림포럼」이 10월 9일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동북아 산림포럼」은 중국과 몽골,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는 국제적 공동전선 구축을 목표로 유엔개발계획, 북경대 환경연구소, 일본, 홍콩, 대만 등의 국제식목단체들과 대상 지역에 대한 식목 국제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산림포럼」에는 환경운동단체관계자, 교수, 임업분야관계자, 언론계 인사 등이 참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8. 10. 10).

하면서 관련 NGO의 활동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면서 정부는 이들 민간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단체에게 ①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②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③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방북결과보고서 등을 요청하였다.¹⁵⁾ 다만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및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요건 등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규모 식량지원은 기관급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추적과 감시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북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NGO들은 다음과 같다.

<표 II-3> 대북지원 관련 NGO 현황

단체명	설립목적 (주요영역)	기본 연혁	관련 활동영역	홈페이지
국제옥수수재단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1998	·북한 슈퍼옥수수 개발프로젝트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	http://www.icf.or.kr
군네이버스	·소외받는 해외 및 북한 주민 지원	1995	·의료지원 ·목장운영	http://www.gni.or.kr

15)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기적 해결을 주었지만 지원된 식량의 전용을 통해 식량이 장마당에서 거래되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원의 투명성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패한 관료 등을 통해 장마당에 거래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탈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남북나눔 운동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	1997	·국수공장운영 ·식량제공 ·아동용 피복지원	http://www.sharing.net/
남북농업 발전협력 연대	·북한 농업발전 에 기여	1998	·씨감자 제공 ·농업 협조	http://www.potato.or.kr/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어린이 보호환 동에 기여	1996	·식품 및 의약품 지 원 사업	http://www.okedongmu.or.kr
두레마을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	1997	·북한 두레마을 설 립 추진 ·복합비료 및 생필 품 무상지원과 아 동학원 지원	http://www.doorae.or.kr
새마을 운동중앙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북한주 민 지원	1998	·농촌현대화지원 ·농업장비지원	http://www.saemaul.com/center/
선한사람들	·체계적인 봉사 ·선교활동에 기여	1993	·북한어린이 급식지원 ·옥수수씨앗 및 비료지원	http://www.goodpeople.or.kr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북한주민의 생활지원	1996	·식품지원 ·농업지원	http://www.ksm.or.kr/
원불교청수 나눔실천회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	1995	·식량지원 ·의류지원	http://www.motherpark.org/index.html
월드비전	·기독교 정신으 로 북한지원	1994	·국수공장운영 ·씨감자제공 ·채소재배사업	http://www.worldvision.or.kr/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북한아동지원	1996	·북한영양실태조사 ·응급구조 지원	http://www.unicef.or.kr/
유진벨재단	·의료 지원	1995	·결핵퇴치운동	http://www.eugenebell.org/
조국평화 통일 불교협회	·남북교류협력의 개척을 통한 지 역/단체간 교류 연대에 기여	1992	·북한동포돕기 사 업을 통한 남북불 교교류와 협력사업 ·금강국수공장후원	http://www.bubtanet.org
좋은벗들	·범불교적으 로 북한돕기운 동 추진	1996	·감자제공 ·의류지원 ·비료지원	http://www.jungto.org/gf/

한국건강 관리협회	·북한주민 건강 개선	1998	·기생충 구충사업 지원	http://www.kah.or.kr/
한국기아 대책기구	·북한식량난 해소에 기여	1994	·의료장비 지원 ·분유 제공 ·비료공장지원 ·염소제공	http://www.kfhi.or.kr/
한국복지 재단	·북한복지지원	1997	·육아관련 지원 ·의료지원	http://www.kwf.or.kr/
한국 제티에스	·국제적인 아동 지원활동	1997	·식량지원 ·아동영양식지원 ·물품지원	http://www.jungto.org/jts/kor.html
대한사회 복지회 사랑의 손길 펴기	·미혼모·어린이 의 보호에 이 바치	2001	·북한어린이 후원 ·북한내 아동병원 및 육아원 후원	http://www.sws.or.kr

※ 출처: 각 단체의 ‘홈페이지’ 참조.

(1)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한 NGO의 대북지원

정부가 1995년 9월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1997년 3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NGO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NGO가 늘어남에 따라 1997년 4월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제의하였다.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¹⁶⁾ 이로써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16) 이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 지역 확대, 지원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그 동안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어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7.25)하고 1차분 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접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베이징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3.27)를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19차례(1995.11~1997.9)에 걸쳐 496만 달러(39.7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남북적십자간 제1차 합의서 채택 이후 한적 1차 지원(1997.6~7)으로 옥수수 기준 53,841톤의 식량이 북한에 전달되었다. 이어 남북적십자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한적 2차지원(1997.8~10) 분으로 옥수수 52,888톤의 구호물자를 제공하였고,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 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다. 제3차 합의서 채택으로 한적 3차지원(1998.4~6)이 추진되어 935만 달러 상당의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3차분 추가 지원(1998.9~12) 물량으로 1,133만 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 분유 등이 지원되었다. 특히,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탁한 한우 1,001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6.16, 10.27)되었다.

1999년 3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비료지원 국민모금계

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그 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는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획」 발표에 따라 1,027만 달러(123억원) 상당의 비료지원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재원으로 1999년 3~6월에 걸쳐 비료 4만여 톤을 지원하였다. 이밖에 20여개 NGO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281만 달러(33.7억원) 상당의 물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0년에도 「3차분 추가 지원물량」이 계속 지원되었으며, 16개 NGO가 참여하여 94만 달러(113억) 상당의 의약품, 한우, 감귤, 농자재, 식량 등을 지원하였다. 2001년에는 사과, 배, 당근 등 농수산물과 못자리용 비닐, 의약품 등 286억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되었고, 2002년에는 9월까지 11억원 상당의 물품이 한적을 통해 북한에 제공되었다. 따라서 1995년 11월 이후 2002년 9월말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민간지원 총액 19,104만 달러(2,330억원)중 8,475만 달러(1,039억원)에 달한다.

(2) 독자 창구를 통한 NGO의 대북지원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주민간 접촉 증대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4차례(1998.3.18, 1998.9.18, 1999.2.10, 1999.10.21)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였다.¹⁷⁾ 이에 따

17)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98년 3월 18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는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 확인 목적의 방북허용,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성 모금행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② 1998년 9월 18일의 조치로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의 개별지원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③ 1999년 2월 10일에는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를 취하였다.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한적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하고 기타 단체 및 개인은 한적창구를 통해 지원하

라 1998년 거래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NGO 관계자의 구호물자 분배확인 및 대북지원 협의를 위한 방북이 성사되었으며,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4.25) 행사 등에 있어 언론사의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1999년에는 NGO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구다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NGO 명목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소량·적기지원이 가능하여 북한 농업개발 지원 등의 대북지원사업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절차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 등 10개 NGO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6.5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독자창구를 통한 NGO 대북지원은 2000년에는 13개 단체 307.4억원, 2001년에는 19개 단체 558억원(4,292만 달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 9월까지 독자창구를 통한 NGO의 대북지원 실적은 359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II-4> 민간차원 대북지원 내역(2003.12.31 기준)

기 간	규 모	내 역
'95.11~'97.5	496만달러 (39.7억원)	○ 식량 10,638톤, 담요, 라면, 양말 등 * 국제적십자연맹 경유
'97.6~'97.7	850만달러 (75.7억원)	○ 한적창구 : 식량 43,511톤, 비료 2,000톤, 라면 15만 상자
'97.8~'97.10	890만달러 (81억원)	○ 한적창구 : 식량 38,674톤, 식용유 27만 리터, 영양제 등

도록 하였다. ④ 1999년 10월 21일에는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지원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규정」(통일부고시, 1999.10.27 제정, 2001.2.10 개정)을 마련하였다.

기 간	규 모	내 역
1998.3	17만달러 (28억원)	○ 한적창구 : 비료 800톤
'98.4~'98.6	985만달러 (130.9억원)	○ 식량 30,253톤, 식용유 26만리터, 한우 500두, 비료, 소금 등 * 대한적십자사 3차지원
'98.9~'98.12	1,133만달러 (141.6억원)	○ 식량 45,741톤, 소 701두, 식용유 35만리터, 설탕, 의약품 등 * 대한적십자사 3차 추가지원
1999년도	1,863만달러 (223.6억원)	○ 한적창구 : 식량 7,196톤, 비료 4만톤, 씨감자, 식용유, 라면 등 ○ 독자창구 : 식량 5,051톤, 비료 1,484톤, 젓염소 450두, 의약품 등
2000년도	3,513만달러 (421억원)	○ 한적창구 : 16개 단체 113억 2,992만원 · 식량, 비료, 한우 500두,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 3,871만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1년도	6,494만달러 (844억원)	○ 한적창구 : 286억원 · 식량 14,175톤, 비닐 552톤, 내의 159만벌,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9개 단체 558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2년도	5,117만달러 (641억원)	○ 한적창구 : 90억원 · 동내의 118만벌, 라면 39만개, 분유, 의약품, 의류 등 ○ 독자창구 : 25개 단체 551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3년도	7,061만달러 (847억원)	○ 한적창구 : 70억원 · 동내의 70만벌, 잣나무묘목 30만주, 한우 108두, 종이 200톤, 의약품, 의류 등 생필품, 밀가루, 농자재 등 ○ 독자창구 : 29개 단체 777억원 ·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구충제·영양제 등 의약품, 제약설비 및 원료의약품, 농기계 및 농자재, 유가공설비 및 축산용품, 건축용 자재 장비, 밀가루, 분유, 설탕,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등
계	28,369만달러 (3,448억원)	

정부는 대북지원과 관련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농업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1999.10.21)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부고시)을 제정(1999.10.27)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도에는 한국JTS 등 8개 NGO 단체 9개 사업에 대해 54.1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다. 내용별로는 농업개발분야 5개 사업 27억원, 보건의료분야 2개 사업 16.5억원, 취약계층지원 2개 사업 10.6억원 등이다.

2001년에는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의 씨감자 지원사업,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영양지원사업,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금강국수공장 및 생필품 지원, 평화의숲 양묘장 지원사업 등 농업협력, 보건의료, 일반구호, 환경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총 75.7억원의 기금지원이 결정되었다. 동 기금 지원 사업의 사업비 중 남북협력기금은 2001년 12월 현재 30.3억원이 집행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NGO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양적 확대를 가져오는 등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북지원의 내용은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본격화되고 있고,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민간차원 지원사업은 물자지원 이외에도 북한 측과의 공동생산 및 기술전수 등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생력 회복지원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창구를 통한 NGO의 대북지원은 분배 투명성 확보와 단체별로 특화된 전문적 지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NGO 단체 관계자 방북도 꾸준히 확대되어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사업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NGO 지원사업 후원자들의 단체방북 사례가 증대하여 10월까지 73건 1,153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2.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의 상관성

1)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영향력

최근까지의 남북관계는 이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결하였던 “적대적 대결”(antagonistische Konfrontation)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서로 간에 체제비난과 유형적, 무형적인 적대성이 표출되었던 반면, 교류나 협력은 철저히 단절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정경분리원칙 아래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이념적, 정치·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대립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사회·문화적으로는 부분적 교류와 협력이 형성되는 “적대적 협력”(antagonis-tische Kooperation)의 “초입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잠수정의 침투, 서해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적대적인 대립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은 남북한 경협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단이나 체육·종교단체의 방북이 실현되는 등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교류

18) 2002년 북한을 방문한 대북지원 관련 NGO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5월 255명), 한민족복지재단(6월 300명), 굿네이버스(구 한국이웃사랑회)(6월 말 39명, 10.1~10.5 40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10.2~10.9 103명) 등이다.

와 협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적대적 협력이 서로간의 이해에 의해 확대되고 심화될 경우에는 이념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남북관계에 도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이념적으로는 상이하더라도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의 상호간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짐은 물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부분적으로 합의하여 당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완화되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평화공존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남북간에 커다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염원하는 민족통일의 궁극적 형태인 “1민족 1국가 1체제”로 향하는 도정에서 “1민족 2국가 2체제” 형식의 “남북연합”이 가시화되어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남북연합의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기는 하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 영역에서 남북한 상호간에 통합의 수준이 서서히 높아지는 가운데 민족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진전구도에 더하여 남북관계에 국제적 차원이 고려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상태를 청산하는 “평화의 회복”(소극적 평화)과 평화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유지”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적극적 평화)이다.¹⁹⁾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평

19) “평화”의 개념은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력적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소극적 개념』과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력적 충돌이 존재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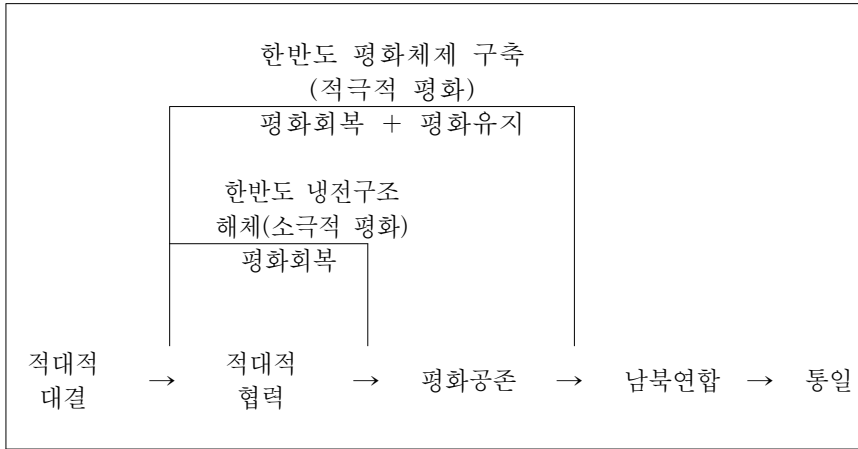
화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협력”단계에서 “평화공존”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으로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포함함은 물론 평화의 유지를 항구화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평화공존” 단계에서 “남북연합” 단계로 진전시키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²⁰⁾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대는 [그림 II-1]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손기웅, 2001 : 8-12 참조).

않을 뿐만 아니라, 무력적 충돌의 원인이 되는 분쟁요소가 해소되고, 새로운 분쟁의 발생시 무력적 충돌로 표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상태”의 「적극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 20) 전쟁에서 평화로의 다양한 단계를 아래 <표 II-5>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때 분쟁이란 “엇글어져 다투는 것”으로 정의되며 전쟁, 승부다툼, 논쟁을 포괄한다. 전쟁은 “무력에 의한 국가와 국가간의 투쟁”으로서 가장 강도가 강한 상태의 분쟁이며, 승부다툼은 합리적인 통제를 전제로 하는 분쟁이다. 논쟁은 어떤 쟁점을 두고 상대방을 비판·공격하고 논리적으로 공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분쟁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까지 한반도는(국지적·제한적) 전쟁, 승부다툼, 논쟁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분쟁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의 내용은 무력적 충돌 즉, 국지적·제한적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의 회복”(Restoration of Peace)이란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전쟁 상태에서 승부다툼 상태로, 승부다툼 상태에서 논쟁 상태로, 논쟁 상태에서 분쟁이 해소되고 평화가 유지·관리되는 “평화의 회복 + 평화의 유지”(Maintenance of Peace)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족분단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민족의 통일을 지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① 한반도 평화의 회복을 위한 체제 구성 방안, ② 한반도 평화의 유지를 위한 체제 구성 방안, ③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체제 구성 방안 등을 포괄한다.

<표 II-5> 전쟁에서 평화로의 스펙트럼

분쟁(Conflict)			평화 (Peace)
전쟁 (Fights)	승부다툼 (Games)	논쟁 (Debates)	
소극적 평화의 대상			
← 적극적 평화의 대상 →			



[그림 II-1] 남북관계 진전구도

따라서 적대적 협력이 막 움트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힘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켜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이 협력하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 냉전구조가 지속되는 한 적대적 협력이 진정한 평화공존으로 진전되기에는 대내·외적 차원에서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남북한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으로 국내·외적 수준에서, 남북한관계 및 다자적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포괄적 구도 내에서 적대적 협력의 심화가 명실상부한 평화공존으로 진전되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도 단계적인 전략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남북한 교류·협력의 폭과 규모를 더욱 심화, 활성화시켜

나가는 국가적 노력 가운데 특히,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²¹⁾ 정치적 통합이 주로 권력 배분이나 정치체제의 조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회문화적 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가느냐 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가는 과정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분단 상태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분단 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과정적 측면을 중요시 한다.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정치·경제 등 다른 분야들에 비해 당사자끼리의 논의가 가능하여 저변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²²⁾

따라서 평화공존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그 기반을 닦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998.5.12)의 제3조는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1) 현재 남과 북의 문화는 다르다. 그것은 다른 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외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남한 문화에 비해 북한 문화가 혹은 북한 문화에 비해 남한 문화가 어떤 기준에 비추어 더 이질화되었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통일은 분단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아니다.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한민족(韓民族)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질화된 문화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명제는 자칫 동질적 문화라는 절대기준을 정해놓고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이 가져올 역동성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이질성의 확인이 우선이다. 그런 후에 융합을 거쳐 새로운 통일된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북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통일에서, 즉 통일된 남북이 하나의 국가단위를 이루고 그 바탕 위에서 형성되는 통일문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

22) 통일은 설사 제도적 통합(체제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이념적으로 같은 반열(이념통합)에 서있지 않으면 겉모양만의 통일이기 쉬우며, 통일이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생활차이를 극복(생활통합)함은 물론 사회심리적 간극의 극복(가치통합)까지 두루 포괄해야 의미를 가지게 된다.

2)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의 접근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독자창구로 대북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10월 21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자 이를 근거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199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03년도의 경우 민간의 대북지원은 7,061만불로, 2002년 5,117만불에 비해 38% 증가하였으며, 지원분야에서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민간단체의 경우 지원분야가 일반구호(4,537만불)로 64%를 차지하고, 보건의료(1,851만불)로 26%, 농업복구(707만불)로 10%에 그치고 있다. 지원방식도 대한적십자사 창구보다는 민간단체의 독자 창구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의 방북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유엔 인도지원국을 중심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지속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과 동시에 북한의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개발구호사업을 병행하여 왔다. 우리 정부 및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응급구호 및 개발지원 이외에도 대북지원 과정에서 남북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여 이를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목표하여 왔다. 어쨌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남한 그리고 북한이 상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대북사업이 확대되면서, 인도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요원 수도 100여명을 넘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기구나 단체와 달리 인도적 원칙보다는 동포애를 우선시하는 남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간의 체제대결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남측과의 관계 설정에 나름대로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으나, 남측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요구를 지원물자 확보 및 대남정책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민간 지원단체의 후원자들을 대규모로 초청하기도 하였다.²³⁾ 이와 같이 대규모 방북단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장 방문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보다는 후원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왔다. 또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현장 모니터링과 관계없는 평양 및 묘향산 등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이 병행되었다.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소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련 현장에 대한 방문이 가능해져 중간관료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평가들을 바탕으로 한 현장방문은 아니었지만, 지원성 협력사업의 조정과정에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쌍방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당한 상호신뢰가 형성될 수 있었다. 물론, 사업진행 초기에는 사업의 중단을 가져올 만큼 중대한 갈등도 야기되었다. 한 예로 국내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가 대안목장에 보낸 젖소가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북측 관료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남측이 의도적으로 젖소에게 비닐과 밧줄을 먹여 죽이려고 했다고 주장하였다(이일하·신석호, 2003 : 66-74). 이는 북한이 기술이 없어 소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고 비방하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며,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폐사의 원인이 정확히

23) 일부단체 후원자들의 대규모 방북 초청은 아리랑축전 등 정치적 선전 목적, 부담 없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복합적인 북한의 이해가 작용하였다.

규명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동안 지원의 주체와 수혜자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관련된 대안목장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장이 남측의 공작대상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보낸 젓소 사료용 콩에서 우리가 루가 나왔다는 북측의 문제제기로 인해 콩의 지원이 5개여 월간 중단되기도 하였다. 굿네이버스가 사료용 콩을 충분한 양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젓소의 발육상태가 매우 저조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년여 간의 목장지원사업을 추진하던 굿네이버스의 이일하대표가 사업 중단의 각오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북한당국자가 사료용 콩이 주민들의 식량으로 전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협력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양측이 상호 입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대립하고, 협상과정에서 양보하지 않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측이 자신들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모르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현장방문이 증가하면서, 중간관리자 단위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는 대북지원사업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관리실무자와 단체실무자간에 형성된 신뢰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북한 중앙당국이 담당관료를 재배치할 경우 기존의 추진되던 사업조차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당국이 사업추진 단체요원들의 발언이나 행동 등

을 빌미로 단체대표 등 특정인물의 북한방문을 제재하는 사례들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태도로 인해, 국내 민간단체들의 경우 활동입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부적인 입장정리가 있지 않는 한 민간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인도적 원칙 고수와 소신 있는 평가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북지원 초기에는 북한주민들이 외부지원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물자에 대한 지원국 및 지원단체의 표시가 이루어지면서, 일반주민들도 지원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윤OO과의 인터뷰, 2004. 1. 12). 그러나 실제 북한주민들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 한 예로 함흥출신 북한이탈자의 “수십 년간 우리는 남한과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워왔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우릴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있다. 우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적인지 의식하고 있다”(Andrew Natsios, 1999)는 증언을 북한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변화로 단정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즉,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특정국가나 단체에 대한 적대의식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인도적 수요에 따라 목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출된다는 정보가 북한 내부에 확산될 경우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일동, 2003 : 13). 그러나 북한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중앙배급제를 통한 지원물자의 배분을 공식화하여 왔다.

따라서 실제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들이 집단적으로 집중지원을 요구하고, 현행 지원체제에 반발을 표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경제난으로 인해 생필품 조달과 생계유지를 위한 개인부업과 물물교환은 물론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행위가 확산되면서, 장마당이 정보유통의 중요 매개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식량 등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이 급증하면서 지원사실을 포함한 외부정보유입, 서방세계와 남한사회 발전상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김경숙, 2002 : 227-268). 지원물품의 품질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위와 같은 비교의식이 형성되게 되었고, 대남 적대감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3. 최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변화 특성

1)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변화 특징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산가족의 상봉이 15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열려졌다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극적인 상봉은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현 주소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철도, 도로, 개성공단 등 경험의 분위기도 점차 고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 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8·15를 기념하는 음악회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참여하

여 단독공연과 KBS교향악단과의 합동공연을 남한주민들에게 선사하였다. 또한,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KBS는 백두산 현지에 추석을 맞이하여 생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삼성의 탁구단은 평양에서 시합을 하였고, 시합장면은 생중계 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올림픽에 공동입장을 하기도 하였다.

과거와 비교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남한을 방문하는 문화교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비교적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였던 1990년대 초나 국민의 정부 수립 이후에도 문화교류의 장소는 제3국이나 북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의 문화교류는 남한측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한 것이 중심이었다. 북쪽 사람들이 남한을 방문하여 공연을 한 것은 1985년도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할 당시 동반하였던 예술단 공연 이래로 한번도 없었다. 이것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남한 문화가 북한인민들에게 보여 지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이와 같은 형식 변화는 그 자체로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크게 보면 문화교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북한 문화의 남한 수용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가 문화교류에 직접 간여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외면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

24) 물론 방송이나 책자 등을 통하여 북한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직접 공연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공연은 사회적 관심사가 높았고, TV에 중계되는 등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다.

어진 소년예술단과 교예단의 방한에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는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셋째, 자본의 결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않았지만 평양교예단이나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정상회담 및 지난해의 평양공연 등의 행사에 북한에 대한 일정한 사례비가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나 이번 문화교류의 경우는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넷째, 제3국이 아닌 남북한 현지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문화교류의 중심은 남북한보다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제3국이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남한(소년예술단·평양교예단·평양교향악단)과 북한(탁구시합·백두산 현지방송)에서 이루어졌다. 어느 곳에서 교류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제3국의 문화교류는 참여자에 국한된 교류지만, 현지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비록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남북의 문화를 상대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류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방송과 언론이 결합되는 등 문화교류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결합은 근본적으로 문화교류의 경험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연이나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신문과 방송의 보도 혹은, 중계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이 간접적이거나 문화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의 교류 자체도 의

25) 교향악단의 경우 KBS가 초청 대상자였으나, 이미 한 민간단체가 4월에 북측과 방문공연에 계약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분쟁도 야기되었다.

미가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문화교류의 성과를 확대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화교류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소년예수단, 교예단, 교향악단, 방송 그리고 체육에 이르기까지 정상회담을 전후한 각종 문화교류는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교류의 중심지가 남한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접하지 못하였던 북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패러독스 시대, 세대의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성격

21세기의 초입에 들어선 오늘의 사회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사건들,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현상은 신민족주의의 대두와 세계시민의식의 성장, 물질 만능주의와 탈물질주의, 보편주의와 원리주의, 문화의 동질화와 이질화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분야나 학술 담론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과학, 기업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공존, 대량생산과 소품종 주문 생산의 동시적 추구, 전문화와 전문적인 영역 구분의 파기를 동시에 함축하는 것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충되는 현상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김종길, 2001). 이처럼 복잡성과 불확실성, 대립되는 요소들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는 개인과 조직, 국가의 수준 모두에게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목표들로 동시에 달성하도록 요구받는 ‘패러독스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R세대의 패러독스적 성향은 월드컵 축제기간 중 이루어진 길거리 응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중적인 가치지향을 조화시켰다. 사이버공간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면서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나타냈으며, 기성세대와도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와 더불어 선진세계에 일방적으로 매몰되지 않는 탈사대주의적 성향도 보였다(이종원 외, 2003 : 205 참조). 즉,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양자택일 대신에 집단적 개인주의를, 민족주의와 개방주의의 양자택일 대신에 개방적 민족주의를 택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명백히 양자택일(either/or)의 세대가 아닌 패러독스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과거 기성세대가 보여줬던 태도는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한 양자택일의 모습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패러독스 시대, 세대의 모습은 우리가 통일·북한문제를 둘러싼 환경 여러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논의와 관련한 태도, 또는 북한관에서 기성세대는 보수, 청소년층 또는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라고 일반화하는 이분법적 구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이러한 구분은 과거 한국전쟁의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이념적 성향을 재단하려 할 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나, 한국전쟁의 무경험자가 인구학적 측면에서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기성세대 중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또는 일상생활과 연관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 성향의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층 내부에서도 계층, 성별, 인문·실업계열에 따라 통일·북한관이 분

할되고 있는 현상²⁶⁾은 패러독스 세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오히려 기성세대와 청소년층이라고 하는 세대구분보다 각 개인이 경험, 체험하는 일상생활을 축으로 그들의 이념적 성향을 설명해 가는 작업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층의 남북 교류와 관련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서해교전사태가 남북 교류활동의 참여 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부산 아시안 게임의 북측 응원단 활동이 참여 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의 주요 교류저해 요인으로 남북 고위층 모두를 비슷한 비율로 지칭하는 것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의 교류활동 만큼 온라인상의 교류활동을 선호하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과거와 달리 변화된 세대의 교류관을 엿볼 수 있다(길은배 외, 2003). 더욱이 교류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수학여행, 문화유적지 답사 등이 선호도에서 상위분포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간접적 교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채팅, 게임, 그리고 남북 청소년들이 각기 창작한 미술작품, 문예작품 등의 교환 감상 등의 선호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남북 청소년교류의 소재로도 과거와 달리 인라인스케이트, 댄스, 영화 등을 매개로 한 만남을 희망하고 있어 이제는 남북 청소년교류라는 문제 설정이 지역사회 속에서의 일상생활처럼 가볍고 편안한 교류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남북 청소년교류로서의 수학여행 등은 청소년들의 욕구와는 다른 성인들의 고집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변화된 교류관을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적의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일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청소년의 남북 교류 이해 방식은 기성세대를

26)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길은배 외(200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를 참조.

중심으로 한 그간의 노력과 일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남북 청소년교류 문제는 체육, 문화·예술, 학술, 방송분야 등과 같이 본래의 업무 성격에 기초한 교류 활동과 달리 ‘성인과 청소년’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대상 중심의, 교류의 주체 문제로 ‘청소년 교류’라고 하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청소년분야를 중심으로 있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 교류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든 교류의 주체가 성인, 또는 여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청소년분야가 소외되었다는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층이 미래의 통일과정에서 새로운 통일주체 세력으로 부상할 것을 염두에 둔 통일대비 교육적 측면에서 남북 교류과정에 청소년층의 주체적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즉 남북 교류의 주체 문제를 청소년 교류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소년층이 남북 교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학습여행·관광, 수련활동, 체육, 문화·예술, 학술, 방송 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교류가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체육, 예술 등의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청소년층이 포함되어 소극적 청소년 교류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들 영역은 남북 체육, 예술 교류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학습여행·관광, 수련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류과정에는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남북 교류 환경에 비추어보면 단시일 내의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현 시점에서 청소년층의 주체적 참여를 고려하여 남북 교류를 추진할 경우 그 영역이 매우 축소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층이 주체가 되는 남북 교류문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맞물려 장기적 과제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히려, 방송교류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비

을 포함시키거나, 문화·예술 교류시 청소년 대상의 내용을 첨가하고, 체육 교류시에도 대표선수 중심의 경기보다 생활체육 수준에서의 경기를 개최하여 일정비율 청소년 참여가 가능한 종목을 확보하는 노력이 현 시점에서 더 적실성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최근의 여타 영역에서의 남북 교류가 북한사회, 특히 북한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남북 청소년교류의 준비과정에 시사하는 바 크다. 예로 윤도현 밴드, 조영남 등이 북한 방문시 부른 대중가요가 북한의 청소년층에게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남한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아이는 한 세기 떨어진 애”(박동호, 2001년 10월호)로 취급받을 정도로 남한의 노래가 북한에 널리 퍼져 있다. 이처럼 비 청소년분야의 교류가 북의 청소년층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 청소년교류의 궁극적 목적을 다시금 판단해볼 기제로 다가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점에서 남북 청소년교류가 지향해야 할 우선 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남북 청소년교류의 궁극적 목적을 단순히 만나는 역사적 사건에 둘 것인지, 만남을 통하여 통일과정에서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주도적 세력을 만들거나 교류를 통하여 북한청소년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단계에 대비할 것인지 등의 목표를 다시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종된 채 그동안 청소년분야의 교류를 지나치게 당위적 측면에서 고집해온 결과 10여년 전에 제안한 남북 청소년교류 방법이 현재까지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남북 청소년교류가 지속적으로 담보되어 교류의 궁극적 목표나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만나게 하자는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

청소년교류의 목적을 무조건 만나게 하자는 당위적 차원으로

이해할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기존의 남한 청소년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모습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로 학업 부적응 문제는 단순히 학력 차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또래집단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부적응 및 상이한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연동된 결과라는 점이다. 대화과정에서 매우 상이한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다툼을 우려하여 아예 또래간의 대화를 회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길은배 외, 2003a : 86-87).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의 경험으로 이후의 태도가 결정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전혀 만나지 못한 남북 청소년교류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부른 만남, 특히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만남의 경험이 통일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청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동서독의 분단상황에서 추진되었던 청소년교류가 통독 이후에 어떠한 긍·부정적 효과를 양산해 냈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무조건적으로 만나는 직접적 교류가 과연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통독 이후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적절했는가의 문제이다.

“... 대학생이라는 사회적인 특별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구동독과 구서독이라는 두 개의 대립된 사회화가 존재하는 한 ‘동독 의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독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독일 민족의 소속감보다 우선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구동독 출신 학생들은 경쟁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고 더불어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 변화기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변환기를 성장배경으로 하고 있는 통일 독일 사회의 동독 출신 청소년들은 ‘통일의 수혜자인 동시에 패배자’라는 이중적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영란, 2003 : 14-15).

위의 연구 결과는 우리보다 훨씬 발전적이었던 동서독의 청소년교류 역시 통독 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 미친 파급효과가 미약했음을 시사한다.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그 사회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의 변동내용에 따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인생관, 생활관,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실로 다양하다. 사회문화적 변화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성인에게서보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사회변동의 속도가 완만하고 사회질서가 매우 안정된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에 의한 문화전승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기존질서의 틀을 큰 변화 없이 계승해 나아가기도 한다. 그와 같은 사회의 문화는 ‘전통지향적’이며, 기성세대는 그들이 은퇴한 후에까지도 전통의 상징과 문화적 전승자로서 존중되고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내외적 원인에 의해 사회질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로부터 전수 받은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가지고서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임희섭, 1995 : 227). 새로운 질서의 형성은 새로운 문화적 정향이 내면화한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로 편입되어져 그들이 사회질서의 형성과 관리의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사회변동의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미래의 사회질서를 형성하고 주도해 갈 잠재적인 사회세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급진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내면화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사회질서의 관리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성인세대에 편입된 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일로, 세대

교체를 통한 사회질서의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점진적인 성격의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 청소년교류가 갑자기 급증하여 년 몇 회, 몇 명의 교류가 성사되었다는 수치로 그 성과를 평가할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다. 그러한 경험을 공유한 남북 청소년 모두가 반드시 타자에 대하여 수용적 인식, 또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는 선부른 예단일 것이다. 오히려 남한의 대중가요가 뜻하지 않게 북한청소년 사이에서 불려지고 있고, 이것이 남한을 알리는 것에, 그리고 북한청소년의 일상 및 가치관 변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보다 미래지향적 교류의 형태일 것이다.

Ⅲ.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 분석

Ⅲ

1.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발생 원인
2. 인권에 기초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진단
3. 북한청소년의 유형별 인도적 위기 실태
4. 시사점

Ⅲ.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 분석

지난 4월 22일 룡천역 폭파 사고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은 당장 소모되는 긴급구호품과 생활필수품 지원 등을 비롯한 도시 복구 외에도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 등 교육터전을 잃어버려 안정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도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청소년 등의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발전하면서도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발생 원인과 실태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발생 원인

1) 식량난 위기 악화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는 식량난으로부터 연동하여 파생된 영양부족, 학교붕괴, 유랑증가, 의료 및 보건환경 악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아프리카의 기근 지역과 같이 정치적 무정부 상황에 직면한 일반적 국제적 구호원조 수혜국과는 달리 국가의 통제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인도적 위기 발생은 대내외적 정책의 실패로부터 기인한 바 크다 하겠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업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외 채무 상환의 불이행에 따른 대외 신용상실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1990년 초반부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식량배급량이 감소하다가 1994년에 완전 중단되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동요라는 탈냉전 시대의 도래는 ‘바터제(물물통상방식)’를 기본으로 하던 북한의 무역통상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즉, 외환 보유액의 부족에 따른 석유 공급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북한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외 조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전력이나 석유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모 생산방식인 ‘주체농법’(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을 멈추게 하면서 1990년대의 만성적인 식량난 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은 비료의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농업생산성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여 농민들에 대한 배급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식량을 몰래 비축하고, 장마당에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는 중간 식량매집 현상도 급증하여 더욱 식량난이 가중되었다. 이런 여파는 1990년대 중반기부터 연간 곡물생산량이 300~350만 톤 수준으로 종전에 비해 약 100만 톤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1995년부터 1997년에 이르는 대홍수와 가뭄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체제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성적인 기근과 경제적 피해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었다.

2) 경제개혁 조치 이후의 최근 식량난

1990년대 중반에 최악의 식량난을 경험한 북한은 1990년대 말

부터 식량 생산 사정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특히, 본격적인 경제 개혁에 돌입한 2003년의 식량 생산량은 416만 톤으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다가 1999년부터 플러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북한경제 호전 징후는 북한 자체의 경제력에 의한 회복 보다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경제 상황을 비롯한 식량난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민주평통사무처, 2003.12 : 7).

이러한 판단은 지난 겨울 세계식량기구(WFP) 등 유엔 산하 대북지원 기구들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원 약속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 220만 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 가능성 보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지는 WFP와 유니세프의 현지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어린이 가운데 약 41%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해(워싱턴포스트지, 2003.12.11),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북한 어린이가 최대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배경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크게 줄거나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일본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최대 지원국이었던 미국 또한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1/5 수준까지 줄인 상태이다.

또한,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대내적 배경으로 ‘경제개혁의 부작용’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시장경제 요소를 전격 도입한 이후, 북한사회의 물가가 급등하였다. 동시에 기업들의 이윤추구가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 역시 수확량을 늘리

는 데 많은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북한의 식량공급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배급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국영시장에서 현물가로 식량을 구매하는 가격 자율제를 도입한 것이다. 기업 간부와 농업인의 생활은 향상되었지만 북한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 노동자는 더욱 궁핍해져 약 100만 명의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게 되었다.

앞으로 북한이 근본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영농제 및 시장경제체제 도입,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 개편, 유통체계 개선, 농업금융제 확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남북어린이어깨동무, 2003.12.14). 그러나 북한이 동시에 이러한 제도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 정상화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핵 위기와 식량난

북한 식량난 위기의 근저에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및 봉쇄라는 대외적 배경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2002년 10월 다시 불거진 북핵문제가 봉착된 이후로 대외적 식량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미국의 중유 지원과 경수로 건설이 중단되면서 북한사회가 겪는 에너지난과 식량난의 고통은 북한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분리해야 하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해결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 분리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환경이 대북 지원 유보라는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인도적 긴급구호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개발지원은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다(이우영, 2004). 결국,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의 확대 여부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과 같이 정치·군사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인권에 기초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진단

1) 인권의 의미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인 이유를 가장 확실하고도 정당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받는 장치로서의 개념이다. 인권이란 용어는 법률적 용어인데, 사실 인권 그 자체는 법률 이전의 문제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신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 인권 사상의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내용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인간인 이유를 확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행복을 달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인권은 타인이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전에 앞서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 확보와 그 신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또

그 확장을 위해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부여가 불가결한 전제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행복과 그 행복을 추구할 자기 자신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이기적인 사적 생활이 긍정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 삶 그 자체가 보호받아 마땅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최선의 인권적-인격적 삶의 추구에서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인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에서 완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 나아가 그들의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국가로부터 인지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삶이, 그리고 그 구체적 실현으로서의 행복추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만큼 전적으로 동일한 정도로 타인의 삶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인간의 보편적 삶의 가치로서의 인권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출생, 피부, 국적, 인종, 학력, 경제, 종교,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다 같이 고귀한 존재이다. 그러한 인지와 약속 위에 비로소 인권은 성립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권력을 인권침해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최대한의 자제력을 공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의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책무가 있다. 환언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시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더욱이 그 국가가 어떠한 정체인가에 관계없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보호에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권의 초년기에 놓여 있는 나라들은 완숙기에 접어든 나라에 비해 분명 인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초년기에 접어든 나라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 아직도 인권의 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인권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권은 그다지 용이하게 확립, 보호, 신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여도, 국가가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짓밟으며 인간을 고통의 질곡에 빠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알고 있다. 전근대의 봉건제도는 차치하더라도, 인간 이성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근대에 있어서도 인권의 침해를 목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등의 전체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재보다는 국가의 그것이 가치적으로 우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 독재의 권위주의체제에서도 발견된다. 즉, 권위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에서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개인의 이기주의는 극도로 제한되어야만 하거나 혹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 체제에서의 사적 영역이라는 것은 곧 사악한 영역의 다른 명칭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들 체제에서는 개인의 내면세계를 포함한 모든 사적 공간은 가능한 한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에 다름 아니었고, 따라서 이들 체제에서의 권력은 언제나 모든 인간을 권력 세계에 동원하는 것에 의해 개인에게 고유한 사적 공간의 파괴를 선도하였다.²⁷⁾ 민주화 운동이란 인간성회복 운동, 곧 인권회복

27) 공적 세계에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인간 내면세계의 존재를 확실히 선언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자야말로 보다 신성하면서도 불가침적인 세계임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의 제 변화, 특히 기독교 사상과 운동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전체주의체제와 권위주의체제의 등장은 이러한 인간 내면세계의 부정 위에 성립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민준기 편(2001). 1-3쪽 참조.

운동에 다름 아니며, 이는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체제나 전체주의 체제로부터의 탈피,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에 의해 달성, 성립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인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인간 생활의 소중한 가치이다. 인권을 지키고 신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역시 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현재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일 수 없으며, 자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 역시 더 이상 국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권의 세 가지 차원

(1) 법적인 측면에서의 인권

모든 인간은 자신의 고귀함을 타인이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어떠한 국가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또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인류의 인권신장의 역사는 인간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원칙으로 확보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법체제를 살펴볼 때, 북한의 법이 북한청소년의 법적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내면세계를 포함한 인간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공적 영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청소년이 무수한 사회조직에 의해 동원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 것은 북한 사회가 국가의 공적 영역을 개인의 사적 영역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4). 북한 사회의 인권문제가 꾸준히 국제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상 북한의 인권보호가 제도적, 실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는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국가가 인권을 제약하는 많은 조항을 법제화시키고 있다. 여하한 조건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북한 사회의 절대가치는 체제의 유지이다.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비록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로 심각한 인권의 침해, 제약 등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된다. 또한, 체제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인권신장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부정된다. 많은 정치수용소의 존재는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북한청소년들의 법적 측면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권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권리를 가질 때, 국가는 당연한 귀결로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옹호에 앞장서야 한다. 인간의 인간다움의 전제는 무엇보다

도 그가 최소한 의식주, 특히 식생활에 있어 다소의 불편은 차치하더라도 절대빈곤에 빠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문제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먹고사는 문제, 배고픔으로부터의 탈피의 문제이다(법륜, 1997b). 적어도 배고픔에 의한 생사문제만은 극복되어야 한다. 인간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배고픔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메워야 한다.

여하튼, 인간은 각자의 노력에 의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상태로 영위해나갈 권리가 있다. 국가 역시 이러한 인간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청소년의 인권을 생각할 때, 1990년대 초반의 연이은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아사자의 속출(법륜, 1997a; 법륜, 1997b; 좋은벗들, 2000a; 좋은벗들, 2000b; 강정구, 1997)은 청소년 개개인이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도 북한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을 아사로부터 구원할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인권 역시 몹시 취약한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3) 정신적 측면에서의 인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안정 역시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이다. 정상과 일탈의 명확한 구별과 함께 정상에서의 삶이 일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삶이어야만, 인간은 정상에서의 삶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특히 국가에 의해서

도 수용될 때 가능해진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곳곳의 장벽에 부딪치거나 국가로부터 제한되게 되면, 인간은 정상에서 탈피하여 일탈에로 내달려간다.

인간이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북한청소년의 인권을 염두에 둘 때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삶의 공포, 즉 생존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강제와 감시의 공포, 배고픔의 공포, 추위의 공포, 그리고 북한이탈자들의 경우 강제소환과 그에 따른 처벌에의 공포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에서 인권이 설 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청소년의 법 및 사회경제적인 인권의 참담함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곧 또 하나의 정신적 인권(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권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북한청소년, 혹은 이미 북한 지역을 벗어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인권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차원의 인권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고 국제사회는 대체로 법적인 차원의 인권과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인권을 중심으로 북한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북한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신적인 차원의 인권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차원의 인권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의 삶의 안정은 물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삶이 가능하도록 물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신적인 안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3) 인권에 기초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

(1) 법적인 측면에서의 북한청소년 인도적 위기 실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먼저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자아형성기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북한의 사회조직에 강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자기 삶에 대해 자신이 주체적인 책임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인권의 침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조직생활의 강화와 그 속에서의 학습투쟁의 일상화는 자기 삶의 주체적 건설과는 다른 삶의 방향을 지향할 뿐이다. 실제로 북한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인 사상교양 강화, 사회주의 선봉대·돌격대로서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 위업 고수 및 통일과업 수행의지의 강화에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북한청소년을 궁극적으로 수령에 대해 충실한 사회주의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길은배 외, 2001 : 66-93). ‘만드는’ 사람의 의지가 강조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의지는 중요하지도,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당국에 의해 ‘만들어져야 할’ 대상으로서의 북한청소년의 일상생활은 이미 정상 속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청소년들이 기아를 계기로 이상향을 찾아 한국, 중국 등으로의 탈출이라는 일탈을 실행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요인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한편, 북한청소년의 법적 차원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살펴보면 있어 또 한 가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식량난을 계기

로 북한의 국경을 넘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법적 차원의 인권 문제이다. 이들이 북한 국경을 넘는 과정을 살펴보면,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선은 월경 그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의 변경에서도 결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중국과 북한에 의해 언제 붙잡히게 될지 모르는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적 구조는 여전히 불충분한 실정이다.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모처럼의 일탈을 원점으로 되돌리며 비정상적인 정상으로의 강제복귀에 다름 아니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NGO단체들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난민의 지위를 인정토록 중국 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법률 구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난민지위의 획득은 결과적으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 혹은 해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에 대한 국제적인 권고와 압력의 행사와 더불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한시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후자의 경우, 관련 주변국의 입장 조율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 인정에 대한 국제적 법률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의 선택이 물리적으로 곤란하다면,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으로는 한국, 북한, 중국의 3자 협의이다. 이는 물론 북한 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과는 달리, 전적으로 북한이탈 난민 처리라는 한정된 목표의 협의 기구일 수 있다. 더욱이 한국, 북한, 중국의 3자

회의는 현실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인도적, 혹은 정치적 판단만을 기대하는 현재의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3자 회의는 운영의 여하에 따라서는 참가국 모두의 윈-윈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북한청소년 인도적 위기 실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식량난의 문제이다. 이미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의 연이은 자연재해가 북한에 극심한 식량위기를 초래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하였지만, 아사자의 속출을 막지는 못하였다. 식량난은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교과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굶주려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이 77.4%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75.5%가 ‘자주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항목의 조사에서는 21.9%가 무응답을 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불과 0.7%에 지나지 않았다(좋은벗들, 2000c).

자연재해→식량난 가중→영양부족→유민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북한의 위기대응 능력의 현저한 결여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심각한 와해를 외부 세계에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북한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인도적 위기가 위험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특히, 혹독한 식량난에 직면하여 북한이탈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경제적 차원의 인도적 위기와 법적 차원의 위기가 겹쳐지게 되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다음에서 살펴볼 정신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배고픔이 초래한 인도적 위기가 마침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비인간적인 처우도 감수하는 인간성의 파괴를 결과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자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배고픔 앞에 선, 도덕은 사치 그 자체였다. 북한이탈 청소년 중 그 일부가 비법(非法), 무법(無法), 탈법(脫法)의 일탈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은 비법, 무법, 탈법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3) 정신적 측면에서의 북한청소년 인도적 위기 실태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은 북한청소년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인도적 위기와 함께 법적인 차원에서의 인도적 위기에 동시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정신적 공황을 결과함으로써 정신적 측면에서도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청소년들은 생존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정신보다는 물질에 모든 가치의 우선을 두기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국경을 넘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여전한 삶의 위기가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강제소환에의 공포, 인신매매에의 공포 등이 더해져서 극심한 정신적 부조화, 불안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벗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좋은벗들, 2000c), ‘식량난으로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86%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족의 파괴가 이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더욱이 기타의 조사 자료들에 공통되는 결과는 강제송환, 인신매매의 공포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신적 인권보장의 필요불가결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적 지원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신적 인권보장의 지원이 필요하다.

3. 북한청소년의 유형별 인도적 위기 실태²⁸⁾

인도적 위기 상황은 신속한 긴급구호의 필요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인도적 위기 상황의 객관적인 파악은 현장에 대한 접근의 제약과 당사국의 전반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 통제로 인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²⁹⁾ 북한은 1997년을 전후하여 가장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지만 UN에서 파악한 자료는 식량난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시 북한이 식량난의 실상에 대한 자료나 통계를 국제사회에 거의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된 식량의 군사전용 가능성 및 식량난의 실재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란도 인도적 지원을 지연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도 어렵다.

28) 여기서 사용한 심층면접 결과는 최근 북한청소년의 유형별 인도적 위기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8월 중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9세부터 18세까지의 북한이탈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하였으며, 남녀 비율은 5:5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개방형으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전문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29) 인도적 위기상황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지표는 영아사망율, 사망률, 유병률 등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장, 나이, 체중, 상박둘레 등을 측정하여 영양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빈혈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도 이루어진다.

다만 국제적 관례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인 청소년, 임산부, 노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다.

1) 영양 부족

북한의 식량난은 어린이에게 그 영향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린이들의 건강문제이다(좋은벗들, 2004 : 43). 북한 어린이들은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식량 섭취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주사(백신), 치료의약품, 영양제의 부족 현상과 위생상태의 불량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1998년의 제1차 북한 어린이 영양 실태 조사에 이어, 제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UNICEF, 2002.2)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율이 지난 4년간 현저하게 호전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느슨해지면서 이들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린이 영양 실조율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영양 실조율 및 발육 부진율이 매우 높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다시 사태가 악화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표 III-1> 성과 연령에 따른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 장애 유병률(1998년)

구 분	표본크기(1,762명)		급성영양실조(%)*		만성영양실조(%)**	
	남(887명)	여(875명)	남	여	남	여
6~<12	61	83	19.1	16.5	23.0	8.2
12~<24	146	151	36.5	25.8	45.6	51.1
24~<36	159	133	25.3	14.2	63.7	60.2
36~<48	139	125	16.3	9.2	74.6	75.6
48~<60	141	125	14.6	3.0	80.0	75.0
60~<84	241	258	11.7	4.2	76.4	73.4
남여총평균			15.6		62.3	

※ 자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02 : 63쪽.

* wasted, 체중 대 신장 <-2SD.

** stunted, 신장 대 연령<-2SD.

급성영양실조와 만성영양실조 실태는 북한 어린이들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발육을 저해하는 만성적인 영양실조 수치 62.3%도 중요하나, 신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급성영양실조도 심각한 문제이다. 정병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35만 명에 달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등의 직접적 문제뿐만 아니라 골격 자체의 성장이 멈추거나, 두뇌 발달상의 장애와 뇌신경 손상의 우려까지 있다고 한다. 현재의 기근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임신부들의 영양결핍이 가져올 수 있는 태아들의 신체적 결함은 물론이고 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정신분열을 포함한 정신신경계통의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이 북한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02 : 58).

첫째,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어린이 성장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체중 및 신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과 비타민 부족에 의해 각막염, 야맹증, 괴혈병, 구루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철분 부족에 의한 빈혈 등 미네랄이나 소량 원소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영양 부족으로 신체의 면역력이 감소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면서 감염성 질환 등 이차적인 다른 질병의 발생이 증가한다. 넷째, 사회적 대응력의 결핍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기근에 의해 가족과 지역사회 등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하고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 학교 등의 어린이 보호시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표 Ⅲ-2> 0-7세 어린이 영양상태의 북한지역별 분포도(2002년)

(단위:%)

지 역	허약도	저체중	저신장
양 강 도	9.50	26.50	46.67
함경북도	10.68	23.33	42.83
함경남도	12.02	24.17	45.50
평안북도	6.83	17.83	42.40
평안남도	7.19	18.67	42.17
평 양	3.68	14.83	27.00
남 포	4.33	14.67	23.24
황해북도	9.00	20.67	39.40
황해남도	11.00	20.17	38.56
개 성	7.00	20.67	44.41

※ 자료: 김귀옥, 2004 : 13쪽.

북한청소년의 영양부족 현상은 그 기저에 식량난이라고 하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식량난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냉이밥과 강냉이 국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급을 못 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산에서 나무도 해서 팔고 약초도 캐서 팔아 식량을 구합니다. 장마당에서 훔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훔치다 걸리면 보안원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가끔은 농장에 가서 먹을 것을 훔치기도 합니다. (안○○).

강냉이밥과 강냉이 국수를 먹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생일날이나 입쌀(흰쌀) 밥을 먹을 수 있고 더 이상은 먹기 힘듭니다. 배급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96년부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경우 장사를 하기 위해 산에 다니면서 나무도 하고 약초도 캐서 팔아서 식량을 구해서 먹고 살기도 하나,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채소나 풀을 먹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공부할 나이인데도 할 수없이 학교를 못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먹을 것 때문에 12살 때부터 먹고사는 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정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갈라져 사는 것이 많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배급도 주지 않으므로 할 수없이 훔쳐서 먹고 살기도 합니다. 큰 물건을 훔치면 교화소까지 가기도 합니다. (안○○1).

북한의 식량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배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1996년경 북한경제 사정이 최악인 시기를 말함) 때는 배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인 백출, 둥굴레, 장출 등을 캐거나 따다가 되거리 장사(중간상)에게 한키로에 대략 1,000원씩 팔아서 장마당에 가서 강냉이나 입쌀을 사서 식량을 구합니다. 입쌀은 한키로에 400원인가 했습니다. 한 키로면 형과 둘이서 2일정도(6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쌀밥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시래기나 채소 등을 같이 넣어 죽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는 죽을 가져갈 수 없어 곡밥(도시락)을 싸가야 하는데 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한끼만 먹거나 먹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토지(개인이 농사를 지어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는 강냉이, 고추, 감자 할 것 없이 닦치는 대로 훔치기도 합니다. (이○○).

그 결과 북한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은 남한 청소년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아동사망률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청소년의 평균 신장은 남자 155cm, 여자 152cm로 한국에 비해 10cm 이상이 작으며 몸무게도 10kg 이상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3> 남북한 청소년 평균 신장 비교표

(단위: cm)

연 령(세)	북한 청소년	남한 청소년
4	-	104.5
6	-	119.2
7	-	126.3
9	-	136.4
11	105.0	150.5
12	120.0	156.7
13	124.0	163.5
15	142.0	171.5
18	151.3	175.7

※ 자료: 좋은벗들, 2004.

위의 <표 Ⅲ-3>에 의하면 북한의 11세 어린이의 키(105.0cm)는 남한의 4세 유아의 신장(104.5cm)과 비슷하다. 남한 11세 어린이의 키인 150.5cm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 어린이의 신장발육 저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성장장애는 1998년 22%의 영아가 2.5kg 이하의 체중으로 태어났고, 7살 이하 62%의 아동이 성장장애와 16%가 쇠약한 상태이다(UNICEF, 2001 : 1).

<표 III-4> 남북한 청소년 평균 체중 비교표

(단위: kg)

연 령(세)	북한 청소년	남한 청소년
8	-	31.5
10	-	39.3
11	-	46.0
12	30.0	51.4
14	31.2	61.3
15	39.0	66.7
16	42.5	-
17	42.6	-

※ 자료: 좋은벗들, 1998 ; 보건복지부, 2002.

* 북한청소년 통계의 표본크기는 총 482명임.

표본 크기의 차이를 감안하면서 위의 표를 보더라도, 14세 북한청소년의 체중(31.2kg)은 남한의 8세 어린이의 몸무게(31.5kg)와 비슷하다. 이는 동일 연령대인 14세 남한 청소년의 체중인 61.3k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키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몸무게도 물론 남한 청소년들이 더 좋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은 잘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북한의 아이들은 키가 작습니다. 농촌지원을 자주하여 김매기, 풀뽑기 등 힘든 농사일을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키가 작습니다. 북한에서 몸무게가 47키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60키로그램입니다. 13키로그램이 차이가 납니다.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몸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박○○1).

내가 북한에서 키는 139센티미터였습니다. 지금은 151센티미터입니다. 1년 만에 12센티미터의 키가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고 학교의 난로에 땔감인 나무를 해 와야 합니다. 이때 너무 무거운 나무를 많이 지고 다니니 키가 안큽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몸무게도 적습니다. 영양을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청소년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심각한 식량난으로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평균 키 및 체중이 남한 청소년들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뒤지는 현상을 통하여 북한청소년들의 영양부족 실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의료 및 보건 위기

북한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민보건법」의 제정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위생수준은 선진국 수준이었다.³⁰⁾ 그러나 최근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북한의 의료 및 보건 위기 상황으로 확대되어 병원과 병상이 있으나 약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을 못할 정도로 북한의 의료 및 보건 분야는 거의 마비된 실정이다.

북한청소년들은 오랜 기간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뿌리 등 대용식품의 섭취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많고,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발육부진 및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여 급증하는 전염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비위생적인 식수와 공공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의 부족,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등 기반시설의 불량은 전염성 질환의 증가를 가속화시켜 결핵과 간염 등의 유행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영양

30) 북한은 모든 보건의료 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운영한다. 즉,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앙집권적인 보건의료 조직을 운영하는 형식이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제56조)의 규정과 「인민보건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보건정책은 ① 전반적 무상치료제, ② 의사담당구역제, ③ 예방의학적 방침 등 3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

부족과 예방접종 미 실시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1990년 이후 자체 백신 생산량의 감소, 냉동 유통체계의 미비, 실린지 등 의료소모품의 부족으로 예방접종률이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표 III-5>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방법

가족 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례 수(개)	비율(%)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약도 쓰지 못함	330	63.4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은 개인이 샀음	181	34.7
병원에서 면비치료(치료비 면제)를 받음	1	0.2
기 타	9	1.7
계	521	100.0

* 자료: 좋은벗들, 2001 : 42쪽.

북한난민 조사대상자에게 “북한에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63.4%가 ‘병원에서 치료받지도 못하고 약도 쓰지 못했다’, 34.7%는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은 개인이 샀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약 98.1%의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의료 치료조차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보건 관련 사회기반 시설의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잠재력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의료 및 보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역, 치료, 보건서비스, 깨끗한 식수, 위생 상태 유지 등 기본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기금 보고에 의하면 북한아동 사망률은 1990년에 9.2명이었는데 1998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1990년에 1,000명당 30명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55명으로 증가(UNICEF, 2001 : 2)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다.

1997년 파라티프스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파라티프스 병 치료에 먹는 약은 중국약인 레모미쨍 알약인데 한 알에 7원에서 8원입니다.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해 두 달 동안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병에 걸리면 병이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박○○).

감기나 학질 등 그런 병으로 앓습니다. 아픈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약을 공급하지 않아 병원에도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당(농민시장)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쩔 때는 아파도 가만히 누워 있고 저절로 낫기만 바라기도 합니다. 고난의 행군에는 특히 더 어려웠습니다. (김○○).

간염이라든가 폐병으로 사람들이 병들어 앓는데도 약이 없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도 약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장마당에서 약을 사서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도 그저 누워 있게 됩니다. (안○○1).

감기 같은 것은 턱턱 털고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정 아프면 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못쓰는 약(좋은 약)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약은 먹지 않고 장마당에 가서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많아 한 사람이 걸리면 다른 식구들도 다 걸립니다. 링게르도 장마당(암시장)에서 구입하여 병원에 가져가면 주사를 놓아 줍니다. (이○○).

그 외에도 영양상태가 불량해서 오는 질병에 대한 유병률 특히,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 현상이 보이며, 성장을 위한 영양 요구량이 높은 영유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핵 환자의 증가, 소아마비, 홍역, 장티푸스, 간염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UN, 2002 : 3-11).

<표 III-6> 조사대상자 가족 구성원들의 사망 원인

사 망 원 인	인원 수(명)	응답비율(%)	유효 백분율(%)
굶주림	868	29.0	29.7
굶주림으로 질병 악화	267	8.9	9.1
폐결핵, 파라티푸스 외	1,670	55.8	57.2
기 타	117	3.9	4.0
무 응 답	69	2.3	-
합 계	2,991	100.0	100.0

※ 자료: 좋은벗들, 1999c : 191쪽.

위의 표에서 굶주림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29.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먹을 것이 없어 질병에 걸리고 그 병세가 심각해진 경우이다. 또한 기초 약품만 있으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의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도 많다. 예컨대 파라티푸스는 물을 끓여 먹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면 걸리지 않는 질병이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쉽게 낫을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보건상태 악화와 기초 의약 지원의 부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라 해도 건강 상태는 매우 위급하며 54.2%가 영양실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소를 방문하는 어린이 40~50%가 수인성 질환을 앓고 장마시즌에는 60~70%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라리아 발생률은 2001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1998년 2천100명에서 1999년 9만5천960명, 2000년 20만4천428만명, 2001년 29만5천570명에 달했으나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2002년에는 7월 기준 9만806만명으로 급감했다. 그중 15세 미만 청소년의 발생률은 2000년 1만2천270명으로 6.1%, 2001년 4천93명으로 1.4%, 2002년 7월 기준 5천908명으로 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민 증가

1990년 초반부터 북한당국의 동북부 지역에 대한 식량배급량이 감소하고, 1994년에는 완전 중단되면서 중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유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우 지역별·계층별 식량난의 차이가 심각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차이의 배후에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방치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난에 따른 운송수단의 부족으로 산간 오지 지역은 중앙배급제가 붕괴되어 식량난이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외부 지원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동부 지역과 북부산간 지역의 식량난 피해는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점차적으로 배급표 압거래, 장마당에서의 식량 및 생필품의 상거래 등 불법 상행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계층은 주택 및 기타 생계수단까지를 처분하고 절대 빈곤 상태에서 ‘유민’으로 전락하였다.

결국, 식량위기는 가족해체를 심화시켜, 부모와 어린 자식간의 별거, 부부간의 별거, 결혼기피, 출산기피,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의 질병과 사망률이 증가하여, 북한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명 꽃제비가 대량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1997년과 1998년 북한 내부에서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던 시기에는 “가만히 앉아 굶어 죽으나 국경을 넘다 걸려 죽으나 이래저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사회를 떠나 도강을 하는 유민이 급격하게 늘어났다(좋은벗들, 2000d).

특히, 북한 내에서 식량을 찾아 떠도는 청소년들이 급증하자, 북한당국은 지역별로 ‘9.27 그룹빠’, ‘꽃제비집결소’ 등을 설치하여 이들을 임시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유민은 북한 내에

서 장마당을 전전하다가, 식량과 돈을 구하러 중국으로 가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탈북으로 인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부분은 부모와 북한사회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꽃제비 아이들과 함께 유랑 생활을 하다가 5명이 같이 중국으로 도강했습니다. 중국에 와서 일거리를 찾으려 했으나 너무 키가 작아 아주 작은 아이로 인정하고 일도 시키지 않으므로 정거장, 식당, 병원으로 다니면서 유랑생활을 했습니다….(최○○).

16세부터 집을 떠나 꽃제비 생활을 했습니다. 드문드문 먹을 것이 많이 생기면 동생들한테 갖다 주곤 했습니다. … 꽃제비 무리들과 같이 청진시, 부령군 등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밥도 벌어먹고 도적질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윤○○).

… 나라에서 배급을 주지 않고 계속 흉년이 지고 살아가기 힘들게 되자 나의 부모들은 우리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와 동생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밥을 벌어먹기도 하고 도둑질을 해 먹기도 했습니다. (이○○1).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에 걸렸으나 약을 쓰지 못하고 맨 풀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너무도 배가 고프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할 것 같아 중국으로 돈과 약을 얻어가려고 도강하였으나 나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임○○).

주지한 바와 같이 북한청소년들은 극심한 식량난 앞에서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의 이동 자유권을 허가하지 않아 생존형 상행위를 비롯한 불법 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 직면해 있다.

4) 학교 붕괴

북한청소년들은 식량난 속에서 생존문제와 함께 교육받을 권리 역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상당부분 교육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며, 굶주림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는 청소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교사들 역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자주 결근하면서 학교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7> 자녀가 굶주려 결석했던 경우

굶주려 결석한 경우	사례 수(개)	비율(%)
자주 있다	317	75.5
가끔 있다	8	1.9
없다	3	0.7
무응답	92	21.9
합계	420	100.0

* 자료: 좋은벗들, 2001 : 39쪽.

좋은벗들의 2001년 조사에서 “북한에서 자녀가 굶주려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주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5%에 이르렀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교원들도 결근을 하는 상황에서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식량난 이전에 이루어지던 보충수업은 불가능하였고, 정규 수업시간조차 오전 수업만 하고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식량난 이전에는 무상으로

배급받던 교복이나 학용품도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개인의 부담으로 넘겨졌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이나 연필 등의 학用品을 살 수는 없었고 결국 아이들의 결석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종이 부족 역시 심각했기 때문에, 교사조차 교과서가 없어 서로 돌려 보며 학생을 가르치기도 한다. 어린 아이들이 가는 탁아소나 유치원에서도 식량난 이전에는 부모가 미리 배급표를 맡겨 놓으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와 간식도 주었지만, 식량난 이후에는 간식이 없고 부모가 도시락도 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생활은 공부보다는 다른 돈별이가 우선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니까 공부는 뒷전입니다. 학교에 결석을 해도 선생님이 무어라 하지 않습니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해 봐야 성분이 불량하다고 해 대학교도 못갑니다.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농촌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강○○).

... 학교 수업이 끝나면 농촌 동원하여 일을 합니다. 모내기, 풀뽑기 등의 일을 합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결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일이 있거나 소토지(개인이 경작하는 토지)의 논밭 일을 할 때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결석을 하면 학급 교실의 뒤에 세워 놓거나 물질적 제재를 주기도 합니다. ... 북한의 학교에서 공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1고등학교를 갑니다. 사는 곳 근처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곤란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

학교생활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 5월부터 6월중순까지는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김매기, 모내기 등의 일입니다. 또한 소래에다 똥물을 가져가 밭에 뿌리기도 합니다. 거름이라고 뿌립니다. 분조장이 몇 번 가져왔는지 점검을 합니

다.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결석은 아프거나 먹을 것이 없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씩 벌을 서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또한, 종이부족으로 교과서와 공책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학교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평양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1990년 이후 새교과서가 거의 보급되지 않아 상급 학생들이 쓰던 교과서를 학습단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학교에서 교과서는 입학할 때 타는데 두 사람 당 한권씩 받고 선배들이 쓰던 것을 받기 때문에 헐었고 어떤 책은 페이지가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

책은 까만 책을 두 사람당 한권씩을 나누어 주는데 선배들이 보던 것이라 찢어지기도 하고 너털너털한 것도 있습니다. (김○○).

윤여상의 중국내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탈북 1-2년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거나 떠돌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11세 임에도 학교에 입학 경험이 없어서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여상, 2002. 11). 교원들 역시 식량배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소명보다 식량을 구하는 일이 절박한 현실의 과제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식량난으로 인한 교육붕괴는 북한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상실로 이어져 향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5) 인권 위기

북한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는 다른 아닌 식량권과 생명권의 위협이다. 10년간의 식량난과 총체적인 인권의 위기상황에서 정치시민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이다. 주민 대다수가 생존 그 자체를 목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에 ‘식량권’이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노옥재, 2003).

<표 III-8> 조사대상자의 총 가족 구성원 중 연령별 사망자 비율

(단위: 명, %)

연 령	인원 수	사망자 수	사망자 비율
9세 이하	1,092	442	40.5
10 대	1,988	328	16.5
20 대	1,410	111	7.9
30 대	1,498	103	6.9
40 대	1,146	133	11.6
50 대	1,004	369	36.8
60 대	1,361	1,052	77.3
70대이상	432	392	90.7
무 응 답	196	61	31.1
합 계	10,127	2,991	29.5

※ 자료: 좋은벗들, 1999c : 185쪽.

1999년 조사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 전체 인구 중 약 3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르는 것이다. 이 중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전체 사망자 수 2,991명 중 10대까지의 아동 사망자 수는 770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

의 25.7%를 차지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이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식량배급 사회에서 식량배급 중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식량난은 대량의 아사자, 식량난민(북한이탈자) 및 꽃제비의 대량발생, 어린이와 노약자의 높은 사망률로 나타났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영양실조와 만연한 질병과 저발육 상태, 사망과 유민에 의한 가족 붕괴, 이로 인한 아동 유기, 도둑과 폭력의 난무 등 근본적인 사회 가치관의 동요와 붕괴로 비인권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연출되었다. 이러한 삶의 조건에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찾을 수도 없거니와 사회적, 경제적 인권조차 요원한 상태이다.

인권이라는 말은 남한에 와서 처음 듣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합니다. (안○○1).

… 자유는 북한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소년들도 큰 죄를 지으면 소년교화소(소년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여행, 이사, 신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박○○).

과거 북한의 인권문제는 식량난 이전에도 여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되었으나 주로 정치적, 시민적 권리 영역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런데 식량난을 기점으로 인권문제의 성격과 수준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다. 식량난이 만성화되어 긴급구호에서 빈곤타과의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인도적 지원은 인권 개선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인이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남한 정부와 국제 사회의 식량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4. 시사점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여러 영역에 걸쳐 상호 영향을 미치며 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적, 사회경제적, 정신적 차원에서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구제가 필요하다. 법적구제를 위해서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과 함께 유엔 등의 유관 국제기구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월경해 온 북한이탈 청소년의 처리에 보다 인도적인 ‘관여’를 꾸준히 촉구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NGO들의 효과적인 연계가 필요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은 원칙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책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중국의 ‘관여’ 역시 중국 정부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내외 NGO 등에 의한 북한청소년에 대한 법적 구제의 지원은 담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야 할 분야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주변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내외 NGO들에 의해 활발한 대북 지원이 바로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지원의 한계상, 항구적인 지원이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일시적인 임시방편의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확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적 안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청소년들의 정신적 안정 문제는 지금까지 그다지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필요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인도적인 지원은 결코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완결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인 물질적 지원이 당장 필요한 것만큼이나 정신적 안정의 지원 역시 시급히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원 분야이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 정신적 치료와 쉴 수 있게 하는 요양시설의 공동건설 및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의 지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지원될 때, 비로소 인도적 지원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IV.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태 및 교류·협력 사례

IV

1.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영향력 분석
2. 국내외 NGO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동향
3.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
4.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

IV.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태 및 교류·협력 사례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라는 설정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의 결과 남북한 주민들에 내재된 이질성을 극복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적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 동포애를 체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까지도 짊어져야 할 남북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청소년 교류의 의미도 민족공동체 형성이란 측면에서 절대 과소평가될 수 없다. 통일의 길이 분단 상태의 극복과 해소라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 과정상에서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교류는 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한 절차적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내외 NGO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동향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 그리고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1.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영향력 분석

탈냉전 이후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인도적 위기 상황이 급증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져가는 가운데에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활동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화

되어 왔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북한내 폐쇄적인 통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하여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저하되고, 재원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적 지원에 따른 원조 피로현상(donor fatigue)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구호체계의 변화 경향에서 지원사업의 중립성과 개별국의 주권보호에 대한 관심보다 인권보호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권리와 의무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평양에 상주하던 국제 NGO들이 철수를 단행하면서 북한내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개발지원이 수혜국 주민들의 복지 및 안정에 실제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식량지원의 전용과 배급의 투명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되었다.

지원수혜국의 정치 환경이 지원 목적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나 수혜국의 체제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인도적 지원의 중요한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도전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북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고려는 처음부터 인과관계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분배와 모니터링의 문제와 지원과 개발의 갈등도 동시에 파생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특징은 다른 위기 지역과는 달리 북한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큰 물피해대책위원회 등 공식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총괄 조정하고, 북한의 중앙배급제를 통해 분배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이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이 아닌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중앙배급제를 대신하는 등 북한권력체제의 정치적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도적 지원활동의 기본원칙(지원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분배의 투명성 등)에 제약을 두면서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봉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배급의 투명성 문제는 실제 전체적인 식량의 수급량보다는 청소년을 비롯한 특정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이 이루지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늘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왜냐하면 식량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특정계층의 식량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이 곤란하다는 것이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 분배가 특정한 계층에 의해 매집되었을 경우, 절대량의 식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층을 비롯한 일부 계층은 기근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가 대북지원과정에서 인도주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북한 당국은 자신들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이금순, 2003 : 60). 1998년 10월 국경없는 의사회가 철수하게 되면서 지원물자의 전용 의혹을 제기하자 인도주의의 협조를 파탄시키려는 허위보도로 간주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국제사회의 NGO는 긴급구호 사업을 통하여 폐쇄적인 북한 사회로의 진입을 시도하여 국제 사회가 직접 체험하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제한적이지만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반면 북한은 처음부터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사업의 성격을 정치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지원물품은 최대한 확보하되, 주민접촉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고 그들에 대한 유엔기구나 민간단체의 접근을 최대한 봉쇄하는 전략을 구가하였다.

북한이 엄격히 통제하는 배급망 속에서 지원을 주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입장도 북한과 협조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고, 북한 주민들도 배급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수록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형성하여 인도적 지원상황은 북한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식량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을 통제하면서 여전히 NGO는 북한정권을 신뢰할 수 없는 정권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북한은 NGO가 제국주의의 의도를 갖는 트로이 목마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왔다(정옥임, 2004 : 5).

인도적 지원의 목표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인 평가지표는 과연 인도적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느냐는 점일 것이다. 즉, 북한의 경우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식량지원은 무의미할 수 있으며, 의료지원 및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 단체들이 식량 지원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긴급 구호보다는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두지만 북한은 식량지원만 고집한다. 의료분야에서도 국제사회의 NGO는 의료지원체계에 개입하고자 하지만 북한은 자체 의료보건체계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단순한 물자 지원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해 오고 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성격 전환의 배경에도 식량지원과 긴급구호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측의 조작 방지를 위한 정치적 고려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지원주체와 지원에 의한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수혜자가 지원의 목표와 방식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라는 인도적 지원의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는 계속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NGO는 북한사회가 외부세계를 만나는 창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사회로 진입하는 소통로의 역할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80년대 동서독을 비롯한 서방지원국들의 동구권에 대한 지원을 둘러싼 동서의 갈등을 거울삼아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가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전통의 경험에서는 지원을 비정치화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도 서방의 정치적 지원 동기에 대해 의심하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동구사람들은 점차로 서방에 대한 초기의 기대가 식어지면서 서방의 지원을 의심하고 이중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며 서방에 대해 잠재하던 ‘악마’의 이미지가 되살아나면서 초기 통합력을 상실하였던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국내외 NGO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동향

1)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고 기초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구호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청소년간 교류·협력의 확대, 이로 인한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회복, 점진적인 적대감 해소와 긴장완화, 나아가서는 민족공조와 평화번영의 기로를 여는 과정으로써도 이해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적극 앞장선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좀처럼 풀지 못했던 대립과 갈등, 전쟁과 분단 50년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흔들여 놓는데 기여하였다. 협력의 토양에서 신뢰가 싹트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남북간의 관계도 제도적 교류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유수, 2004 : 16).

이러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한반도를 둘러싼 민감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남북간의 가장 안정적인 교류를 보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 청소년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편, 꾸준한 지원에 근거한 상호 신뢰가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지원은 보다 본격화되어야 하는 측면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대북 지원 추진의 논리를 재정립하고 국민적 합의 절차를 확대하면서 ‘남남갈등’의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남북화해정책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 소위 ‘퍼주기 논란’은 거시적 수준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소모적 이념 정쟁을 유발시키며 인도적 지원은 물론 남북화해와 신뢰를 부분적으로 훼손시키는 상황도 유발하였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그로 인해 물꼬를 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는 현실주의적 안보와 정보 공여의 기능 및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정옥임, 2004). 특히, 대북 NGO 지원사업과 교류사업은 서해 교전과 북핵 위기 속에서도 계속 추진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빈번한 왕래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립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는 정보제공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접촉 안내기관이 늘어나고, 사업단위와 지역에서의 접촉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북한 체제의 일선 현장 단위가 남북 교류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대북 지원 사업은 북한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살리고, 폐쇄적이고 통제받아 왔던 북한 주민의 대외인식과 대남의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룡천역 폭발사고 후에 보여준 북한의 현장공개와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호소는 그동안 북한 체제의 경향과는 달리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대북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관계와 인도적 지원을 구분하면서 소규모의 지원이라도 동참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앞으로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 인식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연철, 2004 : 4).

이런 점에서 기존 인도적 지원의 쟁점은 퍼주기 논쟁보다는 지원방법의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더 중요해졌으며, 지원 방법론을 둘러싼 본격적인 정책 대결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표 IV-1> 민주평통 2004년 제1차 사이버설문조사 결과

설문항목	응답 항목	결과(%)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규모	지금보다 확대 추진	59.0%
	현재 수준 유지	33.7%
	지금보다 축소 추진	4.8%
	잘 모르겠음	2.5%
북한어린이 대상 분유보내기운동 동참의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77.2%
	좀 더 생각해 보겠음	19.0%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음	3.8%

※ 자료: 민주평통사무처(2004). 제1차 사이버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04. 3. 3(수) ~ 3. 16(화)
- 조사참여 : 홈페이지 회원가입 네티즌 522명
 - 성 별 : 남자 304명(58.3%), 여자 218명(41.7%)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규모는 지금보다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응답율이 59%에 달하고 있다. 또한, 북한어린이 대상 분유보내기운동 동참의사 역시 77.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전히 대북지원 물품의 군수물자 전용 의혹과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찬반 태도에서 많은 국민이 찬성의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어린이를 비롯한 취약 계층 대상의 전문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오히려 통일과정의 남북협력, 민족의 장래를 위한 장기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다.

2) 국제 NGO의 인도적 지원 실태

(1)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과 식량 지원

북한 당국은 1990년에 접어들어 식량난의 실태를 인지하고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유발되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유보적 위기 처리기간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점진적으로 갖게 되었다.

1995년 여름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유엔 인도지원국(UNDHA)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접수시켰다. 폐쇄적인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내부 실정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던 북한으로부터 극심한 자연재해를 이유로 한 긴급구호 요청이 들어오자,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국제기구³¹⁾들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배급 상황을 조사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인도적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1995년 이후 2003년 말까지 유엔합동호소에 의해 북한을 지원한 금액은 13억 6,072만 달러에 이르며, 유엔 기구를 통한 주요 원조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이다.

31)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농업기금(IFAD) 등이 있다.

<표 IV-2>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1995.9-2002.12.31)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70	79.5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9, EU 860 등
3차 (97.4~97.12)	18,439	15,781	85.6	미국 4,537, 일본 2,700, 한국 2,633, EU 2,752 등
4차 (98.1~98.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EU 1,380, 한국 1,100, 캐나다 395, 노르웨이 239, 이집트 280, 호주 132, 체코 2 등
5차 (99.1~99.12)	29,208	18,980	65.0	미국 17,50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호주 270, 노르웨이 200,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00.12)	31,376	15,263	48.6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01.12)	38,398	24,780	64.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5, 스위스 222, 노르웨이 212,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02.12)	24,684	21,979	89.0	미국 6,347,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노르웨이 176, 영국 171, 독일 135, 덴마크 103,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²⁾ (03.1~03.12)	22,936	13,304	58	
총 계	209,761	136,071	64.9	

※ 자료: <http://www.reliefweb.int>.

- *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지원을 약속한 금액도 포함됨.
2) 2003년 12월 31일 기준 실적임.

국제 사회의 대북지원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유엔은 1997년 10월 북한의 상황이 단순한 자연재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 하에 북한을 북

합위기상황(Complex Emergencies)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999년 2월 유엔이 채택한 Three Track Approach는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방향이 되어 왔다(민주평통사무처, 2003 : 16). 즉 북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단순 구호는 문제해결을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생존을 연장시키는 의미라는 점에서 복구와 개발사업<유엔개발계획의 AREP(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을 병행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역량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흐름으로, 유엔 기구들은 기구간 공동지원호소(Consolidated Appeal)를 준비하면서 민주적 과정을 거쳐 식량안보(식량지원, 농업복구), 보건(긴급한 공중보건 수요), 식수공급 및 위생, 역량 형성, 교육, 조정분야로 공동의 인도지원 활동계획을 작성하고, 인도적 지원 원칙도 수립하여 왔다.

(2) 어린이와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

해외 대북지원 사업단체 중에서 어린이 및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 등이다. 이들의 지원활동은 35만 명 이상의 유아들의 기본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소학교와 고아원 어린이 65만 명에 대한 교과서 및 기초교재 지원, 그리고 1만 5천 개의 탁아소를 대상으로 60만 명의 어린이에게 교재를 공급하여 왔다.

또한, 북한정부와 유니세프는 2004-2006년에 걸쳐 3년 동안 진행될 새로운 협력사업에 합의하였다. 그 대표적 지원 사업은 조기아동발달, 어린이 질병 치료, 예방접종 강화, 모성과 어린이 건강 개선, 식수 공급 확대와 위생적인 화장실 설치, 교육의 질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의 질 개선 내용에는 교실 교재나 장

비 구비뿐만 아니라 생활기술훈련, 교수방법의 개선, 에이즈 예방 방법과 어린이 권리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125만 명을 위해 기본적인 학습도구와 교과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2004년도 유니세프의 북한 구호 총예산 규모는 12,766,960달러이며, 사업의 주요 대상은 5세 미만의 어린이 2백만 명 및 임산부 48만 명과 수유부 50만 명을 합한 여성, 어린이 1천5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귀옥, 2004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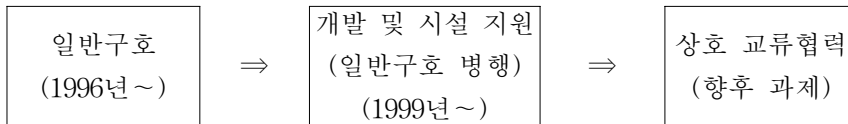
3) 국내 NGO의 인도적 지원 실태

(1) 국내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세

긴급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해외교포 또는 국제기구의 한인 간부에 의존하지 않고 남한의 민간단체들도 참여한지 10년째 접어들고 있다. 지금은 남북 정부 모두로부터 신뢰와 이해가 증진되고 신뢰가 쌓여 민간단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사업 영역을 전문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국제정세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북쪽에서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아사 직전의 북한 주민들에게 구호차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주민 전체의 생존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다.

대북지원의 초기에는 주로 식량, 의약품 등 긴급구호적인 물품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품지원 이외에도 농업분

야, 축산분야, 보건의료분야 등 지속적인 개발 지원 형태로 지원 방식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그림 IV-1]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 변화 추세(예상)

※ 자료: 박진원, 2003.

이는 분야별 지원협력을 안착화 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겠다. 농기계수리공장 공동운영, 제약공장 설립, 염소목장 지원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들 사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최소 몇 년간의 안정적인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인도적 지원의 효과는 물론, 북한 지역주민의 외부 세계와의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늘려가면서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IV-3> 주요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개발 및 시설 지원 현황

단 체 명	지원 분야	북측 파트너	남측 협력기관 또는 단체
굿네이버스	안과병원 신설	조선의학협회	라이온스 클럽
	젓소 목장 시설 및 운영	민화협	-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수액제 생산 공장	정성제약연구소	국제기아대책기구
	농기계 수리 공장	민화협, 농업과학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젓염소 시범목장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산란종계장		한국대학생선교회
월드비전	국수공장	민경련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업중앙회
	채소수경 재배시설		-
	씨감자생산시설	민경련, 농업과학원	-
한민족복지재단	빵공장	민경련	고려당(주)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콩우유공장/	민화협,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어린이영양증진센터		

※ 자료: 김귀옥, 2004 : 16.

(2) 어린이 및 교육지원 실태

유니세프의 지원 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남한 민간단체의 북한 어린이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유니세프의 사례에 따르면 어린이 지원 사업은 식량, 의약품 등 긴급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및 위생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 구축이나 어머니 관련시설과 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의 북한어린이 지원사업은 1997년 의사, 약사, 보건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북한어린이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 국내 북한지원단체 (국내에 지부를 둔 국제기구까지 포함하여) 20여 기관 가운데 북한어린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민간단체는 8개 기관이다. 각 단체들의 지원 내용과 방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4>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 현황

단 체 명	지원 내용	지원 방식
굿네이버스	우유급식	젖소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우유 공급
	육아원 시설보수 및 급식 지원	전국 14개 육아원을 대상으로
	교육용품 지원	시청각교육 기기 등 교육기자재 지원
남북나눔운동	분유 지원	대량 지원을 통해 다수 어린이에게 혜택 시도
	의류 및 생필품 지원	수시로 어린이 의류 및 생필품 대량 지원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콩우유 급식	0~2살 모유부족 어린이들에게 대용젖 공급
	어린이 의약품지원	구충제, 영양제, 항생제 등 대량 지원
	어린이영양증진센터 설립	어린이 영양 관련 질병 치료와 연구 실시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의약품 지원	제약설비 및 각종 어린이 의약품 지원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영양식 지원	영양식 제조용 밀가루 및 영양스프 지원
월드비전	국수급식	각 지방에 설치한 국수공장을 통해 국수 급식
한민족복지재단	빵 급식	평양 시내에 빵공장 시설, 매일 급식 실시
	소아과 병원 지원	기존병원 소아과 현대화 및 시설 보수 지원
한국 제이티에스	영양식 지원	라진, 선봉지역 어린이 시설에 직접 제조한 영양식 지원

※ 자료: 민주평통사무처, 2003 : 39.

대부분은 북한아동지원이라고 하면,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 건강을 유지하는 보건 분야를 비롯하여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분야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매우 빈약하다. 특히, 교육분야의 지원 사업은 거의 제외된 상태이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교육분야의 지원 가능성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의 모니터링 방북을 통해 북한의 소학교, 중학교 등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확인하면서 교육기자재 및 시설보수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후에 성금운동을 전개하여 교과서용 종이보내기와 교구, 교육용 컴퓨터 보내기를 시작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교육 교류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³²⁾

32) 교육기자재 보내기 운동차원에서 2003년 전교조 교사 100여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교사 상봉이 이루어졌고, 2004년 7월 금강산에서는 전교조, 한국교총, 한교조의 교원 400여명이 참가하는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가졌다.

<표 IV-5> 굿네이버스 교육기자재 대북 지원 현황

지 원 년 도	지원 일자	지원물품	지 원 경 로	수취인
2003년	10/16	어학실습기자재 1세트 특별활동기자재 약기 24종 교과서용 종이 85톤	한국 인천항 → 북한 남포항(선박)	조선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10/26	교과서용 종이 25톤 특별활동기자재 약기 6종		
2004년	3/26	교육용 화이트 보드 100개	한국 인천항 → 북한 남포항(선박)	조선 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7/7, 7/14	교과서용 종이 496.8톤		
	8/20	교과서용 종이(표지) 6톤		
	4분기	교과서용 종이 추가지원 및 보드마커 지원 예정		

※ 자료: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대북협력팀(2004.9.22 기준).

<표 IV-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교육기자재 대북지원 현황

지원 년도	지원 일자	지원기관	지원물품	지 원 경 로	수취인
2003	1/15	전교조	교과서용 종이 120톤	한국 인천항 → 북한 남포항(선박)	민족화해 협의회
	8/31	전교조	교과서용 종이 22톤		
2004	1/19	전교조	칼라TV 21' (DVD일체형) 250대	단동-신의주	
	1/26	남북학술교 류협회준비 위원회	책상 200개, 의자 200개, 책장 10개	한국 인천항 → 북한 남포항(선박)	
	8/28	교총	교과서 260톤	한국 인천항 → 북한 남포항(선박)	

※ 자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2004.9.22 기준).

현재 북한은 교과서 제작용 용지, 어학 학습기, 교육용 컴퓨터 등과 같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기자재 지원요청을 여러 경로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부가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교육용 컴퓨터의 경우, 우리 주변에 남아도는 중고 컴퓨터를 수집해 놓고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 586이상의 컴퓨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바세나르 협정³³⁾ 및 미국 수출관리령 등에서 비회원 국가에 대한 486컴퓨터 이상 기종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

대북정책의 변화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급격한 진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남북 청소년 교류와 협력 또한 이 시점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분단의 지속은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어쩔 수

33) 냉전시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통칭 코콤)를 대신해 무기관련 수출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협정이다. 코콤은 구미 16개국과 일본이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맺은 군사기술·전략물자 수출 규제협정이었는데 1994년 3월에 폐지되었다. 바세나르협정(통칭 신코콤)은 코콤과 달리 러시아연방·우크라이나 및 구동구권과 개발도상국까지 참가하는 국제적 수출관리체제로, 1996년 7월 빈에서 열린 설립총회에는 33개국이 참가 하여 협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 1일 발효되었다. 규제대상은 무기 및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기술로 총 110여 품목이다. 가맹국이 비 가맹국에 대한 대상품목 수출을 허가한 경우 자발적으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판단은 각국에 맡겨져 있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별칙도 없다. 규제대상국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한 이란·이라크·리비아·북한이 사실상 상정되어 있다. 한국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없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로 인해 남북간의 청소년 교류 또한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극히 제한된 영역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교류를 제외한 그 밖의 교류들은 불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연령적 지위가 지니고 있는 순수함의 의미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 보다 많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일 수 있다.

여기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변화되고 있는 남북 교류관련 법·제도와 청소년 교류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

(1) 민간단체 중심의 합법적 교류·협력

그동안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은 사회문화분야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지원계획」, 「정당차원 대북교류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정부차원의 제도화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이루었다.

3.1절 민족대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민족평화축전 개최 등 대규모 방남 행사와 평양실내체육관 개관행사, 8.15 남북공동행사, 평양노래자랑 등의 방북행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청소년층의 참여가 있어 왔다. 특히,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에는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2003. 8.29)를 개최하여 북한응원단과 남한대학생이 하나되는 문화공연이 이루어졌다.(통일부, 2004). 동시에 8.15 남북공동행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성사됨으로써 교류행사가 일회성·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점차 지속화·정례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교조, 방송인, 의사, 청년학생 등 참가계층이 더욱 다양화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에 청소년층의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 성사된 3D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등 영상물·출판물 협력사업의 강화는 남북 청소년간의 간접적 교류 모델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시 북측선수단 참가관련 입장 번복, 제주 평화축전시 예술단·취주악단 불참 등 북측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 차이 등은 앞으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성사된 남북 청소년 교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들어 청소년분야의 교류가 실제로 성사된 사례는 적었지만, 타 분야처럼 남북간 대학생교류 신청은 연도별로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타파를 핵심 이슈로 주장하는 한총련 등의 불법적인 통신 및 서신을 이용한 교류가 많았던 1980년대에 비하면, 1990년대의 교류는 어느 정도 제도권내로 진입하는 과도기 현상을 보였다(길은배, 1999 : 34).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통일원에 접수된 청소년분야의 대북교류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V-7> 1991-1993년 대학생 대북교류 신청 현황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성 사	성사율
1991년(건수)	11	6	5	0	0%
1992년(건수/명)	8(12)	6(6)	2(6)	0	0%
1993년(건/명)	10(28)	5(14)	5(14)	1(2)	20%

※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2 : 32, 29 ; 1994, 36.

1991년은 신청과 승인, 불허 건수에 비해 성사된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당시의 쉽지 않았던 남북관계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에 따라 남북왕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의 핵문제, 간첩단 사건 등의 장애 요인이 작용하여 1991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내용별로는 당국간 회담차원의 왕래 이외에 경제분야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한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방문 및 남포공단투자실무조사단 파견 등 경험 목적의 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 핵문제, 간첩단사건 등 남북 현안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경제계 인사의 교류도 중단되었다(길은배, 1999 : 36).

1993년에 실시된 대학생교류의 특징은 ‘연·고전에 김일성대 학생 초청’과 같이 총학생회 차원의 신청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생교류가 동서 이념갈등의 종식 및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점차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의 대북 교류·접촉 총신청 건수는 10건으로 1992년도의 8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성사는 승인된 5건중 1건으로 1992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사 사례는 제10회 아시아육상경기 참가 북한선수 안내 및 통역을 위하여 장선덕(필리핀 마닐라 대학) 등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1993년도의 남북인적 교류는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정체국면을 맞은 시기이다. 그러나 제3국에서 경제인들의 접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은 우리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방북초청장을 계속 발급하는 등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남북교류가 추진되었다.

1994년도의 남북관계는 경색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추진 합의(94. 6. 28), 김일성 사망(94. 7. 8), 미·북 제네바 합의(94. 10. 21),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94. 11. 8) 등 일련의 남북 상황 전개에 따라 교류·협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길은배, 1999 : 39-40).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으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도 한층련을 비롯한 불법·이적단체들의 FAX를 통한 교류가 주를 이루었지만,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교류 승인을 받고 성사된 청소년분야의 교류 사례도 있다. 양원채(고려대 독문과 3) 등 전국 대학원리연구회 학생대표 26명은 20여개 국에서 17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한 「제2회 세계학생지도자 과학평화회의」(6. 21-26, 북경)에 참석하여 김철순(김일성종합대 철학 4)을 비롯한 북한 대학생 19명과 교류하였다. 이와 같이 1994년에는 학술, 문화·예술, 종교, 언론·출판 등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부진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교류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1994년의 교류 특징은 언론분야에서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의 향방과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관심고조로 방북취재를 위한 신청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3배 정도 증가하였고, 종교분야에서 천도교, 대종교 등의 대북접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95년도에 성사된 청소년 교류는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주최로 북경에서 2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제3차 세계대학생 평화

세미나」를 들 수 있다. 세미나에는 남한 대학생 177명, 북한측 대학생 53명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청소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세계일보, 1995.2.7). 특히, 남북 대학생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1분과에 함께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또한, 남북 청소년단체 대표들의 비공식 접촉도 성사되었다.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95북경 동아시아 청소년 지도자 회의」(10. 8-11)에서 우리측 대표단 김집 단장(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과 북한측 대표단 백석 단장(사로청국제부장)이 비공식 접촉을 갖고 남북간 청소년 교류 및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남북 청소년교류 및 공동행사 개최와 관련한 제의는 수차례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오종원(원광대 원불교학과) 등 6명은 남북 청소년 공동 국토순례를 제의하였고, 권태환(청년포럼 대표)도 남북청년포럼 공동개최 협의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1996년에는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4월 18일부터 미국 버클리대 한국학위원회가 주최하는 「제5차 코리아 평화통일심포지엄」에 남북 대학생이 만나 교류하였다. 이 교류는 버클리대가 「한민족의 동질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4월 18일부터 20까지 개최한 심포지엄에 남북 학생대표들을 초청, 양측이 동의함으로써 성사되었다. 남한에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여성오(23세)와 총학생회 국제교류담당 김재성(26세) 등이 참가하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대 학생대표 권호웅 등이 참가하였다(중앙일보, 1996.4.21 ; 한국일보, 1996.4.19).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남북 대학교육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남북한 대학 총장회담」을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한국청소년육성회(회장: 이기남) 등 2명은 남북 청소년지도자들의 북한방문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1997년에는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남북간의 인적교류는 전반적으로 경색되었지만 상황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됨에 따라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접촉도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길은배, 1999 : 47-50). 1997년도에 성사된 청소년분야의 공식적인 교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청년학생평화세미나」에 김봉태(세계평화청년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대학원리연구회 동아리소속 학생 80여명과 관계자 등 200여명과 북한측 대학생도 참가하였다.³⁴⁾ 또한, 아마바둑을 통한 청소년 교류로, 일본 홋카이도(북해도) 삿포로시 선플라자에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진 제19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서 남한 대표와 북한대표인 문영삼(18세) 7단간의 접촉이 있었다. 반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7월 16일 북한 김일성종합대와 가칭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회복을 위한 서울대·김일성대 상호교류’를 추진³⁵⁾하였으나, 정부측의 공식적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사되지는 못했다. 이 외에도 북한은 청소년 교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남한 대학들에

34) 세계평화청년연합과 대학원리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 30개국에서 3백 30여명이 참석해 「21세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4박 5일 동안 남북 대학생들은 통일과 관련한 학술회의와 체육·문화행사 등을 가졌고, 특히 「고향의 봄」, 「반달」, 「아리랑」 등의 노래 및 제기차기, 윷놀이, 닭싸움 등 민속놀이를 함께 하였다.

35)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총학생회 이재성씨는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 서울대와 김일성대의 개교기념일에 맞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양교 상호교류기간으로 설정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학생과 교수들이 양교를 상호방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화일보, 1997.7.16).

대해 자매결연 및 공동학술토론회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접촉과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다수의 제안³⁶⁾을 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방북자 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방북자의 직업도 다양하여 기업인, 종교인, 언론인은 물론 작가, 시민운동 관계자와 예술인 등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교류의 확산으로 남북 대학 및 대학생들 간의 교류도 활기를 띠었다(길은배, 1999 : 51-54). 성균관대학은 5월 개성에 있는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분단 50년 이래 최초로 남북대학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서울신문, 1998.9.19 ; 경향신문, 1998.5.9). 남북대학간 자매결연을 통한 학술교류는 민족교육의 동질성을 상호보완하고 남북대학간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고려대는 통일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 받아, 12월 6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북한대학 스포츠 관계자와 만나 ‘남북한 대학 스포츠교류’를 논의하였다. 최근 남북 대학간의 스포츠 교류를 제의한 것은 고려대가 처음으로, 여기에는 고려대 체육위원회의 김성복 위원장, 박한 부위원장, 권오식 과장 등 3명이 참석하였다. 김성복 위원장은 “야구나 럭비 등 북한대학에 없는 종목을 제외하고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 태권도, 스키, 쇼트트랙 등 고려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동종목이 교류대상에 해당된다”³⁷⁾고

36) 원산경제대학 학생위원회는 1997년 11월 12일 한림대학교에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12월 1일까지 20여일 동안 무려 7개 대학이 남한 대학들에 토론회, 자매결연, 공동학술회의, 공동축구대회 개최 등을 제의했다. 원산농업대학은 강원대학교에 “우리는 한핏줄을 나눈 동족임을 확인하고 동시대 대학생으로서 이상과 포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공동축구대회를, 장철구 평양사업대학 여학생회는 11월 21일 경희대학교 여학생들에게 통일토론회를, 11월 23일에는 원산수산대학이 강릉대학교에 자매결연을, 11월 24일에는 원산의과대학이 관동대학교에 ‘관동팔경을 공동답사하자’고 각각 제의했다(세계일보, 1997. 12.4).

밝혔으나, 이후의 성과는 없다. 이 밖에 한국비디오선교회는 8월 중 중국조선족인민정부 문화체육부의 주선으로 북한어린이들을 연변으로 초청, 한·중·북한 어린이 친선축구 경기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³⁷⁾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사회문화 및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진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이나 1999년 8월에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던 “금강산 수련 활동”, 2000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 등처럼 점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가 새롭게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2) 민간단체 중심의 비합법적 교류·협력

199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해오고 있는 남북 교류의 전반적 경향성과 비교해 볼 때, 앞서 지적하였듯이 한 문화의 중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남북 교류와 협력은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1990년대 들어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제도권의 불법적 교류가 많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1990년 이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남북 교류 사례들 중 비합법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특히 이러한 사례를 대표하고 있는 대학생 중심

37) 고려대는 한국대학 중 처음으로 1942년 7월 20일에 고려대 산악회 전신인 보성전문 등반팀 10명이 백두산에 오른 것을 기념해 ‘백두산·한라산 남북대학생 합동등반’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38) 이 친선경기에 북한 측에서는 나진·선봉지역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중국은 연길시의 초등학교 대표단이 참여할 계획이었다(국민일보, 1998.3.26).

의 비합법적 교류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1991년도에는 전대협과 해외범민련을 매개로 한 2원적인 대북 접촉시도가 새로운 대북접촉 형태로 등장하였다. 전대협을 주축으로 한 소위 자주교류 투쟁의 일환으로서 해외 범민련을 매개로 하여 FAX를 통한 불법적 대북접촉도 6건에 이른다.

<표 IV-8> 1991년 FAX를 통한 불법적인 대북접촉 사례

소 속	내 용	일 자
서울시립대 수학과	김일성대 수학부	91. 8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김일성대 외국어문학부	91. 8
고려대 농생물학과	계룡상대학	91. 10 대자보 확인
세종대 국어국문학과	송도대학 조선어문학과	91. 9 대자보 확인
전대협	조선학생위원회	91. 10 한양대 대자보 확인
성신여대 화학과	조선학생위원회	91. 9 대자보 확인

※ 자료: 통일원 교류협력국, 1992 : 34 참조.

1992년에는 전반적으로 남북교류가 저조하였는데, 대학생들의 경우 특히, 법 절차를 무시한 일부 재야운동권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대북 접촉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1993년에도 대학생들은 여전히 정부창구를 이용한 합법적인 대북교류 외에 소위 「자주교류 투쟁」의 일환으로 북한학생들과 불법적인 통신(FAX) 연락을 취했다.³⁹⁾ 특히,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 등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전국 57개 대학에서 1백 56차례에 걸쳐 북한과 불법통신교류⁴⁰⁾를 해왔다. 또한 대경총련(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39) 전대협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총련」은 1993년 5월 28일 불법적인 국제전화선을 통하여 「법청학련 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남북의 교류·협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0) 통신교류 내역은 FAX 교류가 1백 16건, 전화 2건, 서신 38건 등으로(경향

은 1994년 8월 5-6일간 주최하는 「통일축전」에 함경남도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을 초청하기 위하여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이 서신에는 “김일성 주석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보냅니다”로 시작, “대경총련-함경남도 학생위원회의 통일축전을 제안합니다”로 적혀져 있는 등 불법적 남북교류를 추진하였다(길은배, 1999 : 39-41).

1995년 4월 5일 전남대 총학생회는 FAX를 통하여 북한 김책공대와 일본 조선대 대표를 가을 용봉대동풀이에 초청하였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북한 평양경공대학 학생위원회는 3월 13일에 1991년 4월 분신한 전남대생 박승희에게 식료공학부 식료가공학과 졸업증을 수여한 내용을 전남대와 FAX를 통하여 주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8월 14일 북한에서 열린 범청학련 「제1차 중앙위원회」 및 「민족공동행사」에 남쪽 대표로 정민주(22, 인천대 건축학과 3년 제적)와 이혜정(20, 카톨릭대 성심교정 회계학과 2) 등 여대생 2명이 베를린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장 최정남(26, 서울대 원예4 휴학)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6년은 한총련의 활동에 의한 비합법적 남북교류가 증가했다. 우선, 4월 27일 「충청지역 대학총학생연합」과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북한 대학생들과 공동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충청지역 총학련(의장: 설증호, 단국대 천

신문, 1994. 7. 2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학생 연대투쟁으로 통일의 마지막 장애인 미군을 축출하고 핵무기를 철폐하자(92. 3. 27),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제국주의 기치를 드높이자(92. 1. 8),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94. 7. 5), △전남 법대와 김일성종합대 법학부간의 자매결연 제의(93. 6. 9) 등의 내용이다. 또한 남북학생들의 FAX교류를 통해 결의한 투쟁의 방향은 주로 △북한 핵사찰 반대,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무조건 중지, △쌀시장 개방 금지 등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1994.7.23).

안캠퍼스 총학생회장)이 북한의 자강·양강도 학생위원회와 4월 23일부터 FAX를 통해 교신한 뒤 작성한 결의문에는 북·미평화 협정 체결, 한·미 군사합동 훈련 중지, 전쟁 고조하는 김영삼정권 타도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총련은 8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13일부터 사흘간 서울 연세대에서 열리는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북측대표단의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유세홍(25, 조선대 치의학 4년), 도종화(21, 연세대 기계공 휴학) 등 2명을 남측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1996년 8월 17일 공개한 「한총련의 이적-폭력실상」 자료에 따르면 한총련은 출범 이후 24차례에 걸쳐 FAX를 이용하여 북한과 불법 통신교류를 하면서 투쟁방향을 협의하고 1백 75종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1996. 8. 18). 북한과 불법 통신교류를 실시한 예를 보면 한총련은 8월 2일 북한 함북학생위원회와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골자로 한 공동결의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도에도 불법적인 남북 대학생들의 교류가 감소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조용주(24, 서강대 신문방송 3)가 한총련 대표로 파견되었다. 이 때 북쪽에서도 범청학련 북측본부 부의장겸 사무국장 김영도, 해외본부 공동의장 박구호 등이 참석하여 남북 연대강화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1998년과 1999년은 국내외 NGO에 의한 대북 교류·협력 제의가 증가하였다. 주로 인도적 지원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내 NGO의 대북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실제 성사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의 간접적·불법적 형태를 띠던 교류가 점차 직접적·공식적 형태로 제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길은배, 1999 : 51). 그러나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비공식적·불법적 접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범청학련 지도부는 6월 10일 「제9차 범청학련 통일축전 실무회담」 추진을 위하여 서울, 평양, 도쿄 사이에 FAX를 통한 문건 교환방식으로 회의에 참가하였다. 범청학련 등은 당초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제의를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불법적으로 FAX를 통한 서면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평가

남북관계의 변화는 1990년도를 전후하여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등에 있어서는 그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변동의 중심에서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계층인 청소년을 고려해 볼 때 그 교류의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최근 NGO 중심의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교류·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순수 청소년 민간단체에 의한 활동은 빈약한 실정이다.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변동 과정을 상정해 본다면 그 속에서 청소년 계층이 차지할 비중은 사회의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을 남북 교류에 있어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도는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의 당면한 문제

점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길은배, 1999 : 60-61 참조).

첫째, 청소년분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걸어온 경제 위주의 정책 구성 경향과도 관계되는 측면으로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조속히 긍정적 결과물을 산출해야 하는 공리주의적 조급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의 청소년관련 NGO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남북 교류는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 이념갈등 시대의 사회성이 반영된 것으로 NGO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낮은 관심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셋째,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이는 두 번째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역할과 위상을 제외시켜 온 그동안의 정책적 편협함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NGO를 통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북한 내 민간단체가 부재한다. 공산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볼 때 이 문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남북한 교류 노력은 더욱 활성화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한총련 등과 같은 일부 불법·이적단체들의 불법적·비공식적 접촉이 대 국민 인식을 악화시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인식 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념갈등의 폭이 지금보다 더 깊었던 1980년대와 1990년 대 초·중반기에 대학생 중심의 불법적 남북 교류활동은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지

금 이들 단체의 역할은 그만큼 어떤 방향으로든지 작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섯째, 남북한이 제의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가 항상 정치적인 색채를 띤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는, 소극적·미시적인 제안들로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부분 역시 이념갈등에 기인하고 있었지만 갈등의 폭이 완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 경향성에는 변화가 적었다는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주체인 정부와 학생, 북한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가 크다. 즉, 정부의 보수적 태도와 대학생들의 급진적 태도는 남북 교류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갈등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한 동안 이 문제가 남북 청소년 교류의 시행에 있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 요인은 앞서 제기된 몇몇 다른 요인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여덟째, 제3국을 통한 제한적·간헐적인 접촉이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환경을 크게 위축하고 있다. 이는 양 체제에 부담이 없는 국제사회 활동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제3국에서의 청소년 접촉은 현재까지 남북 청소년들이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고착화 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전체가 아닌 대학생 중심의 제한된 교류는 청소년분야의 교류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청소년 교류와 협력은 오늘날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남북관계의 화해·협력분위기 속에서 볼 때 아직도 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전환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통일은 그동안 남과 북이 상호 단절을 이루어 왔던 역사, 문화,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따

라서 문화의 중심축인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혹은 앞으로 담당해 나갈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이며 이해관계에 얽힌 관료적이고 공리적 태도는 한반도의 역사적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통일이라고 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그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남북 청소년 교류와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영역들로 확산되어나가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앞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주도나 성인주도의 교류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다양성과 순수성을 포함할 때 남북한 교류와 협력은 통일로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둘째, 남북 교류는 단기성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통일이라고 하는 과업이 절대 단기적으로 달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류·협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민간단체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문화속에서 차지하는 청소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또한 NGO라고 하는 비정치적 의도에 의한 활동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점은 앞으로 한국사회가 수행해 나가야 할 남북교류 또는 통일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교류와 협력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류의 영역과 활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 번 시행된 교류·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는 상호관계 영역을 사회의 각 분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교류관련 법·제도와 청소년 교류

그동안 남북 청소년교류의 이해는 법·제도적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강했다. 청소년교류의 성격과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특수한 남북관계를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문제는 남북 청소년교류 문제를 법·제도적 측면의 정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이해할 경우 교류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남북 청소년교류를 현행의 관련 법·제도가 규율하고 있는 이상의 불법적 시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남북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철학은 제도화·규범화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래야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진척사항이 담보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관련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류의 개념과 실제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련법 간의 상충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

먼저, 교류의 개념 속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남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정보나 메시지의 교환과정을 의미하는 ‘접촉’과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쌍방간에 특정 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을 경우 이는 접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접촉은 남북한 주민의 직접적인 대면 이외에 중개인 혹은 여타의 FAX, TELEX, 우편, 인터넷, 전화 등과 같이 통신수단을 통한 의사교환도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통일부, 2000 : 17). 왕래는 남한 주민이 북한지역(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통일부, 2000 : 23).

이처럼 교류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외연의 측면에서는 남북 청소년교류가 매우 넓은 영역에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내연의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남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정보나 메시지 교환과정”이라는 표현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나 메시지 교환이 법·제도적으로 가능한 ‘접촉’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의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남북 청소년교류를 관련 부처에 신청할 경우 ‘접촉’ 범위의 문제가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 획득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⁴¹⁾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관련법 간의 상충·모순으로부터 영향 받는 바가 크다 하겠다. 현행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국가보안법 제1조)된 법률이고,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남북교류협력법 제1조)된 법률이다. 이처럼 두 법률간에 상호 그 입법취지와 규제대상이 다르다. 물론, 현 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⁴²⁾로서, 전자를 위해서

41) 1991년 신청 11건에 승인 5, 1992년 신청 8건에 승인 6, 1993년 신청 10건에 승인 5 등의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42)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은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정

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헌법재판소, 1993 : 65).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 양 법체계는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에 명확한 일관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은 우리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관련 법간의 상충·모순점이 도처에 존재한다(제성호, 2003.9).

우리 법체계 내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민족동반자로 보는 객관적 구별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다. 그 결과 법적 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적지 않다. 더욱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관련 법의 기본정신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남북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혼란과 어려움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현재처럼 남북관계의 과도기적 이중성이 지속되는 한 남북 교류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당분간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병존하여 남북 교류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다만 언제까지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이를 고수하려는 태도는 통일지향론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의 남북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정치·군사적 환경과 교류·협력의 분리 추진 문제이다. 앞서 관련법의 상충·모순 문제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남북 교류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

된 「남북교류협력법」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로 남북 청소년교류는 당연히 이러한 환경에 종속되고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하겠다.

4.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

독일과 한반도는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 맥락에서 상이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시키려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교류와 관련하여 양 지역상황의 차이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화해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평화적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던 독일의 역사적 사례에 대한 연구는 유용한 작업이다. 어떠한 여건 하에서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요구되는지, 이들이 상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해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1) 서독 종교단체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

(1) 동서독 종교단체간 교류

역사적으로 동서독의 신교교회는 분단되기 이전에 하나의 교회조직, 즉 독일신교연합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로 존재했으며, 공동의 예배의식, 공동의 성서번역 전통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인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 다른 분야의 조직체 분리와 같은 상호 이질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신학적 측면에서 상이한 국가 및 사회체제 아래에서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Eins in Christus)였기 때문에 신자나 교회지도자들의 상호 의견교환·방문·물질적 지원 등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EKD는 1969년 동독신교연합회가 설립되어 분리되어 나갈 때까지 동독에도 전권위임자를 위임해 놓고 전독일을 관할하는 신교연합단체였다. EKD는 분단 초기부터 민족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통일이 곧 동서독 교회의 소망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서독 정부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개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동독주민의 대부분이 신교도였고, EKD만이 동서독 주민으로부터 공히 신뢰를 받았으며, 동서독의 지도층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이 작용하였다. 이 당시 교회는 공식문서에서 서독이 의식적으로 동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 “소련점령지역” 또는, “중부독일”이나 국호에 따옴표를 사용하는 대신 동독의 정식국호를 사용했으며, 서독정치의 전독일단독대표권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등 동서독 정치권 양측에 신중함을 기했다.

EKD의 활동은 베를린장벽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동서독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EKD는 분단극복의 일환으로 동서독이 참가하는 종교대회(Kirchentag)를 1949년부터 매년 혹은 격년으로 동서독을 번갈아 가며 개최했다. 그러나 1961년 베를린장벽이 구축되기 직전 서베를린에서 동서독 합동종교대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후, 더 이상 독일 전체의 만남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서독지역에서만 종교대회가 열렸다. 동서독 교회간의 접

축과 동서독 목회자간의 여행은 동독신교연합회가 1969년 EKD로부터 분리된 후에서야 비로소 확대될 수 있었다.

서독에서만 개최된 제한된 종교대회에서 민족통일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1980년대 초에 들어서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평화운동집회 형식의 종교대회는 다시 동서독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독일인간 대화의 광장이 되었고 1985년 뒤셀도르프 종교대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종교대회는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닌 평화문제를 주제로 하여 상당히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고 동서독간의 안보정책적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Helmut Zander, 1984 참조).

한편 동독에서도 종교대회 개최가 끊임없이 시도되었는데 비록 전국적인 신교도 모임은 없었지만 지역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호네커가 집권한 1970년대 이후부터 동독정부가 교회세력을 이념적으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시민사회의 잔재라고 규정하고 교회의 사회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인정한 것과 관련되었다. 신도수는 1977년 기준으로 신교도가 790만명, 구교도가 120만명으로 신교도가 월등히 많았으며, 1980년대 중반 서독의 추정에 의하면 신도수는 동독주민의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톨릭교회간 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카톨릭은 동독체제에서 교회의 구조가 바뀌기는 했지만 로마 교황청의 감독과 보호 아래 기존 서독의 관구에 소속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원래의 공통귀속성을 보존할 수 있었다. 로마교황청은 동서독 분단 이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교구의 운영과 주교회의의 개최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분단 직후 첫 조치는 동독이라는 국가의 탄생에 부응하여 베를린 주교에게 동독 지역 주교회의, 즉 “베를린 교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976년 4월 10일에는 이를 “베를린 주교회의”로 개칭하고 이 동독지역 주교회의를 서독지역 주교회의와 동급의 회의체로 인정하였다. 동독 카톨릭교회는 서독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바티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바티칸은 국가단위의 관구설정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관구설정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성서가 동일하게 번역되어 읽히는 동일언어 지역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동독 카톨릭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내 정치참여그룹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 교회 자체의 활동마저도 할 수 없게 되지 않도록 매우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서독 접촉을 하였다. 이들은 현존하는 사회주의질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며 동독정부와 타협을 했다. 따라서 서독 카톨릭교회와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접촉과 교류는 동독정부의 의구심을 자극하여 오히려 접촉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 아래 단기적이고 간헐적이며 개인적인 접촉을 주로 진행하였다. 서독 카톨릭교회 역시 목회자의 동독 자유왕래가 동독당국에 의해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동독보다도 제3세계나 기타 동유럽국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Giesela Helwig (ed.), 1985 : 715~728 참조).

(2) 서독 종교단체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

1950년부터 이미 서독은 많은 분량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동독주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1970년부터는 동독정부에도 지원하였다.⁴³⁾ 그 가운데 서독의 종교단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

43) 여기에 관해서는 *Deutschland Archiv*, 1990 : 328~330 참조.

다. 서독 종교단체는 특히 서독정부가 동독내 감옥에 수감된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구해내고 또 동서독으로 헤어져야 했던 이산가족들을 상봉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이른바 “인도적 노력”(humanitäre Bemühungen)을 대행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물론 서독 종교단체 자체적으로도 동독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였으며, 그 비용은 신도들의 헌금과 자체기금,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서독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조달하였다.

인도적 지원에는 서독의 신교교회는 물론 카톨릭교회도 참여하였다. 서독 종교단체가 추진한 대동독 지원은 동독교회 및 교회기관 유지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이었다. 동독의 종교단체들은 목회자의 봉급지불, 교회와 부속건물의 유지를 위하여 서독의 지원을 기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독의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회구제 및 자선사업인 Diakonie, Caritas는 서독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 서독 종교단체의 인도적 지원 덕택으로 총 12,000개의 병상을 가진 76개 교회병원은 동독이 정부 및 당의 고위인사들을 위해 운영하였던 정부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보다 훨씬 양호한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동독의 종교단체가 운영하였던 유치원, 요양소, 양로원, 교육시설 등에게는 서독의 지원이 커다란 의미를 차지하였다.

1957년부터 1990년까지 서독의 종교단체가 수행한 인도적 지원의 내용과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물 지원

기독교적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수행된 서독 종교단체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은 특이한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서독의 종교단체가 동독의 종교단체에게 현물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형태이다. 동독의 교회, 교회단체(Gemeinde), 교회부속시

설 등에게 직접 전달된 서독 종교단체의 물질적 지원의 내용은 다양하였다(Amin Volze, 1991 : 62~66 참조). 사랑의 선물꾸러미(Liebesgabenpaketen), 의복, 생활필수품 등이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단체들에게는 건축자재와 실내설비, 병원에는 대량의 현대적인 의료장비들이 전달되었다.

신교교회의 지원은 서독의 교회와 ‘후견지원 혹은 자매지원’(Patentschafts- oder Partnerschaftshilfe)을 맺은 동독의 교회 및 단체간에, 서독 EKD의 Diakonie기관들에 의해, 그리고 EKD의 Diakonie기관들의 중앙공급(Genex)⁴⁴⁾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7에서 1990년간 이루어진 이러한 현물이전 형태의 지원총액은 약 18억 서독마르크(DM)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서 자매지원 형식을 띤 지원이 가장 많은 13억9백7십만 DM을 차지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옷감, 식료품, 건축자재,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의료품, 서적 등이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 전달되었다. 자매지원을 위해 EKD의 Diakonie기관들도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으나, 서독정부는 이러한 형태의 지원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EKD의 Diakonie기관들도 직접적으로 대동독 현물지원을 행하였다. 1957년에서 1990년간 총 3억4천6백7십만 DM에 달하는 물품이 동독으로 전달되었고, 통일되기 직전에는 매해 2천2백만 DM에 상당하는 현물이 지원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의료장비, 종이, 건축자재 등이 주로 지원되었으나 <표 IV-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원물품이 다양하였고, 이는 동독이 얼마나 큰 물자난을 겪었는가를 반증해주기도 한다. 서독의 Diakonie 산하기관들

44) Genex 유한회사는 1957년 동독정부에 의해 동독주민을 위한 선물용역회사로 설립되어 원래 동독에서 생산하였으나, 이후 주로 서방측 상품을 공급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다. Diakonie는 Genex의 해외지사를 통해 대동독 교회지원용 물품공급을 발주하여 Genex가 물품을 동독으로 반입하도록 하였다.

은 이러한 물자들을 서독에서 구입하여 동독으로 전달하였다.

서독 정부도 Diakonie기관들의 현물지원에 동참하여 소요된 비용의 약 절반가량을 연방내독성(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의 예산 가운데 ‘항목 68521 전독일적 성격의 특별지원활동 촉진’(Titel 68521 Förderung besonderer Hilfsmassnahmen gesamtdeutschen Charakters) 예산으로 지원하였다. 정부는 또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현물지원을 내독간의 경제교류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거래세를 6%로 경감하였다. 동독은 물품반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반입을 허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표 IV-9> 1988년 서독 EKD의 대동독 현물 직접지원 내역

(단위: 백만 DM)

현물 직접지원 내역	금 액
37개 병원에 대한 의료 및 기술 장비	8,220,666.13
개별적 지원(병원의자, 승강기)	173,018.93
병원용 소규모 장비(재활장비, 청각보조기, 비디오, 세라믹오븐기 등)	348,242
오르간과 교회중 설비	596,898.50
인쇄용 종이	1,433,830.65
섬유	7,332.47
주방용기기(세탁기, 건조기, 세척기, 식기 및 수저, 마이크로오븐기, 커피기 등)	320,047.65
건축용자재(구리판, 아연판, 구리전선, 지붕용자재, 자물쇠, 시멘트, 벽돌, 기와 등)	3,461,729.86
온방용설비(온도계, 보일러, 연통, 화로, 환기용펌프 등)	1,877,320.64
위생용장비(욕조, 온수기, 화장실용기, 샤워기 등)	205,547.15
건축용 비계와 화물 승강기(부품 포함)	825,994.01

염료, 락커, 벽지	275,635.38
목재	287,633.45
공구(측량기, 절단기, 톱, 망치 등)	286,975.23
차량 및 부품(병원용 및 농사용 차량, 트랙터, 정원용 차량, 제설 차량 등)	241,212.56
전화기, 전화선 및 부품	1,121,255.76
가구(병원용 침대, 식탁, 사무용기, 각종 의자 및 서랍장, 찬장 등)	283,819.34
사무용 장비(복사기, 인쇄기, 녹음기, 타자기, 계산기, 컴퓨터 등)	708,040.71
바닥용 깔개, 카펫 등	15,368.36
전등 및 기타 조명기기	7,685.36
기타 장비 및 기기(전기기기, 산업용진공청소기, 풍력발전기, 교회창문용 보호기, 수영장용 온열기, 재봉기 등)	1,371,504.84
운송비	333,328
총 액	22,403,086.98

1959년부터 EKD의 Diakonie기관들은 취리히와 코펜하겐에 있는 Genex의 해외 지사를 통해 대동독 현물지원을 행하였다. 1959년에서 1990년간 약 1억3천만 DM(1981년까지 약 9천6백2십만 DM)에 달하는 물품이 Diakonie기관들의 발주에 의해 Genex를 통해 동독으로 지원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주로 차량, 산업용품, 휘발류, 비료, 종자 등과 같이 Genex가 통상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물품들로 구성되었다. 이로서 동독은 원하는 특정 물품을 싸게 Genex를 통해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카톨릭교회 역시 신교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행하였다. 신교교회의 자매지원에 상응하는 형태의 물품 지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는다. Genex 발주를 통한 대동독지원의 형태에 카톨릭교회는 다소 늦게 관심을 가졌으

나, 곧 이러한 형태의 지원이 신교교회보다 더 큰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카톨릭교회의 사회구호복지기구인 Caritas도 인도적 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까지 카톨릭교회의 대동독 현물 인도적 지원의 총액은 약 5~10억 DM으로 추정된다.

② A형 교회사업: 원자재 공급을 통한 재정 이전

다음으로 서독의 종교단체는 대동독 ‘원자재 공급을 통한 재정 이전’의 형태, 이른바 ‘A형 교회사업’(Kirchengeschäfte A: Finanztransfers durch Rohstofflieferungen)으로 인도적 지원을 행하였다. 동독의 교회나 교회단체들은 현물지원만 필요로 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목회자와 직원의 봉급 지급, 교회사업 수행 상에 필요한 지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이를 동독정부로부터 또는 자체적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독의 재정당국이 1956년 교회세를 폐지하였고⁴⁵⁾, 정부가 대교회 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였기 때문에 종교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⁴⁶⁾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부에 더 큰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었고, 교회단체가 그러한 요구의 목소리를 낼수록 정부와 교회간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동독의 교회단체는 달리 재정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에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서독마르크화(DM)의 직접

45) 동독의 교회들은 신도들에게 세금을 계속 부과하였으나 국가의 공적 서류에 의한 세금부과는 폐지되어 세금납부는 신도들의 자발성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로써 교회의 수입은 급감하였다. 동독 정부는 교회관련 시설들이 돌보았던 사람들을 국가보험에 의해 돌보도록 하였으나, 그 비용 조달이나 이들 을 수용할 시설물 건설 등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였다.

46) 예를 들어 동독 정부는 교회 목회자들의 봉급지불을 위한 지원규모를 2천만 동독마르크(M)에서 천만M으로 삭감하였다.

적인 이전(Transfer)은 생각할 수 없었다. 동독의 교회단체들에게는 외환관리법상 DM의 직접 수취와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동독정부가 자국의 동독마르크화(M)를 환율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DM과 1:1로의 교환을 주장하였고, 이를 동독교회가 수용할 경우 서독 교회단체가 지원한 지원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동독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독의 연방중앙은행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동서독간 경제교류를 위해 마련하였던 청산결재단위(Zahlungen in Verrechnungseinheiten; VE)도 베를린에 관하여 동서독이 합의하였던 베를린협정에는 부합되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56년 12월 3일 당시 동독의 수상이었던 그로테볼(Otto Grotewohl)과 서독의 신교교회지도자들이 만나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그로테볼은 동독 국가은행의 환율을 적용하여 M과 DM간의 1:1 교환을 다시 주장함으로써 결렬되었다. 그러나 1957년 다시 그뤼버(Propst Grüber)와 당시 대외무역 및 내독무역성 장관이었던 라우(Heinrich Rau)간의 협상을 통해 이른바 ‘A형 교회사업’으로 일컬어지는 특별한 형태의 ‘혼합이전’(Mischtransfer)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방식에 의하면 동독의 대외무역상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던 대외무역성은 서독으로부터 DM이나 VE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신에 물가의 현시세 만큼을 동독의 DM으로 환산⁴⁷⁾하여 동독의 교회기구 회계장부의 대변에 기입하고, 그 범위 내에서 동독교회는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서독의 신교교회를 위하여 서독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대표자가 원자재공급의 규모와 내용에 관해 동독의 대외무역 및 내독무역성⁴⁸⁾과 협의하였다. 동독은 1966년 이를 위한 전담기구로

47) 후일에는 다른 외화와의 교환가치로 평가된 M, 이른바 ‘Valuta-Mark’로도 환산 가능하게 되었다.

‘상업적 조정국’(Kommerzielle Koordinierung)을 신설하여 당시 차관이었던 골로드로프스키(Schlack Golodlowski)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대외무역성내 외환확보 전담회사인 KoKo가 신설된 이후 부터는 이 기구가 전담하였다.

동독은 내독간 교역을 통해 그리고 동구사회주의국가간 경제 협력체였던 ‘COMECON’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었던 원자재의 공급에 큰 관심을 가졌다. 미국산 코크스탄, 곡물로 시작된 원자재 공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해졌고 동독이 필요로 하였던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욕구는 큰 변동이 없었다. <표 IV-10>은 동독이 무엇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동독은 서독의 지원을 통해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 판매하여 외화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서독교회의 위탁자는 거래회사를 통해 원자재를 국제시장에서 구매하여 동독에 공급하였다. 해외물품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는 국제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내독간 무역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서독의 연방경제성은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오직 은만은 서독내에서 구매되어 내독간 무역임을 인증받아 세금 없이 반출한다는 증명서가 붙여져 동독으로 공급되었다.

<표 IV-10> A형 교회사업에 의한 대동독 원자재 지원

(지원허가 단위: 백만 DM)

지원 품목	1986	1987	1988	1989	1990
원 유	28.0	28.0	20.0	20.0	15.0
천연고무	24.2	19.5	17.0	12.0	12.0
중석농축물	10.0	10.0	11.5	12.0	12.0

48) 후일 대외경제성으로 그리고 1973년부터는 대외무역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아연농축물	10.0	10.0	7.5	8.0	8.0
은	-	-	1.0	-	-
수 은	5.0	-	-	-	-
산업용다이아몬드	2.0	3.0	3.0	4.0	1.0
코크스탄	-	-	4.0	4.0	4.0
원두커피	6.0	-	-	-	-
양 모	10.0	10.0	10.0	10.0	10.0

1957년도에 이미 A형 교회사업에 의한 신교교회의 물자공급에 따른 재화적 가치는 2천3백만 DM을 넘어섰다. 1957년 동독 측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매년 4천만M 정도가 반대급부로 동독교회의 통장에 입금되어져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지원규모는 더욱 늘어나 평균 4천만에서 5천만 DM에 이르렀다. 총액으로 볼 때 1957년 이후 약 14억 DM에 상당하는 원자재가 동독에 지원되었다. 서독의 원자재 공급에 대한 동독의 교회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이 항상 일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독교회로 볼 때 동서독간 1:1의 환율교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동서독간의 협상을 통해 보너스로 혹은 특별 배려로 동독은 DM의 환율을 높게 평가해준 경우도 있었다.

서독의 원자재공급과 동독정부의 반대급부로 동독의 M 제공이란 형태가 장기적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투자재원이 필요한 경우가 한 예이다. 특히 건설부문의 경우 동독의 M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고안된 추가적인 재정이전 형태가 외화와의 교환가치단위인 Valuta-Mark로서 동독은 원자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M이 아니라 Valuta-Mark를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Valuta-Mark는 단순히 대외무역을 위한 통계단위일 뿐만 아니라, 외화에 유사한 가치단위로서 교회는 이를 가

지고 M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동독의 수출상품을 구입하는데 그리고 수출활동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서방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데도 사용하였다.

Valuta-Mark의 제공은 196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첫 해에는 건축자재 조달을 위한 1백5십만 DM 정도의 규모에 머물렀다. 그러나 연간규모는 급증하였으며, 여기에는 1974년 동독교회들이 추진한 특별건축사업들이 영향을 미쳤다. 80년대에는 Valuta-Mark로의 재정이전이 M로의 재정이전 규모를 초과하기도 하였다. 1966년 이래 EKD는 약 7억 DM 상당의 원자재를 제공하여 동독교회가 Valuta-Mark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독 카톨릭교회의 원자재 공급을 통한 대동독 재정지원은 1966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 소재 독일 Caritas연맹이 원자재공급을 담당하였다. 매년 확정된 규모로 지원된 원자재공급은 해가 갈수록 늘어갔다. 그러나 물품의 내용은 한가지로 확정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전해질구리(Elektrolytkupfer)였다. 음극구리(Kathodenkupfer)나 구리전선막대(Kupferdrahtbarren)들이 서독 내에서 구입되어지는 한 내독간 교역으로 간주되어 세금면제의 형태로 반출증명서가 붙여져 동독에 제공되었다.

금액으로 볼 때 독일 Caritas연맹은 1966년 A형 교회사업으로 약 3백4십만 DM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연간규모는 곧 2천만, 3천5백만 DM으로 증가하여 1983년 이후에는 4천만 DM에 달하였다. 동독이 이를 M과 Valuta-Mark로 어떻게 분배하여 동독교회에 제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M의 제공이 Valuta-Mark의 제공보다 많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서독의 신교와 카톨릭교회를 합쳐 서독교회는 A형 교회사업을 통해 총 28억 DM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동독으로 공급하였으

며, 그 중 21억 DM을 신교교회가, 7억 DM을 카톨릭교회가 차지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의 교회가 조달하였으며, 서독의 정부는 내독성의 예산항목 68521의 예산으로 약 50%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③ B형 교회사업: 인도적 목적을 위한 원자재 이전

‘B형 교회사업’(Kirchengeschäfte B)은 ‘인도적 목적을 위한 원자재 이전’(Rohstofftransfers für humanitäre Zwecke)의 형태로서 여기에는 정치범 석방, 이산가족 재합류가 해당된다. 서독은 국가적 차원에서 동독의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의 재합류를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교회를 통한 대동독 물자지원방식, 이른바 ‘Freikauf’(Ludwig A. Rehlinger, *Freikauf*, 1991 참조)을 택하였다. 서독정부는 인신매매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또한 외화를 동독에 직접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교회를 통한 이러한 물자공급방식을 택하였다.

서독은 이러한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동독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교회의 목사와 신부들, 정치권의 베너(Herbert Wehner)와 악셀슈프링어출판사(Verlag Axel Springer)가 크게 기여하였다. 정치범 협상을 위해 동독이 자국의 협상전권자로 포겔(Wolfgang Vogel)을 내세운 1962년에 첫 결과가 나타났는데, 서독측의 협상대표자는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베델(Wedel)과 슈탕에(Stange) 변호사였다. 동독은 최초의 정치범 석방에 대한 대가로 열차 3량분의 칼리(Kali)를 요구하였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교회가 지불하였고 물자는 무역회사를 통해 동독으로 제공되었다. 여기에 필요한 허가는 서독 EKD의 Diakonie기관이 서독의 연방경제성을 통해 얻어내었다. 이어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베를린장벽이 건설된 후 생이별하게 되었던 20명의 어린이들이 부모

와 재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서독 내에서는 정치지도자들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1964년 7월 이러한 교회의 활동을 정부가 맡기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A형 교회사업에 상응하게 이러한 목적으로 원자재를 어떻게 지급하고 동독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가끔씩 취해졌던 대동독 현금지원을 중단하고 현물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무책임기관으로 연방내독관계성의 위임을 받아 EKD가 ‘특별사업’으로 참여하였으며, 실무는 슈투트가르트 소재 Diakonie기관이 관장하였다. EKD는 소요되는 경비를 서독정부에 요청하였으며, 그 돈으로 물자를 공급하는 계약회사에 지급하였다. EKD의 최고회계기관은 매년 이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회계심사결과는 연방회계국(Bundesrechnungshof)의 최고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비밀문건 형식으로 전달되어졌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1964년 8월 19일 서독교회측의 대표자와 동독 대외무역 및 내독무역성의 대표자간에 첫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독은 이때 정치범 석방의 반대급부로 열대지방의 과일을 요구하였다. A형 교회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1966에 설립된 KoKo가 협상의 실무를 주도하였고, B형 교회사업은 전적으로 연방내독관계성의 예산항목 68521을 통해, 철저한 보안 하에 수행되었다

1964년과 1965년에 다시 한번 예외적인 경우로서 동독에 대한 현금지급이 있는 이후 1990년까지 정치범 석방에 대한 모든 반대급부는 원자재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동독 측은 1965년부터 공급제품결정시 소비제품보다는 외화절약 효과가 크고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용 원자재, 예를 들어 원유, 다이아몬드, 은, 구리, 주식, 팔라듐 등을 선호하였으며, 비밀협상

에서 서독측이 응하지 않으면 정치범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가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용 원자재중 국제현물 거래시장에서 중개인을 통해 즉시 상품화될 수 있는 물자, 예를 들어 원유, 다이아몬드, 은 등의 비중이 커졌다. 원유, 구리, 산업용다이아몬드 등은 국제시장에서, 그리고 은은 서독 내에서 구입되었다.

원자재 제공의 규모는 매년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상봉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표 IV-11>은 예로서 원자재의 제공내역을 보여 준다 1964년 3천7백만 DM에서 출발한 B형 교회사업은 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규모가 세 자리 수로 확대되어 A형 교회사업 보다 커졌다. 서독연방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1964~1990년간 서독이 동독정부에 지불한 대가는 총 34억 DM에 달했고 이들 통해 3만3천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었으며,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상봉하게 되었다.

<표 IV-11> B형 교회사업에 의한 대동독 지원 원자재 현황

(지원허가 단위: 백만 DM)

지원 원자재	1986	1987	1988	1989
원유	122.0	107.0	101.0	102.0
구리	77.0	48.5	70.0	66.0
은	50.0	31.0	23.5	37.0
산업용다이아몬드	9.0	11.0	4.0	19.0

(2) 서독 종교단체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 평가

1957년부터 시작된 서독 종교단체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은 동독의 종교단체와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동독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다. 지원규모와 사안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매년 동독에 미친 영향은 차이가 있었지만 동독경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억내지 30억 DM에 달한 현물지원은 직접 수령자에 전달됨으로써 동독 국가적으로는 큰 매력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만큼 정부의 배급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 총 2억5천만 DM에 달한 Genex를 통한 중앙공급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획득 효과를 주었으므로 동독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1957년에서 통일이 된 199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이러한 현물지원이 동독주민에 미친 파급적 효과는 절대 과소평가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원자재 제공을 통한 재정이전 형태로의 지원은 확연하게 동독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IV-12>는 A형 교회사업 및 B형 교회사업의 형태로 동독에 지원된 규모를 DM, 반대급부로 동독정부가 동독 종교단체에 제공한 M과 Valuta-Mark인 VM 등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규모가 모두 동독 종교단체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외환가치적 평가로 환산하면 약 62억 DM 정도의 효과를 동독에 주었다고 볼 수 있다.

B형 교회사업에 의한 대동독지원이 <표 IV-12>가 보여주듯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B형 교회사업은 서독 종교단체가 연방정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을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B형 교회사업은 서독 종교단체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서독 정부가 동독에 지원한 국가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었다. 또한 A형 교회사업에 소요된 비용도 서독 연방정부가 50%의 보조금을 주어 지원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서독 정부와 종교단체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수행한 것이었다. <표 IV-12>는 서독이

분단 기간중 동독에 물질적,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총 규모를 보여주며, 여기에서 1970년부터 시작되었던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대동독 지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서독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표 IV-12> 서독의 대동독 재정 이전 및 물질적 지원 내역

(단위: 10억 DM)

지원 내역	금 액
○ 국가적 재정이전	
- 통행서 등 교통관련 총액	8.3
- 투자참여	2.4
- B형 교회사업	3.4(총 14.1)
○ 민간적 재정이전	
- 동독마르크 교환* 및 비자비	5
○ A형 교회사업	2.8

* 서독인이 동독 방문시 반드시 DM을 M으로 교환하도록 의무화한 최소 금액으로, 이를 통해 동독은 서독의 DM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서독은 이를 통해 수백만에 달하는 동독주민들이 분단에 따른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어 무신론적인 체제에서 교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동독주민들이 실생활에 중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동포로서의 서독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여 동독내 체제 저항세력 양성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종교단체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동독공산당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 받아들였던 서독의 지원이 정권의 안정에 일시적으로 기여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동독정권의 안정을 붕괴시키는 중심역할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2) 동서독간 청소년 교류

(1) 동서독간 청소년 교류의 법적 기초

동서독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그 사회적 역할은 매우 달랐다. 동독의 청소년단체는 철저한 국가통제하에 놓인 공산당 후보자 당원의 교육장이었다. 동독에서 사회주의적 인간의 형성을 위한 사회주의의식화 교육은 탁아소 → 소년개척자(Junge Pionier, 초등학교 중심) → 독일청소년자유연맹(Freie Deutsche Jugend: FDJ, 중·고등학교) → 체육·기술협회(Gesellschaft für Sport und Technik, 18~21세) → 군대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단체에의 가입은 명목상 자발성을 전제로 했으나, 이런 단체에서 열성적인 활동을 한 자들만이 공산당원으로 발탁될 수 있었고, 또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므로 반강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독에는 각기 다른 정치적인 이념, 세계관에 따라 또는 전문이익집단의 산하에 40개 이상의 청소년단체가 존재했는데 가입은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겨졌다. 이들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국가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었으나, 국가가 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기구는 아니었다(Martin Hülsmann, 1986 참조).

동서독의 청소년 대책은 독일문제와 관련된 각각 다른 정치적인 목표설정 때문에 상이하였다. 서독은 상반된 체제하의 분단된 독일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상호 소외현상이 일어나 민족적인 동질성을 상실해갈 뿐만 아니라, 장래의 독일통일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긴장완화, 상호대화 등 양독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짚어준 청소년들의 접촉이 향후 독일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에 양독 청소년들간에 사적 교류, 여행, 정치적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단체들 간의 공식적 모임 등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로부터 개인적 친분관계가 맺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양독 청소년들간에 서로를 보다 잘 알수록, 그리고 서로 간에 보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적대감 등이 효과적으로 제거 내지 해소될 수 있으며, 이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Ulrich Bunjes, 1989 : 27~230 ; Gerhard Kiersch, 1986 참조).

1972년 동서독 『통행협정』은 양독간 여행교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나, 관광여행과 개인여행만을 취급하였을 뿐 청소년 교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청소년 교류에 관한 동서독 간의 구체적인 첫 협정은 서독청소년단체(Deutscher Bundesjugendring: DBJR)와 동독 FDJ간에 1980년 9월 20일 체결된 『청소년 여행에 관한 합의』였다. 민간단체간의 이 합의를 정부적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1981년 12월 당시 동독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Erich Honecker)와 서독수상 슈미트(Helmut Schmidt)가 다시 한번 동서독 청소년들 간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동독의 FDJ와 서독의 DBJR간에 실무협회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82년 9월 20일 양 단체는 양독간에 청소년여행을 확대할 것이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양측은 청소년들의 이해와 그들의 미래를 위해 대결이 아니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전제하면서, 양독내 모든 청소년들은 각 나라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동독의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여행회사인 ‘Jugendtourist’에게 그리고 서독의 경우에는 ‘Deutsches Jugendherbergswerk’, ‘Hansa-Tourist’, ‘Intercontact’, ‘Reisedienst Deutscher Studentenschaften’, ‘CVJM-Reisen’ 등의 단체에게 양독 청

소년간 여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고 규정하였다(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86 : 127). 이에 따라 이제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진행되었던 일방통행식의 청소년방문이 이제 양독간 청소년 교류로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실제 1983년에는 새로운 합의를 근거로 1,220명의 동독 청소년들이 1주일간의 일정으로 서독을 방문하였다. 또한 서독의 청소년들은 약 6,000건의 다양한 기회를 통해 총 22,000명이 동독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16,000명은 1974년부터 시작된 수학여행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모두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방문이었다.

1984년 양독일은 전년도에 비하면 약 두배 정도의 청소년간 교류를 계획하였고 실제 1/4분기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독은 4월 24일 Jugendtourist의 사무국장인 아이흘러(Klaus Eichler)가 관영통신 ‘ADN’을 통해 동독청소년들이 서독 내에서의 여행중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이유로 청소년 파견을 중단시켜버렸다. 그는 서독의 ‘헌법소원보고서(Verfassungsschutzbericht 1983)’이 서독을 방문한 동독의 청소년들이 서독 내에서 국가전복 활동을 꾀한다고 중상 비방했다. 또한, 동독 청소년들이 서독 내에서 서독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되고 있으며, 실제 서독경찰이 동독 청소년여행단을 방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86 : 178).

이로 인해 동독 신교교회 소속 청소년들의 서독방문을 포함한 모든 서독 방문계획이 취소되었다. 1984년 5월 29일 서독의 독일체육연맹(DSB) 산하 독일체육청소년협회(Deutsche Sportjugend)와 동독의 Jugendtourist간에 체결된, 동서독은 지역단체 수준의 체육경기에도 서로 청소년단체를 참가시킨다는 합의에 따른 청

소년교류도 모두 중단되었다.

서독의 ‘헌법소원보고서 1983’이 문제시 되자 서독 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고, ‘헌법소원보고서 1984’에는 동서독 청소년간 여행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방내무성장관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연방정부는 내독간 청소년여행에 장애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를 근거로 DBJR 회장인 헬프리히(Rudolf Helfrich)는 1985년 5월 10일 양독간 청소년여행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1985년 5월 21일 동독의 FDJ는 이러한 서독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청소년교류를 재개할 것을 밝혔다(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86 : 217). 그리고 1986년의 동서독간 「문화협정」⁴⁹⁾, 1987년 9월 1일 서독의 청소년여행 알선기관인 Jugendherbergwerk와 동독의 Jugendtourist간의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 등이 체결되면서 청소년교류를 위한 법적 토대는 정비되었다.

(2) 동서독간 청소년 교류 현황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청소년교류에 관한 내독간 법적 준비를 토대로 대동독 견학여행을 장려하였다. 서독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은 계속 늘어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을 여행하는 기회 중에 75%가 수학여행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25%는 청소년단체, 협회 및 기타 사회단체들이 차지하였다. 서독정부는 청소년여행을 교통비 및 체류비지원이란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참가자들이 여행에 앞서 국경에서 동독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

49) 문화협정 제2조는 3항은 “학생들의 교환, 특히 대학원생들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젊은 학자들을 교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 교육용 교재는 전독문제연구소나 정치교육센터에서 제공 -, 여행자의 수는 동독으로의 장기여행의 경우 최소한 7명, 그 외의 경우는 최소 20명~최대 60명이어야 하고, 여행그룹에 미성년자가 끼어 있을 경우 교사나 청소년지도자 등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Gisela Helwig, 1986 참조). <표 IV-13>는 연도별로 서독정부의 지원에 의한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 수학여행 현황을 보여준다.

<표 IV-13> 정부 지원에 의한 서독 청소년의 동독
수학여행 현황

년 도	수학여행 그룹별						총 횟수 (총 인원: 명)
	대학생 그룹	%	청소년 그룹	%	학생 그룹	%	
1984	45	5.2	127	14.5	705	80.3	877 (22,000)
1985	34	3.5	160	16.7	709	73.8	961 (-)
1986	45	5.2	136	15.7	665	77.0	864 (22,551)
1987	64	5.7	171	15.2	889	79.1	1,124 (26,326)
1988	71	6.5	186	17.1	833	76.4	1,090 (26,812)
1989	62	5.8	189	17.8	811	76.4	1,062 (-)

※ 자료: 통일원, 1993.

한편, 서독 청소년단체 중 동독 청소년단체와 가장 활발한 접촉과 교류를 추진했던 단체는 신교 청소년단체였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독의 신교교회가 대규모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활동을 벌인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양독 신교

청소년단체간 교류는 국가통제 아래에 있었던 동독의 신교단체가 서독 측과의 많은 접촉을 꺼렸기 때문에 거의 서독에서 동독으로 방문하는 일방통행식 접촉이었다. 반면, 카톨릭교 청소년단체는 동독지역에 적당한 대화의 상대를 가지지 못해 접촉이 거의 없었다. 서독의 연방내독관계성은 신교단체의 접촉에 대해 조건없이 재정지원을 하였다. 접촉의 방법과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신교측의 재량에 맡겼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신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했다(Deutscher Bundesjugendring (ed.), 1986 : 3~7, 19~20 참조).

동독 정부가 신교 청소년단체에 대해 서독과의 접촉을 허용한 이유는 이러한 접촉을 통해 서독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만 접촉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종교활동의 테두리 내에서 동독사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동독청소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탈출구로 이용함과 동시에, 동독청소년들이 서독의 체제와 접함으로써 서독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부각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신교 청소년단체간의 교류는 접촉이 공개되면 될수록 동독측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차후의 접촉 회수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거의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없다. 한편 서독을 방문한 동독청소년의 대부분은 FDJ의 간부들이었고, 20~30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기혼자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꼭 동독에 남아 있어야 여행이 허용되었다.

3) 동서독간 청소년 교류 평가

동독은 자국 청소년들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극히 제한하였다. 서독을 포함한 서방으로의 여행은 물론 사회주의 형제국가였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베트남, 몽골, 북한 등으로의 여행에도 많은 제한을 두었다. 청소년들은 심지어 인접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로의 여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외화부족,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의 우려 등으로 인해 동독은 ‘비사회주의 경제권’(nichtsozialistische Wirtschaftsgebiet, 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이외 사회주의 형제국들도 포함)으로의 여행도 고위관리나 특수계층에만 국한시켰다.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해외여행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Harald Schmidt, 1990 : 18).

이러한 동독이 서독 측의 청소년 교류제외에 마지못해 응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에 수반되는 서독으로부터의 재정적, 경제적 반대급부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서독 여행을 체제맹종을 조건으로 한 일종의 포상으로 체제순응을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방문 이후 동독청소년들의 사상적 오염을 우려하여 여러 형태의 차단 조치를 취하였다. FDJ는 국가의 통제 하에 양독간 청소년들의 만남을 감시하였고, 동독은 2개 민족, 2개 국가론에 의거하여 철저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동독청소년을 서독체제에 접촉케 함으로써 동서독 분리화를 가속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서독청소년에게 동독여행과 동독청소년과의 교류는 동독에 존재하는 독재체제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생생한 정치교육이 되었다. 그러나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을 체험하고 실망했던 서독

청소년들은 서독정부가 양독 관계를 심화시키고 민족적 공통의식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양독간 청소년 교류를 추진했던 의도와는 달리 동독과의 상호 이질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또한 동독도 정치적인 목적, 즉 청소년단체 핵심간부에게 서독에서의 현실체험을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깊이 체감시키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양독간 청소년교류가 양독일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서독의 사회체제를 체험할 계기를 가졌던, 특히 서독 종교단체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양독 신교교회간 청소년 교류를 통해 서독사회를 접할 수 있었던 동독 청소년들이 훗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중심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청소년교류가 함축할 수 있는 의미를 보여준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2.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청소년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을 구현하는 당위적 측면,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북한청소년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지원해 주어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은 매우 적실성 있는 접근 방법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청소년층이 통일주역이므로 현재부터의 교류·협력을 통한 이질적 요소의 최소화에 강조점을 두는 당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과거의 경험은 남북 청소년 교류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반면, 북한은 청소년들이 자본주의적 환경을 접할 경우 그들의 이념적·문화적 이탈을 우려하여 청소년 교류를 회피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 교류와 협력을 바라다보는 남북의 이해 관계가 철저하게 상충된 것이다. 그 결과 남북 청소년 교류는 대학생 중심의 불법적·비제도적 교류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며, 청소년 교류는 현재까지도 북한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구도속에 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은 위에서 지적한 남북한의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북한 사회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국제사회가 확인한 사실로 북한 역시 이 문제의 공개 여부를 꺼려하는 단계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구호지원 물품의 군사용도 전용 및 분

배 투명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당위적 차원에서 남북 청소년의 교류와 협력 문제를 풀어가던 방식과 다른,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실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청소년에 대한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은 상호간의 접촉과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로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적 노력이 미래적 성과를 담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직접적 접촉을 통한 인적 교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로 북한교예단 및 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남한 가요 및 연예인들의 북한내 한류 열풍은 직접적 교류 못지않게 간접적 교류의 성과를 충분히 확인해 주는 사례들이다. 교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반드시 직접적 대면 접촉만을 중시하는 절차적 정당성보다 얼마만큼의 결과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 전략은 교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국내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 라는 설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제도화·규범화가 선행되어야 안정적, 지속적 교류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교류의 콘텐츠를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청소년 교류를 이야기하는 주체가 우리라고 해서 반드시 상대지역의 청소년을 방문하는 교류만을 논의하기보다는 동일 수준에서 그들을 수용하는, 즉 불러들이는 교류와 그러기 위

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남북 청소년교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북한지역, 청소년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교류 형태는 어떤 것일까? 라는 문제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쪽이 어떠한 형태의 청소년교류를 제안하든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지 한번 반문해 볼 일이다.

특히, 남북 청소년교류를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과 실제로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의 편차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다. 예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남북 청소년교류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다면 드러난 언어적 표현과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도 매우 주요한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그렇기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교류라는 문제 설정은 참여자 각 개인의 행동과 가치관의 변화가 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교류활동은 시혜적 차원의 지원활동과 관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 정책 제언

1)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접근 방법의 전환

최근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한 남북 청소년 교류 형태는 기성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간의 노력과 일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남북 청소년교류의 접근 방법은 체육, 문화·예술, 학술, 방송분야 등과 같이 본래의 업무 성격에 기초한 교류 활동과 달리 ‘성인과 청소년’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독자적 청소년 교류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북 교류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든 교류의 주체가 성인, 또는 여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청소년분야가 소외되었다는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 중심의 교류는 학습여행·관광, 수련활동, 체육, 문화·예술, 학술, 방송 등을 매개로 한 교류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체육, 예술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층이 포함된 교류가 성사되고 있으나, 이러한 교류는 체육, 예술분야의 교류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에 학습여행·관광, 수련활동 등은 청소년층의 주체적 참여가 가능한 교류 형태이나, 현재의 남북 교류 환경을 고려하면 단시일 내의 성사는 어려울 것이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층의 주체적 참여를 고려하여 남북 교류를 추진할 경우, 그 영역이 매우 축소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층이 주체가 되는 남북 교류문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맞물려 장기적 과제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방송교류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고, 문

화·예술 교류시 청소년 대상의 내용을 첨가하며, 체육 교류시에도 대표선수보다 생활체육 수준의 경기를 개최하여 일정비율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한 종목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 적실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성인, 청소년분야와 여타 분야 등과 같이 이분법적 경계를 설정하는 교류의 접근보다 사회문화분야 속에서의 교류로 접근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2) 남북 청소년 교류의 단계별, 우선순위별 아젠다 수립

현재 우리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교류 방안들은 남북 화해·협력단계부터 통합단계까지의 교류과제가 혼재되어 매우 혼란스럽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부 도시의 계획성 없는 난 개발에 비유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청소년 교류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3단계 통일방안(남북 화해·협력 단계/남북 평화공존 단계/통합단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단계별, 우선순위별 아젠다를 포함하는 「남북 청소년 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남북 청소년 교류 관련 정보, 자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관련 정보, 자료 등을 종합하고 유관 단체간의 중심적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할 「남북청소년교류단체 협의회(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은 북한·통일관련 민간단체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복지관련 민간단체들이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보, 자료가 산재되어 있어 그 현황 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이들 기관이 경험을 통하여 집적한 노하

우 및 자료들 또한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관련 정보,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고 기관간의 연대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남북청소년교류단체 협의회(가칭)」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예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참고할 일이다. 동 기관은 사회통일교육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화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자료 등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4) 방송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청소년의 일상 및 가치관 변화 유도

단순히 남한의 방송을 북한에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방송을 남한에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상호간에 현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TV가 2002년 월드컵 개막전을 획기적으로 방영하고, 그 결과가 북한주민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전파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이 10부작으로 방영한 ‘가정50’, ‘엄마를 깨우지 마라51’ 등이 북한주민 및 청소년층의 일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 방송교류시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비청소년분야의 교류 형태일지라도 북한청소년의 태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남북 청소년 교류의 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50) 금기시 되었던 기혼남녀의 불륜과 부부갈등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51) 여성과학자가 분유개발을 위해 가정 일에 소홀해지면서 나타나는 남편과의 갈등을 사실대로 묘사하고 있다.

(5) 남북 청소년관련 도서교류 및 도서합작 출간 확대

최근 북한은 우리에게 전문서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이 요청해온 도서목록은 크게 △컴퓨터종합분야(네트워크·프로그래밍·컴퓨터그래픽·인공지능 등), △멀티미디어분야, △코드·서체 등 세 분야이다. 특히, 70여권은 ‘장우균, 한글코드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5’ 등 저자·제목·출판기관·출판연도 등이 명확하게 표기돼 있어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북한의 전문가들이 한글로 된 남한의 전문서적을 참조하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 어떤 형태로든 ‘독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처럼 남한 도서의 전달은 북한의 전문가, 특히 젊은 청소년들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이질감을 줄이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남북합작동화로 ‘령리한 너구리’를 출간하였다. 이 동화는 평양에서 쓰고, 그린 그림을 서울에서 출판한 최초의 남북 합작 그림동화 시리즈다. 북한 어린이들의 일상 언어와 생활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통일교육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벌써부터 아동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남북 청소년 관련 도서 교류와 도서합작 출간 등을 확대해야 한다.

(6) 사이버 청소년 교류 시스템 구축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이버 세계를 통일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한 게임 개발(예를 들어 두더지를 이용한 북한 지리 탐사 게임, 남북 연합군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한 점령 게임), 사이버 통일 포어·포스터 대회, 사이버 북한 답사 등의 게임 개발과 행사 개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각종 북한·통일관련 자료를 링크(link)화 하고, 공동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남북 공동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최근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적 내부 갈등(남남갈등)은 언론의 보도 태도에 의해 상당히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방송과 언론매체의 대북한 보도내용 심의 위원회(가칭)」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령 개선

(1)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 운영 규정’ 제정

남북 청소년 교류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남북교류협력법」 법률 조문에 ‘청소년교류 활성화 운영 규정(가칭)’과 같이 최소한의 조문만 배치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최소한 고시, 또는 훈령만이라도 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남북관계 기본법」의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검토해볼 사항이다.

(2) ‘접촉’과 ‘방문’ 규정의 개선

현재는 인적 교류를 북한주민 접촉과 방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다. 북한주민 접촉도 회합의 경우와 정보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 접촉을 단순접촉, 통신에 의한 접촉으로 대별하고, 후자를 다시 ① 우편통신교류, ② 전신·

전화, ③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 통신 등 정보통신 교류 등으로 나누어 규정토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 접촉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승인제(허가제)와 신고제, 완전 허용(민간인의 자율규제) 등 다양한 규율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문 내지 왕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통행, 친지방문, 여행·관광목적의 일시적 방문, 북한 내의 장기체류 등을 구별하여 처리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청소년층의 인터넷 사용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층은 남북 교류의 주요 수단으로도 인터넷 등을 비롯한 통신수단을 선호하고 있는 시점에서 ‘접촉’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촉진 조항을 신설하며, ‘방문’관련 조항 또한 신청내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인도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 방안

(1) 북한청소년의 인권실태에 관한 교육 강화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이 부재한 상태 속에서 북한청소년들의 인권위기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효과적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보편주의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더불어, 정부 및 국내외 NGO 등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청소년들의 인권위기 상황에 대한 내실 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초·중·고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인권교육 시간과 통일교과 관련 시간에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의 인도적 지원 참여 기제 개발

북한청소년들은 필요로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과잉되는 물품이 무수히 많다. 의복, 학용품,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북 지원 소요물품의 수집, 정리, 목록 작성, 집하, 수송 등에 우리 청소년들이 불런티어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인도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연계 추진

현재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한민족복지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10여개 단체에 이른다. 이들 민간단체는 북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호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주로 국수공장 및 빵공장, 영양식 공장에 대한 물자 및 설비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사업과 청소년교류, 또는 청소년지도자 교류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 측의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청소년교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의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여타 청소년에 비하여 사회참여율이 높고, 긍정적 통일·북한관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연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4)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

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민족공동체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⁵²⁾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지원된 기금 내역은 남북 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사업, 남북 공동학술사업, 보건의료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 등이다. 주로 경제적 실익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지원되었다. 특히,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 등을 비롯한 소수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은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시사하는 바 크다.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분야 역시 경제적 이익이나 단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동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5) 인도적 지원 허용 품목의 확대

현재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52) 예로 2003년도 기금집행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비료 30만톤 지원에 836억원, 대북 식량차관(쌀 40만톤)제공에 1,561억원 (2002년도 식량차관 제공 299억원 포함), 자재·장비차관 400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319억원,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328억원,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23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75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7억원, 제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 참가 관련 지원에 9억원,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 등 사회문화협력사업에 7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또한 KEDO 경수로사업 대출 3,287억원, 경협 추진기업에 대한 경협자금 대출 108억원, 교역자금 대출 79억원 등 총 7,708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통일백서, 2004 : 214-215 참조).

에 따르면, 남북간 반출 및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농산품 위주의 186종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아 도는 의류, 인라인스케이트, 학용품, 자전거 등을 북한청소년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남북 당국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농산품 위주로 되어 있는 남북간 반출 및 반입 가능한 품목에 남북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소용하는 품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 청소년관련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 독자 창구 허가

남북 청소년 교류는 일부 청소년단체를 비롯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민간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남북 청소년 교류 사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99년 2월에 발표한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의 결과로 굿네이버스, 남북나눔운동,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20개 기관에 대하여 기관 단독의 대북 지원 창구 역할을 허용⁵³⁾하였으며,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중 7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개 기관중 청소년관련 NGO로 분류 가능한 단체는 남북어린이어깨동무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민간단체의 설립을 유도한 이후에,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대북지원 독자창구 NGO로 승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53)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한적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를 허용하고 있다. 기타 단체 및 개인은 한적 창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7) 구호지원에서 개발구호지원으로의 전환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 확대

2004년 6월 12일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2년여에 걸쳐 진행해 온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 병원’ 개관식을 가졌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이 개관식에 남측 어린이 대표 11명 등 96명의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직항공로로 방북을 하였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남북 청소년 교류 모델이다. 이러한 성과는 남북어린이어깨동무가 그간에 추진하여온 단순 구호지원과 병행하여 개발구호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단순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보다는 개발구호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구호지원 사업의 완공식 등에는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금강산 관광 특구 지역 및 개성공업단지 특구 지역 등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남북의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수련활동을 전개하는 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8) 중국 조선족과의 청소년 교류 확대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연변의 조선족이다. 연변 조선족 사회는 전통적으로 친북 성향이었으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친북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들은 탈냉전 이후에 조총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변조선족의 의식 변화는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북한청소년들의 서구문물 접촉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조선족 청소년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남한의 문화, 가치관 등을 알리고, 이를 북한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구상을 갖는 교류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길은배 외(2003a).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외(2003b).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외(2001).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외(2000). **NGO를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1999). **NGO 역할 강화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숙(2002).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주민의 대남의식 변화. **북한조사 연구**, 제6권 2호.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 김귀옥(2004). **북한어린이의 건강실태와 지원현황 및 과제**. 민주평통 여성분과위원회 회의자료.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김연철(2004). **용천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미래전략연구원 논단.
- 김종길(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전략: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집 3호.
- 남북어린이어깨동무(2003). **대결의 늪에서 굶어죽는 북한사람들**. 오마이뉴스.
- _____ (2002). **남북어린이어깨동무에서 수행한 북녘어린이를 위한 지원현황**. 서울: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노옥재(2003).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국가인권위원회 간담회자료.

- 민주평통사무처(2004). **제1차 사이버설문조사 결과**.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_____ (2003).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민준기 편(2001). **21세기 한국의 정치**. 서울: 법문사.
- 박동호(2001). 방북단 사건, 남한의 현실, 미국 테러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생각: 북한은 지금 한류열풍, 돈 열풍. **Keys**. 10월호.
- 박진원(2003).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사례발표**. 민주평통사무처, 제30차 북한연구회세미나.
- 법륜(1997a). **북한식량난의 원인과 대북지원의 논리**. 서울: 좋은벗들.
- _____ (1997b).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문제다**. 서울: 좋은벗들.
- 보건복지부(2002).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손기웅(2001). 베를린선언의 의의와 과제. 통일연구원 편.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2002). **북한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서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윤여상(1999). 재중 탈북청소년 인권실태와 대처방안. 통일부 편. **북한 인권 및 남북인도적 문제: 현황과 대책**. 통일부 비공개 워크숍자료.
- 이금순(2003).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2000).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 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이영란(2003). 통일 이후 구동독 출신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란: 베를린 거주 대학생들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통일 동독사회 청소년문제’** 심포지엄 발표문.
- 이우영(2004). **시민사회에서 본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 이일하 외(2003). **토요일에는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서울: 필맥.
- 이종원 외(2003).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희섭(199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 정옥임(2004). **대북 인도적지원의 변화와 발전 모색**.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세미나.
- 제성호(2003). 통일관련 법·제도 인프라 실태 및 문제점. 통일연구원 편.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협동연구학술회의발표논문.
- 좋은벗들(2004). **북한 식량난과 북한 인권 보고서**. 서울 : 좋은벗들.
- _____ (2001).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서울: 정도출판.
- _____ (2000a). **2000년 1월 국경지역 난민 보고서**. 서울 : 좋은벗들.
- _____ (2000b). **제19차 중국 접경지역 답사 보고서**. 서울 : 좋은벗들.
- _____ (2000c). “북한주민의 북한사회인식 발표.”
- _____ (2000d).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도출판.
- _____ (1999a).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 서울 : 좋은벗들.
- _____ (1999b). **북한 식량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서울 : 좋은벗들.
- _____ (1999c). **사람답게 살고 싶소**. 서울 : 정도출판.
- _____ (1998). **꽃제비 어린이 지원현황 분석**. 서울 : 좋은벗들.
- 통일부(200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_____ (2002).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_____ (2001).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부고시, 1999.10.27 제정, 2001.2.10 개정). 서울: 통일부.
- _____ (2000).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통일부.
- _____ (1999).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 서울: 통일부.
- 통일원교류협력국(1994).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32호. 서울: 통일원.
- _____ (1993).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19호. 서울: 통일원.

- _____ (1992).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7호. 서울: 통일원.
- 통일원(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 _____ (1998).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 _____ (1997).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원.
- _____ (1996).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통일원.
- 헌법재판소(1993).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5권 2호. 서울: 헌법재판소.
- 「국가보안법」 제1조.
-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
- 「연합통신」, 1998.10.11.
- 「조선일보」, 1998.10.10.
- 「세계일보」, 1997.12.4.
- 「세계일보」, 1995.2.7.
- 「중앙일보」, 1996.4.21.
- 「중앙일보」, 1995.9.29.
- 「문화일보」, 1997.7.16.
- 「서울신문」, 1998.9.19.
- 「국민일보」, 1998.3.26.
- 「한겨레신문」, 1999.7.24.
- 「경향신문」, 1994.7.23.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1985). *DDR Handbuch*. Köln.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1986). Innerdeutsche Beziehungen.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0-1986: *Eine Dokumentation*. Bonn.

- Bunjes, Ulrich(1989). Normalität stellt sich nur langsam ein.
Zur Entwicklung des deutsch-deutschen Jugendaustausches. Außerschulische Bildung.
- Deutscher Bundesjugendring(ed.)(1986). *Die unbekannten Nachbarn - Deutsch-deutscher Jugendaustausch*. Jugendpolitik, 7.
- Francis Fukuyama(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International Creative Management*.
- Helwig, Giesela(ed.)(1982). *Kirchen und Gesellschaft in beiden deutschen Staaten*. Köln.
- Helwig, Gisela(1984). Jugendaustausch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Deutschland-Archiv*, 8.
- Hülsmann, Martin(1986). Drüben bei uns. *Eine Begegnung mit der DDR*. Würzburg.
- Kiersch, Gerhard(1986). Die jungen Deutschen. *Erben von Goethe und Auschwitz*. Opladen.
- Natsios, Andrew(1999).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Aug.
- Volze, Amin(1991). Kirchliche Transferleistungen in die DDR. *Deutschland Archiv*, 1.
- Weinacht, Paul-Ludwig(ed.)(1986). Mit offenen Augen in die DDR. *Anregungen für Klassenfahrten*. München.
- Zander, Helmut(1984). Zur Rolle der Kirchen in den Friedensbewegungen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Ein Vergleich für die Jahre 1978~1983*. Bonn.

부 록

「하나원」소재 북한이탈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부
록

[부 록]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 피면접자 : 박○○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장마당(농민시장)에서 팝콘을 팔아서 국수나 옥수수가루를 구합니다. 가을철에는 농장 밭에서 옥수수를 훔쳐서 식량구입을 하고 겨울에는 고아세대(고아원과 비슷한 기관)에 입양되어 생활하였습니다. 식사는 주로 옥수수밥이나 국수를 먹습니다. 반찬은 주로 된장과 김치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인 1996년부터 1998년까지에는 먹을 것이 없어 병들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적들이 많습니다. 장마당에서도 저울이나 물건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훔쳐가곤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개인들의 소토지도 경비를 서지 않으면 하루밤 사이에 다 훔쳐가곤 합니다. 고아세대(고아원 같은 곳)에서 강냉이 쌀이 조금씩 적어져서 차이가 나면 주인이 고아들을 의심하여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장마당에서는 꽃제비(거지)들이 음식을 훔치다가 잡히면 집단으로 맞기도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꽃제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학교 다닐 때 교복은 부모들이 사주거나 천으로 만들어 입습니다. 헤어질 때까지 입고 헤진 옷은 기워서 입습니다. 양말도 다 떨어지면 기워 신습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돗물과 전기사정은 어떤가요?

- ▶ 아파트에서 살았고 방은 2개, 부엌 1개, 위생실(화장실)이 있고 아파트 한 동에 36세대가 살았습니다. 수도물은 고난의 행군(1996년 경부터 2000년경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특히 어려운 때) 시기에 아파트의 수도관이 얼어 터져 물이 나오지 않아 개인들이 길에서 써야 했고, 전기는 설날이나 명절 때에도 거의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땀감으로 난방을 하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 와서 해결 합니다. 보통 지방의 농민들은 땅 집(단독주택)에서 살고, 도시의 인민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북한의 아이들은 키가 작습니다. 농촌지원을 자주하여 김매기, 풀뽑기 등 힘든 농사일을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키가 작습니다. 북한에서 몸무게가 47키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60키로그램입니다. 13키로그램이 차이가 납니다. 북한에서는 못 먹어서 몸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1997년 파라티프스라는 병으로 앓았습니다. 파라티프스 병 치료에 먹는 약은 중국약 레모미쨥 알약인데 한 알에 7원에서 8원합니다.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해 두 달 동안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병에 걸리면 병이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북한에서 학교수업하기 전에 사로청위원장이 항일혁명 투사들의 수기와 회고록을 읽는 독보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농장 밭에 가서 풀뽑기와 김매기, 돌치우기 등을 합니다. 북한학교에서 결석을 자주 하는 데 집에 먹을 것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석을 합니다. 결석을 하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데리러 오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결석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학교시험은 중간 시험 기말시험을 봅니다. 배우는 과목을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때 봅니다. 북한학교에서 교과서는 입학할 때 타는데 두 사람 당 한 권씩 받고 선생들이 쓰던 것을 받기 때문에 헐었고 어떤 책은 페이지가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중퇴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사하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대(성분)가 나쁜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학교에서 결석을 하면 선생님들이 때리거나 몇 시간 동안 세워놓고 벌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꼬마과제(토끼가족모우기, 파동모우기 등)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끼 가족이나 동을 가져오라하는데 있어야 모와서 가져가죠. 또한 염소 풀과 토끼 풀을 뜯어 모우기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광산에 집단으로 배치 받아 일을 하거나 남학생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군대에 입대 합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면 대학교 진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으면 대학가기가 어렵습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때리기도 합니다. 학교에 파지를 가

져오라든지, 과동을 가져오라하면 없기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습니다. 흠쳐서라도 가는 학생들이 있지만 있어야 흠치기라도 하죠. 어떤 아이는 기차 밑에 있는 돌을 흠쳐서 학교에 내기도 했습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결석하거나 말을 많이 듣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때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세워 놓고 벌을 주기도 하구요.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이러한 자유는 북한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자유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소년들도 큰 죄를 지으면 소년교화소(소년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여행, 이사, 신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어머니와 언니들이 모두 북한을 탈출해 버려 동생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못살고 굶주리니까 탈출을 했습니다.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서로 오해를 풀고 북한청소년들이 남한청소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용품과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만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지방의 청소년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피면접자 : 김○○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 제가 2002년 10월 북한을 탈북 할 때는 배급을 타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밥을 먹고 살았고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사를 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걱정된다면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합니다. 중국에서 돈을 벌어 식량을 구입하면 됩니다. 북한에서 배급으로 입쌀(흰쌀)을 내줄 때 싸우는 경우가 있다. 서로 먼저 타려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입쌀(흰쌀)이 떨어져서 못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당에서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왁자지껄하는 틈을 타서 손으로 덮쳐서 빼앗아 달아나기도 합니다. 도망 가다가 잡히면 맞기도 합니다. 때린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중국으로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번 다음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옷 입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도 물과 전기사정은 어떠한가요?

- ▶ 국가에서 주는 아파트 1칸에서 살았고 위생실은 집안에 있습니다. 난방은 소탄이나 나무를 가지고 따뜻하게 합니다. 아파트에도 불을 댈 수 있는 아궁이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먹지 못하고, 부모들이 키가 작아서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남한에 오면 금방 키가 부쩍 큼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감기나 학질 등 그런 병으로 앓습니다. 아픈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약을 공급을 하지 않아 병원에도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마당(농민시장)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쩔 때는 아파도 가만히 누워 있고 저절로 낫기만 바라기도 합니다. 고난의 행군에는 특히 더 어려웠습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학교는 가까워서 제각기 걸어서 등교를 합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김정일, 김일성 관련 책을 읽는 독보를 합니다. 오전수업이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김매기 등 농장 일을 지원합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합니다. 아프면 결석을 하고 결석하면 선생님이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책은 까만 책을 두 사람당 한권씩을 나누어 주는데 선배들이 보던 것이라 찢어지기도 하고 너털너

덜한 것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는 나무를 하고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평데 학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나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공부나 잘하고 잘사는 집의 애들은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은 대학에 가는 것이 바깥입니다(힘듭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합니다. 특히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부모님 둘이 싸우고 화풀이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싸울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립니다. 북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웬만하면 참고 삽니다. 이혼을 하면 여자에게 더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맞게 됩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시험에서 많이 틀리거나 교실 안에서 시끄럽게 제기차기 등을 하면 선생님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 들으면 때리지 않습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학교에서 내라는게 많습니다. 파지(종이), 파철(쇠), 파동(동), 토끼 털, 파비닐 등 가져오라고 합니다. 없는데 가져오라고 하니 다른

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훔쳐서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힘듭니다. 북한의 인권이란 말 우리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행복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했습니다.

F.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서로 함께 놀고 공부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을 해서 같이 합쳐서 잘 살아야 합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쌀이나 책, 옷 그런 것을 지원하면 좋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학교도 못 다니고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 좋습니다.

◎ 피면접자 : 박○○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 평균생활형편이 되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두끼(아침과 점심)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국수로 먹습니다. 배급은 식량공급소 직원이나 양정사업소 직원들을 통해서 중층(중산층)의 사람들은 양식을 다 타기도 하나, 평민들은 배급을 못타고 살아갑니다.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 걱정되는 것은 쌀값이 많이 오르거나 부모님들이 직장 문제가 악화되어 일하러 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장마당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음식을 훔쳐 먹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다가 들리면 매를 맞거나 끌려갑니다. 이런 경우 조금 때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장마당을 통해서 구입하여 입고 또는 뇌물로 얻어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옷은 보통 운동복인 경우 닳아서 떨어질 때 까지 1년반 정도 입고, 학교 교복은 다음 교복이 나올 때까지 입습니다. 돈이 있으면 천을 사다가 옷을 만들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돗물과 전기사정은 어떤가요?

- ▶ 땅 집에서 살았고 방은 두 칸이었습니다. 위생실은 밖에 있습니다. 전기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도 남한처럼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북한의 청소년들이 키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몸무게도 물론 남한 청소년들이 더 좋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은 잘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16세 파라티프스, 흑사병을 앓았습니다. 어머니가 의사이었으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약 같은 것은 병원에서 무료로 타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약값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병원약 보다는 장마당에서 구입해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일주일에 6일간은 수업이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7-8시간수업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45분 수업입니다. 수업을 끝나면 학교 정리나 소조활동을 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픈 경우, 또는 놀려고 학교에 안나가고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석을 하는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욕을 먹든가 아니면 교실청소를 몇 일간 하고 그립니다.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시험을 봅니다. 교과서는 선생이 쓰던 교과서를 쓰는 경우가 많고 프린터로 복사한 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당연히 중요하죠. 앞날에(앞으로) 잘살기 위해서는 대학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하여 중퇴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식량사정으로 학교에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북한의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거나 하는데 외국어학원, 1고등중학교, 예술학원 등의 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등중학교 졸업해도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없는 경우는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고등중학교에서도 대학에 가는 사람이 몇 명은 있습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가정에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릴 때에는 매를 드는데, 크면서는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있죠. 말을 듣지 않은 경우 지시봉라든가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북한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많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에게 배우기 싫은 과목 혁명력사 1, 2, 3은 폐지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한국을 찾아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잘살기 위해 왔습니다.

F.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남한의 청소년들 중 북한을 지지하는(좋아하는) 청소년은 괜찮겠지 만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은 거리를 두고 교류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관련 내용을 서로 배우고 협력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컴퓨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 피면접자 : 신○○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입쌀(흰쌀)과 강냉이 쌀을 섞어서 먹고, 저녁 한끼는 국수를 먹기 때문에 배고프지는 않았습니다. 배급은 한달에 절반(보름치)의 배급을 주었습니다. 배급소에 들어오면 오는 대로 배급을 주었습니다.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아 배급을 팔리면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훔쳐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면 보안서로 데리고가서 노동단련대(노동을 강제로 시키는 기관)나 구리장에 갇혀 있다가 나옵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옷은 한해에 2-3벌 사 입습니다. 소토지(개인경작토지)에서 농사나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서 옷을 삽니다. 대부분 옷이 떨어질 때 까지 1년 정도 입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면 기워서 입습니다.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을 돈으로 사야 합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도 물과 전기사정은 어떤가요?

- ▶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 한 동에 4세대가 살았고 방 2개를 우리식구가 사용합니다. 전에는 집이 모자라기도 했었지만 중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요즘은 집이 그전처럼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국가에서 집을 주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업소나 협동농장 등에서 집을 자체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키는 작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크지 못해서 작은 것 같습니다. 몸무게도 남한 애들보다 못 먹기 때문에 적습니다. 영양을 생각하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무조건 먹습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감기정도나 앓았고 특별한 병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약은 자체로 구입하고 그 약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약을 사지 못합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학교가 가까워서 걸어 다녔고 등교할 때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독보라고 하여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농촌 동원하여 일을 합니다. 모내기, 풀뽑기 등의 일을 합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결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일이 있거나 소토지(개인이 경작하는 토지)의 논밭 일을 할 때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니다. 결석을 하면 학급 교실의 뒤에 세워 놓거나 물질적 제재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새 교과서를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북한의 학교에서 공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1고등학교를 갑니다. 사는 곳 근처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곤란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일반 고등중학교에서 대학을 간다면 기껏해야 무산광산 공업대학을 갑니다. 나머지는 군대나 직장에 무리배치를 받기도 합니다. 1고등학교에서만 대학을 많이 갑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말 안들으면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학교를 결석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지시봉으로 때리기도 하고, 벌을 서기도 합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학교 다니면서 잡초가 많은 농장에 가서 풀뽑기 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다. 날씨는 더운데 풀뽑기는 하기 싫은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하는 생활총화도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여 총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어머니와 더 이상은 떨어지기 싫어서 탈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혼자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고.....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교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살고 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교류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애들 자존심이 강합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 특별히 지원해 주어야 할 물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녹음기 같은 물건을 주면 좋아 할 것입니다.

◎ 피면접자 : 안○○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 강냉이밥과 강냉이 국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급을 못 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산에서 나무도 해서 팔고 약초도 캐서 팔아 식량을 구합니다. 장마당에서 훔쳐 먹는 경우는

많습니다. 흠치다 걸리면 보안원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가끔은 농장에 가서 먹을 것을 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토지(개인경작토지)는 지켜야 합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 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옷은 구입해서 입는데 돈이 없어 자주 사서 입지 못하고 한번 사면 1-2년 다 떨어질 때까지 입습니다. 입는 것도 문제지만 양말도 다 구멍이 나서 기워 가지고 신습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돗 물과 전기사정은 어떤가요?

- ▶ 땅 집이었는데 두 세대가 살았습니다. 나무를 해서 불을 때어 난방을 합니다. 전기는 잘 들어오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일요일 같은 때는 나무 하러 산에 갑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잘 먹지 못하고 일을 세게 하니까(힘들게 하니까) 키가 작고 몸무게가 작습니다. 남한 청소년보다 더 약합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키가 잘 크지 않고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니니까 적습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감기정도 걸렸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약이 없습니다. 약은 자체로 삼니다. 돈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못하고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못하고 누워서 지내기도 합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학교생활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내용의 책을 읽어 주는 독보가 끝나면 오전 수업이 있고 점심은 집에가서 먹고, 오후 수업을 합니다.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김매기, 모내기 등의 일입니다. 또한 소래에다 똥물을 가져가 밭에 뿌리기도 합니다. 거름이라고 뿌립니다. 분조장이 몇 번 가져왔는지 점검을 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결석은 아프거나 먹을 것이 없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씩 벌을 서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졸업하면 군대에도 가고 사회에서 직장을 배치 받아가지고 일을 합니다. 대학교를 가자면 돈이 많아야 하고,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집에서는 잘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면 교실에서 때리는 일이 많습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머리털을 중앙으로 길게 한 줄로 깎아 놓기도 합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학교 다니다가 여름과 가을에 농장에 나가서 김매기, 풀뽑기 등과 가을걷이 하는 것이 힘들어 하기 싫지만 해야 합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집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했습니다.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북한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 도와주면 좋겠지만 농촌에 있는 북한 청소년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피면접자 : 안○○1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 강냉이밥과 강냉이 국수를 먹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생일날이나 입쌀(흰쌀)밥을 먹을 수 있고 더 이상은 먹기 힘듭니다. 배급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96년부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경우 장사를 하기 위해 산에 다니면서 나무도 하고 약초도 캐서 팔아서 식량을 구해서 먹고 살기도 하나,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채소나 풀을 먹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공부할 나이인데도 할 수없이 학교도 못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먹을 것 때문에 12살 때부터 먹고사는 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정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갈라져 사는 것이 많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배급도 주지 않으므로 할 수없이 훔쳐서 먹고 살기도 합니다. 큰 물건을 훔치면 교화소까지 가기도 합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아버지가 기술이 있어서 버는 돈으로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던 옷을 계속 6개월이고 1년이고 입습니다. 옷은 하나만 맨날 입고 있어서 잘 닳아지고 떨어져 오래 못 입습니다. 떨어지면 귀어 입습니다. 겨울에 춥지만 덮을 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말은 앞 발가락 쪽이 다 떨어져 발가락이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다른 천으로 앞을 기워 신습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돗물과 전기사정은 어떤가요?

- ▶ 땅 집의 3칸짜리 집에서도 살아 보았고 나중에는 아파트에서 살아 보기도 했습니다. 위생실은 밖에 있습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먹지 못하거나 일을 힘들게 하여 남한 청소년들 보다 키가 작습니다. 먹지 못해 몸무게도 적게 나갑니다. 배만 부르면 됩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간염이라든가 폐병으로 사람들이 병들어 앓는데도 약이 없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도 약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장마당에서 구입하여 약을 사서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도 그저 누워 있게 됩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독보를 하고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수업시간은 45분이고 쉬는 시간은 15분입니다. 오후에는 과외체육을 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소년행진곡 등을 부르며 학교로 등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결심도 작으랴. 내 가슴 벅타이는 소년단맹세다. 우리들은 김정일장군님 소년단 사로청 수비대(?) 준비되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등교를 합니다. 학교 수업시간에는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하는데 매시간 과목별로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오후 2시까지 학교에 다시 와야 합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생활총화를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하는데 학급반장이 숙제 안한 사람과, 떠든 사람 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주변에 풀을 뽑고, 나무를 심고, 농장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픈 경우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못 먹기 때문에 결석을 많이 합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군대에 가거나 농장이나 탄광 직장에 무리로 집단배치하기도 합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아프게는 때리지 않습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말을 듣지 않으면 선생님이 욕도 하기도 하고, 지시봉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인권이라는 말은 남한에 와서 처음 듣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 하지 못합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배고프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북한을 탈북하였습니다.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모르겠습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 연필이나 공책도 없으니 도와주면 좋겠지만.....

◎ 피면접자 : 윤○○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 저는 부모가 없어서 동생과 고모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고모도 고모부는 돌아가시고 혼자서 아이 다 셋명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강냉이 죽을 먹었는데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은 명절에 나왔는데 5명이 입쌀 2키로그램, 강냉이 1키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른 사람집으로 먹을 것을 훔치러 갔다가 잡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써거지게(죽도록) 때려 놓은 일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가고파 훔쳐 먹는 경우는 특히 장마당에서 많은데 장마당에서 먹을 것을 사서 손에 들고 먹고 있으면 뒤에서 사람들이 와서 채(뉘아채먹는다)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경우 잘 산다 하는 집에 가서 꾸어서 먹는데 그 돈을 제대로 못 갚으면 리자돈이 붙고 그래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오빠가 배를 타고 돈을 벌어가지고 옷을 사 입었습니다. 대체로 못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얻어 입기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 한번 옷을 구하면 다 떨어질 때까지 1년이구 2년이구 이렇게 입습니다. 떨어지면 기워 입습니다. 학생들은 교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때는 학교를 거의 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고 교복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돗물과 전기사정은 어떤가요?

- ▶ 땅 집에서 살았습니다. 방은 두 칸이고 위생실은 공동위생실을 사용합니다. 전기는 고난의 행군 때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돗물은 우물물에서 길어다 먹었습니다. 수돗물이 나오는 아파트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까지 나옵니다. 땀감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때어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북한에서 17살 때 138센티미터였습니다. 이렇게 키가 적은 이유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먹지 못하고 농사일을 많이 하다보니 키가 작습니다. 몸무게도 영 작습니다. 먹는 것이 있어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북한에서 아픈 경험은 없었지만 아픈 사람은 다 자기돈 가지고 약을 사먹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약도 제대로 못 사먹습니다. 그래서 병들어도 그냥 누워있고 그러니까.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북한에서 학교는 수업하기 전에 독보시간(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선전 책자를 읽는 시간)이 있고, 오전수업이 12시에 끝나고 점심시간이 2시까지이고, 오후 수업이 2시부터 4-5시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농장 일을 합니다. 농장일이 끝나면 5-6시에 집에 갑니다. 독보는 7시 30분에 학생들이 다 와 있으면 사상부위원장이 나가서 15분에서 20분정도 독보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활동과 관

련하여 중요한 구절을 읽어 주고 그립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는 농장일은 모내기, 배추심기, 김매기, 강냉이 심기 등 농사일은 다 합니다. 이러한 농장일은 거의 매일 같이 나갑니다. 교과서는 오빠 언니들이 다 쓰고 난 것을 그 밑의 동생들이 받아 가지고 수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과서가 없어서 선생님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 선생님이 불러 주고 칠판에 써주고 그렇게 수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석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다에 나가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어머니 심부름으로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결석하면 선생님이 비판서 쓰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다른 아이들은 다 앉아서 수업을 하는 데 그 앞에서 노래(보란 듯이) 부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또 파지(종이수집), 파철(쇠모우기), 파동(동모우기), 파비닐(비닐모우기)을 가져오라고 하여 다른 집에서 훔쳐서라도 내라고 합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군대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탄광에 배치되든가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 대학에 진학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부가 중요하다고 매일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아이들이 공부 잘해도 돈이 없다고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다. 뺨 있고 돈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조금 못해도 대학에 보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우리 같은 애들은 공부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한 후 사망하여 장사를 하느라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장사해서 동생들을 먹이고 그러느라고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집 살림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녀 너무 많이 못 배워서 그래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생활이 어려워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면 우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여 나중에는 때리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많이 아프게 때렸다는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학교를 안나오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다른 애들을 때린다든지 하면 선생님이 때려 놓습니다.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때리지 않습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북한에 있을 때 부모님이 없어 고모집에 가서 생활을 하다보니 너무 바쁘다(힘들고 어렵다) 보니 군대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고모집에서 부모도 없이 살다보니 슬플 때가 많았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어렵고 하니 저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마음 먹다가 중국으로 간 후 이렇게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요....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체육이나 공부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 교복이 없어 도와주면 좋기는 하겠는데 북한 애들이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 피면접자 : 강○○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 장마당에서 구해 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훔쳐서 먹기도 합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고난의 행군 때는 2-3일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다. 2003년부터는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입쌀 밥 먹고, 못사는 사람들은 채소를 넣은 죽을 먹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더 훔쳐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살려고 그러합니다. 2003년 이후에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자리 잡아 괜찮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식사는 강냉이 죽이나 밥을 먹기도 하고 어찌다가 입쌀밥을 먹기도 합니다. 배급은 한달에 그전 배급의 절반씩 줍니다. 잘사는 사람은 광밥(도시락)을 입쌀밥을 싸오기도 하지만 못사는 사람은 강냉이 밥을 싸잡니다. 학교 가까이 사는 애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장마당에서 돈을 버는 경우 잠을 잘 때 배에다 돈을 차고 잡니다. 자는 동안에 돈을 훔쳐 가기 때문입니다. 살벌합니다. 도둑이 많은 곳도 있고, 온성같이 그리 도둑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농장 같은 데를 무리도 때지어 다니면서 훔쳐 먹기도 합니다. 백살구를 4월에 따서 먹습니다. 겨우

이제 살구 모양을 해서 콩알 만한 것을 따서 먹는다.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그 살구를 놔두면 다른 사람이 따먹어 버리니까 내가 먼저 따먹습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줍니다. 인민학교 때 2년에 한번 정도, 중학교 때 2번 정도 줍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천으로 옷을 만듭니다. 천은 중국에서 가져다 조선에서 비싸게 팝니다. 중국에서는 입지도 않는 싸구려 천이지만 북한에서는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니다. 개인집의 옷 만드는 곳에 맡겨 돈을 주고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도 물과 전기사정은 어떤가요?

- ▶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명에서 같이 생활했고, 고난의 행군 때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98년 99년 이런 때는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전기나 수도물 사정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기가 나가고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때기도 한다. 땀감으로 나무를 많이 해버려 산은 민둥산으로 나무가 없습니다. 소탄으로 난방을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직장에서 배급을 했지만 나중에는 돈을 주고 샀고, 돈이 없으면 소탄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때지 못합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의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상태는?

- ▶ 북한 애들은 키가 작습니다. 농촌동원으로 일을 많이 해서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많이 먹지 못해 몸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남한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아버지가 고난의 행군 때에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달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돈이 없어 약을 사서 먹을 수가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전염병인 것 같았습니다. 한 식구가 걸리면 가족 전체에게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학교생활은 공부보다는 다른 돈벌이가 우선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니까 공부는 뒷전입니다. 학교에 결석을 해도 선생님이 무어라 하지 않습니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해 봐야 성분이 불량하다고 해 대학교도 못갑니다.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농촌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북한학교의 교과서는 작년 2003년부터 장군님의 방침이 떨어 졌다면 교과서가 나왔는데 4원이나 5원의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대학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 간부 애들이나 대학에 갑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대학에 가기도 하지만, 우선 먹고 살기 힘들어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대학졸업 후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직장에 배치 받아서 일합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별로 없었습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숙제를 하지 않으면 5-6번 경고를 하다가 그래도 계속 해 오지 않으면 벌을 세웁니다. 낮은 학년의 앞에다 세워 놓고 인물소개를 합니다. 누구누구 인테 숙제를 몇 번 하지 않았다고.... 어떤 때는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책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지시봉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복도나 운동장으로 내 쫓깁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자유가 없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생활총화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픈 경우도 생깁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거주퇴거를 안해 줘서 못합니다. 교화소에 가면 정말 더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의 안기부 임무를 받았다는(간첩활동) 이유로 교화소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왕따가 있습니다. 모서리 먹는다고 합니다. 모서리 먹은 아이를 때리고, 그 아이의 곱밥(도시락)을 얹어 놓아 못 먹게 하기도 합니다. 또 연필을 가져가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님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모서리 먹는 학생은 키가 작거나 못살거나 하는 아이들입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탈출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만 있는데 어떻게 살 도리가 없었습니다.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교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거리감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원에서 통일캠프를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리집니다. 서로 교류를 한다면 오해가 풀리고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 북한의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지방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평양학생들이나 받을 것 같습니다.

◎ 피면접자 : 이○○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 북한의 식량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배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1996년경 북한경제사정이 최악인 시기를 말함) 때는 배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산에가서 약초인 백출, 둥굴레, 장출 등을 캐거나 따다가 되거리 장사(중간상)에게 한키로에 대략 1,000원씩 팔아서 장마당에 가서 강냉이나 입쌀(흰쌀)을 사서 식량을 합니다. 입쌀은 한키로에 400원인가 했습니다. 한키로면 형과 둘이서 2일정도(6끼)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니다. 그냥 쌀밥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시래기나 채소 등을 같이 넣어 죽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는 죽을 가져 갈 수 없어 팍밥(도시락)을 싸 가야 하는데 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한끼만 먹거나 먹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토지(개인이 농사를 지어 개인소유를 할 수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는 강냉이, 고추 감자 할 것 없이 닥치는 데로 훔치기도 합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옷은 어머니가 사준 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수예를 하여 장마당에 가서 팔아 옷을 사주었습니다. 옷살 돈이 없어 한번 사면 다 떨어질 때 까지 입습니다. 떨어지면 몇 번이고 기워 입습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 ▶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파트에는 방이 2개있었습니다. 아파트 아궁이에 탄을 태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탄을 탄광에서 훔쳐서 방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없는 경우에는 겨울에도 추운 방에서 자기도 합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내가 북한에서 키는 139센티미터였습니다. 지금은 151센티미터입니다. 1년 만에 12센티미터의 키가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고 학교의 난로에 땔감인 나무를 해 와야 합니다. 이때 너무 무거운 나무를 많이 지고 다니니 키가 안큽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몸무게도 적습니다. 영양을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
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감기 같은 것은 턱턱 털고 일어난다. 병원에서 정 아프면 약을 주
기도 합니다. 그러나 못쓰는 약(좋지 않은 약)을 주기 때문에 병
원에서 주는 약은 먹지 않고 장마당에 가서 돈을 주고 구입합니
다. 장티프스 등 전염병이 많아 한 사람이 걸리면 다른 식구들도
다 걸립니다. 링게르도 장마당(암시장)에서 구입하여 병원에 가져
가면 주사를 놓아 줍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
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학교는 다니다 말다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산에 가서 약초를
캐어 장마당에 가서 팔았습니다. 당연히 결석을 하고 이 때는 학
교의 같은 반 동무들이 데리러 오지만 우리 살림이 어려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돌아갑니다. 학교에 아무말 하지 않고
가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이 때리기도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활이 바쁜 경우(어려운 경우) 몇 일 결석해도 된다고
시간을 때줍니다(결석할 수 있는 날짜를 허락해 준다). 학교에 가
서는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농촌돕기를 합니다. 김매기,
풀뽑기 등을 늦게는 저녁 10시까지도 하는 때가 있다. 학교에서
는 파종이, 파철, 파비닐, 파동 등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집에 가
봐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훔쳐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니네 훔쳐 와도 되는데 들키지 말고 학교이름 팔
지 말라고 합니다. 파지나 파철, 파비닐을 가져가면 분단위장(학교
반장)이 이름과 가져 온 내용을 적어 선생님에게 드린다. 가져오
지 못한 학생은 야단맞기도 합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고등중학교를 졸업해도 뺨이 있어야(당간부의 자녀 등) 가지 우리 같은 것은 꿈도 못꿉니다. 학교 졸업하고 군대나 갔다 와서 직장에 배치 받으면 됩니다. 공부요. 조선에서 먹고 사느라고 언제 공부할 새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배부터 불러야 공부를 하죠.....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욕도 하고 가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는 살기 힘들어서 부모님들도 싸우는 때가 많아 졌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중국으로 먼저 가고 아버지는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기도 합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때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 말입니다. 지시봉으로 또는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벌을 주기도 하구요. 그러나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 잘되라고 하는 일입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여행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꽃제비들입니다. 꽃제비들은 열차 밑의 쇠통에 들어가 숨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안전원들도 꽃제비들은 도둑질을 한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에만 잡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잡지 않습니다. 잡아봐야 귀찮으니까요..... 북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눈치를 보아야 한다. 김정일이 나쁘다. 자본주의가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순식간에 와서 데려간다. 잡혀가면 22호(일생동안 못 나오는 감옥)에 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 22호에 가면 생체화학무기 실험용으로 쓴다고 말하는 사람

도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고자질을 한다. 안전원(경찰)에게 고자질을 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잡혀가면 봐주기도 하니까... 생활충화가 힘들다. 학교에서 토요일에는 생활충화를 하게 되는데 한사람이 나가서 자기의 잘못을 말하고(예를 들면 군수물자를 위해 토끼털을 가져 오라해서 못가져 왔다면 그에 대한 잘못을 말한다), 앞으로는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한 다음 다른 한 사람을 지적해 잘못을 말하고, 지적당한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식입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어머니가 탈출해서 나도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힘들어서 중국으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래서 잘살기 위해 어머니가 탈북을 했고 나도 따라 탈북을 했습니다.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교류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애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남한의 청소년들은 지식이 강해서 서로 어울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조선에도 야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뽑힌 애들만 갑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 학용품이 좋을 것입니다.

◎ 피면접자 : 임○○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 소토지(개인이 경작하는 토지)를 해서 먹고 살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1000평 정도에 두부콩, 강냉이, 열콩을 심어 먹기도 합니다. 식사는 강냉이 밥에 감자 된장찌개에 김치, 마늘 등과 국수 500그램을 4명에서 저녁에 먹습니다. 학교갈 때 껍밥(도시락)은 강냉이 밥에 반찬은 김치볶음, 된장을 가공해서 고추장을 만들어서 싸갑니다. 껍밥을 못 싸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싸온 밥을 같이 조금씩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먹을 것이 없어 병들거나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모두 자기절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굶어 죽거나 병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농장에서 한해 농사 지어 분조별로 분배를 합니다. 이때 분조별로 분배가 잘못 되면 의견을 말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장마당에서는 가끔 아이들이 월병을 사서 먹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덩쳐 훔쳐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훔치다가 들키면 그냥 막 때려 놓습니다. 식량을 훔치다가 들키면 훔친 것은 되돌려 주고 2배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저희는 소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옷 장사꾼들이 오면 농사지는 강냉이로 삽니다. 보통 속 내벌(내의)은 강냉이 한 12키로그램 정도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을 사서 옷을 만들어서 입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 옷을 입지 못하면 학교에서 준 교복을 입거나 있는 옷을 아껴서 입습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도 물과 전기사정은 어떨까요?

- ▶ 땅집 한 집에 두 세대가 살았고 우리 집은 방은 3칸에 두세대 6명이 살았습니다. 땅 집에는 수도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어 길어다 먹고 밥도 해 먹습니다. 소토지 하는 사람들도 그 우물물을 많이 떠다 마십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남한학생들보다 잘 못 먹어서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갑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없었습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사로청위원장이 하루에 30분씩 수업시작 전에 독보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일성의 수기 등을 읽어 줍니다. 이 독보에 참가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합니다. 나는 집이 멀어서 독보에 한달에 한 두 번 밖에 참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멀었기 때문에 특별히 벌을 받는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농장에 가사 담배따기, 김매기 등의 농장일을 3시간 정도 합니다. 저는 집이 멀어서 눈오고 비오는 날은 결석을 자주했습니다. 사실 집이 멀어서 학교 가기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교과서는 작년 2003년 전까지는 교과서가 한 사람당 3과목 정도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2003년부터는 방침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과목에 대한 교과서를 지급해 줍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남자들은 주로 군대를 가고, 여자들은 기능공학교를 가지 않으면 농장 일을 합니다. 대학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당성이 좋은 애들만 갑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없습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학교에서 폭력이나 벌은 말을 듣지 않으면 있습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인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여행이나 이사 가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삼촌이 7년 만에 소식이 왔었는데 중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몇일 동안 고민하다가 삼촌 만나러 중국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다녀와서 중국에 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안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데리고 가겠다고 하여 할 수없이 탈북하였습니다.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교류는 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평양의 애들이나 받을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애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면접자 : 최○○

A. 북한청소년의 식량난에 따른 위기실태

A-1. 북한의 식량사정은 어떠한가요? 식량은 어디서 구하며,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나요?

▶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먹을 걱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적도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입쌀과 잡곡이 8대2로 배급을 합니다. 대부분 생활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명절공급 같은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타겠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타게 되면 상품이 없어서 찢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꽃제비들이 장마당을 돌아다녔지만 지금은 보기 힘듭니다. 먹을 것을 훔치다가 들키면 보안서에 가서 취급(조사)받습니다.

A-2. 북한에서 옷은 어떻게 구하며 어떤 옷을 얼마만큼 입나요? 의생활과 관련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 북한에서 옷은 상점이나 시장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신발도 사고, 운동복 같은 것은 4-5개월에 한번씩 삽니다.

A-3. 북한의 주택은 어떤 집이었고 어떻게 생활하나요? 주택의 수도 물과 전기사정은 어떨까요?

- ▶ 아파트 5층짜리 건물이고 방은 2개였고, 위생실(화장실)이 안에 있습니다. 평양은 전기도 지방보다 잘 들어옵니다.

B. 북한청소년 보건실태

B-1. 북한에서 키는? 남한 청소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키가 작다면 그 이유는? 북한에서 몸무게와 영양실태는?

- ▶ 외국어 학원 등과 같은 특수교육기관 같은 학교는 보통 신체검사를 해서 입학하기 때문에 키도 크고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중학교 학생들은 키가 대부분 작습니다. 보통신체는 약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B-2. 북한에서 병을 앓거나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병이었고, 치료는 어떻게 했나요?

- ▶ 별로 크게 앓아 본적이 없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도 일반진료소나 구역병원 같은 데서는 약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명만 대주고(알려주고) 약품은 자체로 장마당에서 구입합니다.

C. 북한청소년 교육실태

C-1. 북한의 학교생활은? 수업은? 수업 끝나고 하는 일은?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는? 교과서는?

- ▶ 평양에서는 궤도전차를 타고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사상부위원장이 독보를 하고 초급당비서가 출석을 점검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체학습을 하거나 체육을 합니다. 외국어학원은 물리, 화학, 수학, 외국어, 생물 등을 배웁니다. 외국어학원도 아프거나 집안에 대사가 있을 때는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결석을 하면 비판서를 쓰고 생활총화 및 분기동맹생활총화에서 총화를 하게 됩니다. 교과서는 새것은 별로 없고 선배들이 보던 것

을 이용합니다. 교과서가 모자라서 한반에 몇 권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다른 반에 가서 빌려와서 보기도 하지만 잘 빌려 주지 않기도 한다. 공부가 중요합니다. 대학에 갈 때 시험을 쳐야 하니까요. 그러나 특수교육기관(외국어학원, 평양제1중학교, 동평양1고 등)을 제외한 일반 중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일반 고등중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은 많아야 1-2명입니다. 외국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C-3. 고등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 하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요?

- ▶ 특수교육기관(외국어학원 등) 학생들은 대학을 진학하지만 일반중학교 학생은 대학진학이 어렵습니다. 일반고등중학교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가거나 직장에 집단배치를 받기도 합니다.

D. 북한청소년의 인권 실태

D-1. 가정에서의 폭력이 있나요?

- ▶ 공부 안하고 날나리 칠 때(학교가지 않고 당구장 등에 가는 경우로 땡땡이) 때립니다.

D-2.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체벌은?

- ▶ 별로 맞아 본적이 없습니다.

D-3.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가요? 여행, 이사, 신체의 자유,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자유 등등?

- ▶ 집단체조(몇 만명 이상이 하는 체조) 때문에 아침에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6개월 이상 동원하므로 공부를 못합니다. 방학 때 보충을 하기는 하지만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사실 하기 싫은 집단체조이지만 해야 합니다.

E. 북한을 탈출한 이유

E-1.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 ▶ 자유를 찾아 왔습니다.

F. 남북 청소년 교류

F-1. 북한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이 서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 ▶ 인민학교 때 용악산 야영, 군사야영(3박 4일)해보았는데 이때는 모범학급학생들만 참가를 합니다. 야영을 가면 혁명사적지와 산업시설, 고적지 견학, 자연관찰, 예술공연 등이 있어 좋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이 야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F-2. 북한에 있는 청소년에게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 ▶ 컴퓨터나 교복 학용품 등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만 나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 연구 요약 】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의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장기적인 식량부족으로 영양 결핍현상이 표면화되면서 영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성장부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청소년의 평균 신장은 남자 155cm, 여자 152cm로 한국에 비해 10cm 이상이 작으며 몸무게도 10kg 이상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동사망률은 1990년에 9.2명이었는데 1998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고,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은 1990년에 1,000명당 30명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5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부터 정부 및 국내외 NGO에 의하여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지원 범위와 물량 또한 확대되고 있다. 과거처럼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를 정치·군사적 대결 구도 속에서 조망할 때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으나, 인도주의적 측면과 통일과정 및 이후의 사회통합 단계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단순한 구호물자 지원보다는 직간접적 형태의 인적, 물질적 교류를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간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의 경제적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적대적 의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의 문제가 북한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결국,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의 교류·협력의 문제는 장기적 구상을 갖는 통일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4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 하였다. 둘째,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진단하였다. 셋째,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태와 그간에 추진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및 동서독의 교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 하였다.

2) 연구 방법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관련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를 사례 연구 하였다. 또한,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하였다. 그리고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NGO의 구호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 투명성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을 방문 조사 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북한청소년 및 주민 등의 인도적 위기 실태와 관련한 각종 통계 수치는 정확도에서 매우 취약하다. 둘째, 이 연구의 III장에서 사용한 「하나원」 소재 북한이탈 청소년 20명 대상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통한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를 사례 연구한 결과,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성이 나타나 부분적으로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II.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인도적 지원의 이론적 기초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중립성·형평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일반적인 국제지원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국제원조체계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정부가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의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민간의 요청을 반영하여 민간 대북지원 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대북지원이 보다 활성화 된 것도 김대중 정부의 수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98년 3월 18일 남북 주민간 접촉증대 및 민간단체의 희망을 고려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민간의 대북지원 참여 및 모금활동 확대 허용, 이산가족문제 해결 계기 마련을 위한 남북적십자간 지원구도 유지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진전에 따른 대북지원 창구 확대방안 강구를 포함한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 21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남북협력기금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한해 동안 한국JTS 등 8개 단체의 9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결정되었다. 분야별로는 농업개발분야,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지원 사업 등이다. 2001년도에는 사업분야가 보다 다양화되어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의 씨감자 지원사업,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영양지원사업, 조국평화

통일불교협회의 금강국수공장 및 생필품 지원, 평화의 숲 양묘장 지원사업 등 농업협력사업, 보건의료사업, 일반구호사업, 환경지원 사업 등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바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액은 2001년 12월 기준 30억 3천만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대북지원의 증가 추이에 따라 민간단체 관계자 방북도 확대되어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2.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의 상관성

대북지원 초기에는 북한주민들이 외부지원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원물자에 대한 지원국 및 지원단체의 표시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주민들도 지원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북한주민들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 즉,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특정국가나 단체에 대한 적대의식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인도적 수요에 따라 목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출된다는 정보가 북한 내부에 확산될 경우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정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중앙배급제를 통한 지원물자의 배분을 공식화하여 왔다. 따라서 실제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들이 집단적으로 집중지원을 요구하고, 현행 지원체제에 반발을 표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경제난으로 인해 생필품 조달과 생계유지를 위한 개인부업과 물물교환은 물론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행위가 확산되면서, 장마당이 정보유통의 중요 매개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식량 등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주민

들의 이동이 급증하면서 지원사실을 포함한 외부정보유입, 서방세계와 남한사회 발전상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물품의 품질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위와 같은 비교의식이 형성되게 되었고, 대남 적대감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최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변화 특성

우리는 현 시점에서 남북 청소년교류가 지향해야 할 우선 순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남북 청소년교류의 궁극적 목적을 단순히 만나는 역사적 사건에 둘 것인지, 만남을 통하여 통일과정에서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주도적 세력을 만들거나 교류를 통하여 북한청소년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단계에 대비할 것인지 등의 목표를 다시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종된 채 그동안 청소년분야의 교류를 지나치게 당위적 측면에서 고집해온 결과 10여 년 전에 제안한 남북 청소년교류 방법이 현재까지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교류의 목적을 무조건 만나게 하자는 당위적 차원으로 이해할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기존의 남한 청소년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모습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로 학업 부적응 문제는 단순히 학력 차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또래집단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부적응 및 상이한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연동된 결과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의 경험으로

이후의 태도가 결정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전혀 만나지 못한 남북 청소년교류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부른 만남, 특히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만남의 경험이 통일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청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Ⅲ. 북한청소년의 인도적 위기 실태 분석

북한의 식량난은 어린이에게 그 영향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린이들의 건강문제이다. 북한 어린이들은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식량 섭취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주사(백신), 치료의약품, 영양제의 부족 현상과 위생상태의 불량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그 결과 북한청소년들은 오랜 기간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뿌리 등 대용식품의 섭취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많고,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발육부진 및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여 급증하는 전염성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비위생적인 식수와 공공보건체계의 붕괴, 의약품의 부족,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등 기반시설의 불량은 전염성 질환의 증가를 가속화시켜 결핵 및 간염 등의 유행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영양부족과 예방접종 미 실시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1990년 이후 자체 백신 생산량의 감소, 냉동 유통체계의 미비, 실린지 등 의료소모품의 부족으로 예방접종률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이다.

북한청소년들은 식량난 속에서 생존문제와 함께 교육받을 권리 역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상당부분 교육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며, 굶주림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는 청소년들이 급

속히 증가하고, 교사들 역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자주 결근하면서 학교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벗들의 2001년 조사에서 “북한에서 자녀가 굶주려 학교에 못가는 경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주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5%에 이르렀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교원들도 결근을 하는 상황에서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식량난 이전에 이루어지던 보충수업은 불가능하였고, 정식 수업시간조차 오전 수업만 하고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식량난 이전에는 무상으로 배급받던 교복이나 학용품도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개인의 부담으로 넘겨졌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이나 연필 등 학용품을 살 수는 없었고 결국 아이들의 결석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종이 부족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교사조차 교과서가 없어 서로 돌려 보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IV.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태 및 교류·협력 사례

1.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영향력 분석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의 특징은 다른 위기 지역과는 달리 북한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큰물피해 대책위원회 등 공식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총괄 조정하고, 북한의 중앙배급제를 통해 분배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적 지원이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이 아닌 특정 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중앙배급제를 대신하는 등 북한 권력체제의 정치적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도적 지원활동의 기본원칙(지원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분배의 투명성 등)에 제

약을 두면서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봉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원에 대한 배급의 투명성 문제는 실제 전체적인 식량의 수급량보다는 청소년을 비롯한 특정 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늘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왜냐하면 식량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특정계층의 식량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이 곤란하다는 것이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 분배가 특정한 계층에 의해 매집되었을 경우, 절대량의 식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청소년층을 비롯한 일부 계층은 기근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2. 국내외 NGO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동향

국제 사회의 대북지원은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유엔은 1997년 10월 북한의 상황이 단순한 자연재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 하에 북한을 복합위기상황(Complex Emergencies)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999년 2월 유엔이 채택한 Three Track Approach는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방향이 되어 왔다. 즉 북한의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단순 구호는 문제해결을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생존을 연장시키는 의미라는 점에서 복구와 개발사업<유엔개발계획의 AREP(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을 병행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역량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대북지원 사업단체 중에서 어린이 및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 등이다. 이들의 지원활동은 35만 명 이상의 유아들의 기본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소학교와 고아원 어린이 65만 명에 대한 교과서 및 기초교재 지원, 그리고 1만 5천 개의 탁아소를 대상으로 60만 명

의 어린이에게 교재를 공급하여 왔다.

또한, 북한정부와 유니세프는 2004-2006년에 걸쳐 3년 동안 진행될 새로운 협력사업에 합의하였다. 그 대표적 지원 사업은 조기아동 발달, 어린이 질병 치료, 예방접종 강화, 모성과 어린이 건강 개선, 식수 공급 확대와 위생적인 화장실 설치, 교육의 질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의 질 개선 내용에는 교실 교재나 장비 구비뿐만 아니라 생활기술훈련, 교수방법의 개선, 에이즈 예방법과 어린이 권리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125만 명을 위해 기본적인 학습도구와 교과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2004년도 유니세프의 북한 구호 총예산 규모는 12,766,960달러이며, 사업의 주요 대상은 5세 미만의 어린이 2백만 명 및 임산부 48만 명과 수유부 50만 명을 합한 여성, 어린이 1천5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긴급구호 차원에서 시작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대북지원의 초기에는 주로 식량, 의약품 등 긴급구호적인 물품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품 지원 이외에도 농업분야, 축산분야, 보건의료분야 등 지속적인 개발 지원 형태로 지원방식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특히, 유니세프의 지원 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남한 민간단체의 북한어린이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유니세프의 사례에 따르면 어린이 지원 사업은 식량, 의약품 등 긴급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및 위생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시설 구축이나 어머니 관련시설과 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민간지원단체가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교육분야의 지원 가능성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의 모니터링 방북을 통해 북한의 소학교, 중학교 등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확인하면서 교육기자재 및 시설보수 지원 등이 시급하다

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후에 성금운동을 전개하여 교과서용 종이보내기와 교구, 교육용 컴퓨터 보내기를 시작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교육 교류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3.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실태

그동안 추진된 남북 청소년교류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분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② 국내의 청소년관련 NGO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③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 ④ 청소년교류 파트너로서의 북한내 민간단체가 부재 한다. ⑤ 한총련 등과 같은 일부 불법·이적단체들의 불법적·비공식적 접촉이 대 국민 인식을 악화시켜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인식 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⑥ 지금까지 남북이 제의한 청소년간의 접촉과 교류가 항상 정치적인 색채를 띤 정치적 대결양상을 보이는, 소극적·미시적인 제안들로서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⑦ 남북 청소년교류의 주체인 정부와 청소년, 북한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⑧ 제3국을 통한 제한적·간헐적인 접촉이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 환경을 위축하고 있다; 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남북 청소년 교류와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해야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둘째, 남북 교류는 단기성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민간단체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넷째, 교류와 협력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등이다.

4. 서독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과 청소년 교류·협력 사례

동독은 자국 청소년들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극히 제한하였다. 서독을 포함한 서방으로의 여행은 물론 사회주의 형제국가였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베트남, 몽골, 북한 등으로의 여행에도 많은 제한을 두었다. 청소년들은 심지어 인접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로의 여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외화부족,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의 우려 등으로 인해 동독은 ‘비사회주의 경제권’(nichtsozialistische Wirtschaftsgebiet, 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이외 사회주의 형제국들도 포함)으로의 여행도 고위관리나 특수계층에만 국한시켰다.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해외여행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동독이 서독 측의 청소년 교류 제의에 마지못해 응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에 수반되는 서독으로부터의 재정적, 경제적인 반대급부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 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서독여행을 체제명종을 조건으로 한 일종의 포상으로 체제순응을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방문 이후 동독청소년들의 사상적 오염을 우려하여 여러 형태의 차단조치를 취하였다. FDJ는 국가의 통제 하에 양독간 청소년들의 만남을 감시하였고, 동독은 2개 민족, 2개 국가론에 의거하여 철저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동독청소년을 서독체제에 접촉케 함으로써 동서독 분리화를 가속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서독청소년에게 동독여행과 동독청소년과의 교류는 동독에 존재하는 독재체제와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는 생생한 정치교육이 되었다. 그러나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을 체험하고 실망했던 서독청소년들은 서독정부가 양독 관계를 심화시키고 민족적 공통의식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양독간 청소년 교류를 추진했던 의도와는 달리 동독과의 상호 이질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또한 동독도 정치적인 목적, 즉 청소년단체 핵심간부에게 서독에서의 현실체험을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요소를 깊이 체감시키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동독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양독간 청소년교류가 양독일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나타나

긴 하였지만, 서독의 사회체제를 체험할 계기를 가졌던, 특히 서독 종교단체의 대동독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양독 신교교회간 청소년 교류를 통해 서독사회를 접할 수 있었던 동독 청소년들이 훗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중심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남북 청소년교류가 함축할 수 있는 의미를 보여준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우리사회는 청소년층이 통일주역이므로 현재부터의 교류·협력을 통한 이질적 요소 최소화에 강조점을 두는 당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반면, 북한은 청소년들이 자본주의적 환경을 접할 경우 그들의 이념적·문화적 이탈을 우려하여 청소년 교류를 회피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 교류와 협력을 바라다보는 남북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상충된 것이다. 그 결과 남북 청소년 교류는 대학생 중심의 불법적·비제도적 교류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며, 청소년 교류는 현재까지도 북한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구도 속에 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이라는 설정은 위에서 지적한 남북한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북한 사회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국제사회가 확인한 사실로 북한정부 역시 이 문제의 공개 여부를 꺼려하는 단계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구호지원 물품의 군사용도 전용 및 분배 투명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향후에도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당위적 차원에서 남북 청소년의 교류와

협력 문제를 풀어가던 방식과 다른,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실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청소년에 대한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은 상호간의 접촉과 교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류로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적 노력이 미래적 성과를 담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직접적 접촉을 통한 인적 교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로 북한교예단 및 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남한 가요 및 연예인들의 북한내 한류 열풍은 직접적 교류 못지않게 간접적 교류의 성과를 충분히 확인해 주는 사례들이다. 교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반드시 직접적 대면 접촉만을 중시하는 절차적 정당성보다 얼마만큼의 결과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 전략은 교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국내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 라는 설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제도화·규범화가 선행되어야 안정적, 지속적 교류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교류의 콘텐츠를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제언

1)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기반 조성

- (1)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접근 방법의 전환
- (2) 남북 청소년 교류의 단계별, 우선순위별 아젠다 수립
- (3) 남북 청소년 교류 관련 정보, 자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4) 방송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청소년의 일상 및 가치관 변화 유도
- (5) 남북 청소년관련 도서교류 및 도서합작 출간 확대
- (6) 사이버 청소년 교류 시스템 구축

2) 남북 교류·협력관련 법령 개선

- (1)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 운영 규정’ 제정
- (2) ‘접촉’과 ‘방문’ 규정의 개선

3) 인도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 방안

- (1) 북한청소년의 인권실태에 관한 교육 강화
- (2) 청소년의 인도적 지원 참여 기제 개발
- (3) 인도적 지원과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연계 추진
- (4)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 (5) 인도적 지원 허용 품목의 확대
- (6) 청소년관련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 독자 창구 허가
- (7) 구호지원에서 개발구호지원으로의 전환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 확대
- (8) 중국 조선족과의 청소년 교류 확대